

KIPF 재정성과평가 동향과 이슈

| 2021년 겨울(Vol. 8 No. 4) |

목 차

» I. 국가별 재정성과관리 동향

1. 한국

- 제2차 공공조달 제도개선위원회 개최 03
- 국유재산을 활용한 개발사업의 다변화, 광역철도 민자사업 추진 검토 08
- 2022년도 국민참여예산 총 71개 사업, 1,414억원 반영 13
- 2022년 총 89개 부담금 20.5조원 징수 계획, 중소기업 지원,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 20
- 범정부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전환 지원,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실증 시범사업 추진 등 핵심사업평가 결과 2022년도 예산안 반영 22
- 제3차 공공조달 수요발굴위원회 개최 26
- 1·2차 추경 등 3분기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4분기 집행관리 방향 논의 32

2. 미국

- 미국 관리예산처(OMB)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36
- 증거기반 정책: 증거구축계획과 연간평가계획 40
- 증거기반 정책수립: 연방기관들의 증거 구축 역량 강화 45
- 정부 차원의 증거구축계획 53
- 시설자본 기금 제안: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초기자금 조달의 효율성 비교 분석 55
- 정부성과관리: 범부처 우선순위(CAP) 목표수립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및 권고사항 이행 경과 61
- 분할·유사·중복 문제 해결: 정부 효율성 향상 및 재정 절감 66

3. 영국

- 프로그램의 신속한 제공 72
- 2021년 지출검토 75

KIPF 재정성과평가 동향과 이슈

2021년 겨울(Vol. 8 No. 4)

4. 호주

- 공공관리, 성과 및 책임성 뉴스레터 발간 78
- 기업계획 2021-22 85

5. 뉴질랜드

- 성과보고서 및 세출에 대한 연간 성과정보 준비 지침 90

6. 아일랜드

- 2021년 하계경제담화 96
- 2021년 지출검토 보고서 102

7. 프랑스

- 「재정법」(LOLF) 제정, 20년 105
- 「재정법」(LOLF)과 공공재정 개혁에 대한 5가지 질문 108
- 2022년 재정 법안 111
- 재정 법안(Projet de Loi de Finances, 이하 PLF) 2022: 공공재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개혁 114

» II. 재정성과관리 연구 동향

1. 국내연구 동향

- 무상보육정책의 추가출산 제고 효과 분석 119

2. 국외연구 동향

- 통제 수단? 의회와 대통령 성과관리 개혁 비교 124

목 차

» Ⅲ. 국가계약 동향

1. 국가계약 연구 동향

- 지속가능한 채굴 계약에 대한 지침 131



I. 국가별 재정성과관리 동향



CONTENTS

- | | |
|-------|---------|
| 1. 한국 | 5. 뉴질랜드 |
| 2. 미국 | 6. 아일랜드 |
| 3. 영국 | 7. 프랑스 |
| 4. 호주 | |

I . 국가별 재정성과관리 동향

1. 한국

제2차 공공조달 제도개선위원회 개최

- 2021. 8. 11., 기획재정부 -

-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인 '제1차 공공조달 제도개선위원회'를 주재하여,
 - ① 안전관리 강화와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②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방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음

〈제2차 공공조달 제도개선위원회 개요〉

- **일시:** 2021. 8. 11.(수) 14:00~15:00
 - **참석자:** 기획재정부 2차관(위원장), 행안부·중기부 차관, 조달청장, 민간위원 3명
 - **안건:** ①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기재부)
②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방안(기재부, 조달청) 등
- 기획재정부는 계약제도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계약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코로나19 극복과 영세기업 지원, 노동자 안전강화 등 사회적 가치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최근 코로나·폭염 대응 계약업무 처리지침 시달 현황>

- ▶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계약지침(7. 27.)**: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폭염 발생 시 공사 일시정지, 지체상금 면제 등 조치
- ▶ **공사현장 근로자의 코로나19 조기 진단을 위한 계약지침(8.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공공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코로나19 진단비용(PCR 검사비 등) 지원

- 이에 따라 이번 위원회는 공공 발주사업의 안전평가 강화, 중소기업 권익보호 등 현안 대응에 초점을 맞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음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 첫째, 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후속과제와 최근 이슈가 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한 총 14개 과제에 대한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음

* ① 혁신·신산업지원제도, ② 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③ 공정계약 문화 정착

- 동 과제는 기관 등의 건의과제와 정책과제 중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하반기 추진하기로 우선 선정된 과제임

■ **안전관리 강화**

- ① 공공 공사계약에서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입찰참가와 낙찰자 선정이라는 두 단계에서 안전평가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 **【공사계약 절차】** 입찰공고 → (1단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현장설명 → 입찰 → (2단계)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입찰참가 단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부가적으로 신인도 가점으로 평가하던 ‘안전’을 정규 배점으로 전환하고, 우선 공기업 대상 시범사업에 적용하기로 하였음

* 대형공사의 입찰 전 공사수행능력을 검증하여 적격자만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제도

- (낙찰자 결정 단계) 공사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건설안전평가의 점수 폭 확대** 등 변별력을 강화할 계획

*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낙찰제도

** (현행) 사고사망만인율이 업계 평균 이하인 자에게 가점 부여

(개선) 전체 업체에 업계 평균을 기준으로 가·감점을 부여하여 점수 폭 확대

- ② 또한,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불법 하도급 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 원·하도급사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강화

*【대상】(현행) 불법 하도급을 한 자 → (개선) 불법 하도급을 받은 자 추가

【기간】(현행) 4개월~1년 → (개선)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로 연장

- ③ 고 김용균씨 사고(2018. 12.) 이후 특조위 조사 권고내용*을 반영하여, 발전산업에서 실제 투입인력과 집행 임금을 감안한 노무비로 계약하고, 발주기관이 실 집행임금을 점검하여 미집행 시 계약금액 감액 등 조치하기로 함

* 계약상대자가 실제 집행임금보다 계약문서(산출내역서)상 노무비를 과다 책정

→ 발전산업에서 원칙적으로 산출내역서대로 노무비를 집행할 의무를 부여

■ 기업 부담 완화

- ① 공공 공사에서 저가입찰 관행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어 온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처리 기준을 개선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계약대가를 지급하도록 함
 - 동점자 발생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현행 '입찰가격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개선하기로 하고,

* 입찰금액의 상위 20%와 하위 20%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가격

- 간이형 중심제(공사비 100~300억원)에서 우선 시행하고 300억원 이상 공사는 시범사업 (2021년 20건, 2022년 30건) 후, 2023년 1월부터 시행 추진
-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킬 경우, 일부 시공·납품이 완료된 부분은 귀속 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함
- ③ 또한,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지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음

*【현행】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개선】 관계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과도한 지역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등

**【현행】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개선】 부지제공, 보상업무, 인·허가 지연 등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방안】

- 둘째, 혁신제품, 융·복합 서비스 등 혁신·신산업 지원을 위해 현행 계약법령의 틀을 벗어난 혁신적인 계약제도를 선 도입 → 시범운영 → 후 정규제도화하는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 이를 통해 신규 계약제도 실험과 피드백이 가능해져 변화된 계약환경에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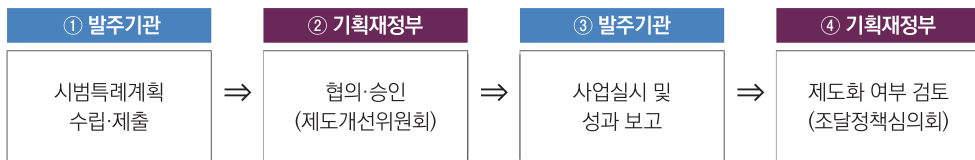
(☞ 참고,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 1 (추진배경) 신산업·신기술 제품·서비스 등 조달에 필요한 새로운 계약제도를 실험할 수 있는 계약제도 테스트베드 필요
 -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국가계약에 벤치마킹한 제도 도입 검토
 - * 신산업·신기술의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

-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행 계약제도는 정형화된 상품·서비스를 전제
 -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에 진입장벽으로 작용
 - 공공기관은 업무특성 등 불가피한 경우 기재부 승인을 받아 별도 계약기준·절차를 운용 가능하나, 국가기관은 운영 불가
 -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②,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②

- 3 (도입방안) 기재부 승인을 받아 현 법령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계약제도를 시범 운영 → 타당성 입증 시 정규 제도화
 - (대상) 현 법령으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계약 전반에 관한 사항(원칙 허용, 예외 금지)
 - (절차) 시범특례계획 승인(제도개선위 의결)을 받아 실시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제도화 여부 검토(조달정책심의회 의결)
 - (기간) 2년 원칙, 기획재정부 협의 시 연장 가능
 - (법적근거 신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근거 신설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절차 개요〉



■ 기획재정부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령 정비 사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계약예규 등 개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도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검토할 것임을 밝혔음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2차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 개최」, 2021. 8. 11.

(작성자: 이형석 연구원)

국유재산을 활용한 개발사업의 다변화, 광역철도 민자사업 추진 검토

-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
- 2021. 8. 19., 기획재정부 -

- 기획재정부는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자세히는 ① 2022년 국유지 개발 활성화 방안, ② 광역철도 민자사업 추진 검토, ③ 재정성과목표관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④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음

〈2022년도 국유지 개발 활성화 방안〉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유지 개발에 민간참여의 문턱을 대폭 낮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민간참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가능 국유재산의 범위를 5년 이상 미활용 일반재산에서 전체 일반재산·행정재산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출자 한도를 현행 30%에서 현물출자를 포함해 최대 50%까지 늘리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 *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국유지개발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개발사업 추진(2011년 제도 도입)
 - ** 국유재산법령 개정 추진(2021년 하반기부터)
 - 2022년 중 국유재산법령 개정 전에 민간의 자본과 아이디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국유지 장 기대부형 개발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현행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지 중 2곳*의 일부 국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50년까지 장기 대부하고,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 민간의 창의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물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
 - * 송파 중앙전파관리소(복합개발), 수원 옛 서울대 농대(토지위탁개발) 부지에 적용 검토
 - ** 송파 중앙전파관리소: 공공청사, 창업지원, 클러스터지원(일반업무·상업) 등 복합, 수원 옛 서울대 농대: 지식산업, 창업지원, 연구개발, 공공시설(공원·도로 등) 등 복합
-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기존 청·관사 복합개발*에 생활SOC를 추가하여 복합의 범위를 넓힌

선도사업**도 추진

* 청·관사 + 상업시설 + 공공주택·혁신공간

** 도봉세무서 대상(2022년): 청사시설(국가) + 주민체육·복지시설(지자체)

〈광역철도 민자사업 추진 검토〉

- 기 확정된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선도사업으로 선정(8. 17. 발표)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

* ① 부산~양산~울산, ② 대구~경북, ③ 광주~나주, ④ 대전~세종~충북, ⑤ 용문~홍천 등 5개 사업 (총 연장 222km, 7.6조원 규모)

- 이 5개 사업은 ① 동일 생활권 내 주요 거점도시 연계, ② 출퇴근 등 대규모 유동인구 존재, ③ 역세권 개발 잠재력 등 민자 추진 여건을 구비한 점을 감안

- (사업 추진방식) 대규모 투자소요, 합리적 수준의 이용요금 책정필요 등을 감안하여 이용자 사용료와 정부 지급 시설임대료 두 가지 방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혼합형 민자방식(BTO + BTL) 등 새로운 사업방식을 적극 활용

- (부대사업) 광역철도 시설 상·하부, 근접지 등 인근에 역세권 개발사업, 공공형 임대주택, 문화·체육시설, MICE산업시설 등 공공성·수익성을 확보한 다양한 부대사업을 최대한 활용

- 이와 관련해 현재 17개 유형으로 제한*된 부대사업 유형을 확대하여, IT 관련 사업(온라인 광고 등), 공공형 임대주택,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 추진

* 현재 민자시설 사용료 인하, 건설보조금 절감 등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체육시설업, 문화시설운영업 등 17개 유형의 부대사업 가능(「민간투자법」 제21조)

- (신속한 사업 추진) 예비타당성 조사,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동시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도 병행

* (현행) 적격성 조사(1년) 완료 후 전략환경영향평가(8개월)

→ (개선) 적격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병행(최대 8개월 단축)

<2022년 재정성과목표관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안 차관은 기존의 성과목표관리가 미시적 사업관리(단위사업 1,700여 개)¹⁾에 중점을 두고 있어 나누는 보고 숲은 못 본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평가함
 -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거시적·전략적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현 시스템을 대폭 개편*키로 하였으며, 이에 작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 예산편성 시 제출하는 성과계획서부터는 ‘프로그램 성과목표관리’를 도입할 계획임
 - * (재정성과관리체계 개편, 2020년 2월) 성과목표관리(성과계획·보고서)는 ‘단위사업’ → ‘프로그램’ 단위로 상향, 성과평가는 ‘세부사업’ 단위로 일원화
 - 해외 선진 주요국들도 프로그램 또는 그 이상의 단위로 성과관리 실시 중이며, 예시는 다음과 같음

* (미국) 우리의 프로그램 목표 수준에 해당하는 Strategic Objective 단위로 성과관리
* (영국) 우리의 전략목표 수준에 해당하는 성과목표 관리(부처별 4~7개)
* (캐나다) Core responsibilities(부처별 10개 미만)에 대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관리

- 핵심 개편내용은 4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성과관리대상(480여 개) 및 지표 수(1,000여 개)를 작년 대비 1/4가량 줄여 달성목표를 집약화하고 행정부담은 경감
 - * 관리대상: 1,778개(단위사업 기준) → 480개(프로그램 수준) / 부처당 평균 30개 → 8개
 - 지표: 4,648개(단위사업 기준) → 1,022개(프로그램 수준) / 부처당 평균 86개 → 17개

성과지표 수(개)	국토부	복지부	기재부	환경부	교육부	과기부	기타
· 기존(단위사업)	367	387	56	234	172	411	3,021
· 현행(프로그램)	35	26	14	14	20	34	337

- ② 프로그램의 실질적 성과를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성과평가의 효능감 제고
 - * 예)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10개 성과지표(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수 등)를 국가온실가스 감축량 등으로 대체

1) 부처 담당자는 2020년 기준 단위사업(1,700여 개), 성과지표(4,700여 개) 설정·관리를 하고 있으나, 포괄범위가 적어 전략적 관리에 한계, 행정부담 대비 실효성 저조함

(예시) 프로그램 목표: III-2. 온실가스의 획기적 감축 및 기후변화 회복력 제고					
(기존) 단위사업 성과계획서			(개편) 프로그램 성과계획서		
단위사업	성과지표		프로그램	성과지표	
온실가스 감축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CO ₂ 절감량		⇒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량				
기후변화적응 및 기반구축	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응사업 체감 만족도			기후변화 대응	할당 대상업체 감축 지원사업 감축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이행평가 완료율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수				
국제환경협력	배출권거래제 지원 헬프데스크 사용자 만족도			기후변화 적응 정책 만족도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 국제기구 인턴취업자 수				
	한·중 환경협력 관련 행사·회의 개최				
	기후변화 국제회의 참여				
	기후변화 협상 시 우리나라 의견 등록건 수				

- ③ 프로그램 성과 메타분석*을 수행하여 기관운영경비 지원 차등화 등 인센티브 부여 및 미흡사업은 성과평가제도와 연계
 - * 성과목표·지표 체계, 프로그램 사업 구성, 추진방식 등 성과저조 주요인 분석
- ④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환경적 외부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성과제고에 기여토록 유도
 - * 고용부 장애인 고용증진 프로그램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강화방안(2021년 5월) 발표이행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 채용 사업주 추가지원, 비대면 교육 등을 반영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 마지막으로, 상반기에 선정한 4개 사업군*의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한 제도개선 및 지출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인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를 새롭게 선정**함

* ①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② 다기화된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조정, ③ 정책펀드 운영 효율화, ④ 농어업정책보험 운영 효율화

** ① 어촌뉴딜 300의 1단계 투자성과 분석, ② 부처 간 경쟁적 추진 중인 창업지원사업군 정비, ③ 군간부 주거지원 사업 효율화 방안 등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2021. 8. 19.

(요약·정리: 이은솔 연구원)

2022년도 국민참여예산 총 71개 사업, 1,414억원 반영

– 2021. 9. 2., 기획재정부 –

■ 정부는 국민참여예산²⁾사업으로 총 71개 사업, 1,414억원을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2년도 정부예산안은 2021년 국민참여예산사업(63개 사업, 총 1,168억원)에 비해 247억원 (21.1%) 증가한 규모임

〈국민참여예산 반영 규모〉

(단위: 억원, 개)

2021년		2022년 정부안		증감	
금액	사업 수	금액	사업 수	금액	사업 수
1,168	63	1,414	71	247(+21.1%)	8(+12.7%)

■ 각 부처는 국민 제안(총 1,589건),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해 참여예산사업을 발굴한 후,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등을 거쳐 구체화하여 예산요구안**에 반영 후, 제출함

* 아동학대, 청년지원, 자연재해 및 국민안전 개선 등

** 191개 사업, 5,852억원 요구

- 기획재정부는 예산국민참여단* 사업 검토 및 선호도 투표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정부안을 마련함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성·연령·지역별 대표성을 갖춘 약 2천여 명을 통계적 추출을 통해 구성하며, 참여예산 사업을 논의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

■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의 생명·안전·인권보호와 관련된 사업이 과반 이상(총 20개, 781억 원)을 차지함

- 이는 코로나19, 건축물 안전사고, 아동학대 등 올해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음압 구급차 보강,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문성 강화 등이 특징 사업임

2) 국민참여예산은 예산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 사업 제안, 사업 구체화, 우선순위 결정 등에 국민이 참여

- 또한, 4차 산업혁명 직업체험관 설치·운영,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씨앗프로젝트 등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예산(총 15개, 269억원)도 다수 포함됨
 -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운영, 인터넷피해상담센터 구축·운영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총 20개, 146억원)과, 법률구조(法律救助) 전자접수시스템 구축*, 외국인·취약계층을 위한 119신고서비스 개발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신규 또는 계속사업으로 반영(총 16개, 218억원)됨
 - * 디지털 뉴딜 공모 최우수상 수상 사업

-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한 2022년도 예산안을 9월 3일(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종 확정된 참여예산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차질 없는 집행을 독려할 계획임

참고 1 2022년도 국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부처	사업명	2021 예산	2022 예산	
			정부안	참여예산 (증액분)
	〈 합 계 〉	192,319	333,762	141,443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	2,500	2,50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연구개발(R&D)	-	3,000	3,000
경찰청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관리	1,280	1,564	284
고용부	건설현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1,404	1,404
고용부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36,056	45,023	8,967
고용부	4차 산업혁명 직업체험관 설치운영	-	500	500
고용부	인공지능 상담시스템 도입	-	300	300
공정위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조례개선 지원	-	65	65
과기부	국민체감형 5G 특화망 활성화 기반 조성	-	826	826
과기부	소형선박 사고대응 SOS 위치 실증	-	500	500
과기부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LAB 실증단지 조성	-	2,500	2,500
관세청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모니터링 체계 구축	-	1,358	1,358
교육부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및 운영(정보화)	-	3,488	3,488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수당	400	495	95
국토부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5,730	45,916	40,186
국토부	지상지하공간정보 통합관리체계구축(정보화)	558	4,976	4,418
국토부	공간정보기반 디지털 트윈시범사업(정보화)	3,500	4,900	1,400
국토부	국가공간정보 표준화	463	602	139
권익위	행정심판청구 맞춤형 사례제공	-	485	485
농림부	꾸러미 사업 지원	-	200	200
농림부	가축방역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	475	475
농림부	청년여성 농업농촌분야 교육 지원	-	500	500
농림부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	1,500	1,500
농진청	농식품 구매정보 DB 구축	-	1,000	1,000
농진청	원예특용자원 생산과 품질표준화 연구(R&D)	-	6,400	6,400
문체부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	1,550	1,550
문체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	500	500
문체부	공예 공공데이터 기반구축	-	700	700
문체부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씨앗프로젝트	-	1,000	1,000
문체부	게임 제작 지원	24,245	24,345	100
문화재청	자연유산 디지털 데이터 구축	-	500	500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힐링콘텐츠 제작 활용	-	2,000	2,000
방통위	인터넷피해상담센터 구축·운영	-	1,388	1,388
법무부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	1,391	1,391

부처	사업명	2021 예산	2022 예산	
			정부안	참여예산 (증액분)
법무부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	173	296	123
법무부	국가정황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	54	54
보훈처	일상재활체육 지원	-	196	196
보훈처	독립의 전당 건립	-	226	226
보훈처	친환경차량 지원	-	816	816
보훈처	보훈요양원 자원봉사자 식비 지원	-	67	67
복지부	자활사례관리	1,756	2,100	344
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운영	53,438	60,851	7,413
복지부	소득재산 공제 자동화 기능	-	526	526
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문성 강화	168	868	700
복지부	대국민 아동학대 인식 증진	188	1,486	1,298
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비	1,081	4,235	3,154
복지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8,655	17,397	8,742
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확대	22,240	27,467	5,227
산림청	산불피해조사감식	-	1,000	1,000
산림청	보호수 및 노거수 통합관리 기반구축사업	-	750	750
산림청	국가 수목유전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605	605
산림청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490	2,835	2,345
소방청	특수목적(음압) 구급차 보강	-	6,325	6,325
소방청	외국인, 취약계층을 위한 119신고서비스 개발	-	102	102
식약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700	1,521	821
식약처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및 운영	-	750	750
식약처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	181	181
여가부	가족역량강화지원	5,404	6,661	1,257
여가부	고위기청소년 맞춤형프로그램 운영 확대	425	500	75
여가부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15,555	17,748	2,193
여가부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	100	100
인혁처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ISP	-	250	250
인혁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운영	312	424	112
인혁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3,374	3,972	598
인혁처	나라배움터 성능 개선	44	128	84
인혁처	공직윤리시스템교육지원 및 서비스데스크 운영	534	575	41
특허청	사회적약자의 지적권 보호 지원	1,550	1,874	324
해경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	125	125
해수부	어선청년임대	-	450	450
해수부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 지원	4,000	6,000	2,000
행안부	재난피해자 힐링프로그램 지원	-	450	450

참고 2 2022년도 국민참여예산사업 유형별 분류

구분	사업명	
국민생명·안전과 인권보호 (20개 사업, 781억원)	생명	특수목적(음압) 구급차 보강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고위기청소년 맞춤형프로그램 운영 확대
		재난피해자 힐링프로그램 지원
	안전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관리
		건설현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고성채해 집중관리(위탁)
		소형선박 사고대응 SOS 위치 실증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
		국가정황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산불피해조사감식
		보호수 및 노거수 통합관리 기반구축사업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및 운영	
	인권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문성 강화
		대국민 아동학대 인식 증진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비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미래성장 동력확보 (15개 사업, 269억원)	인력양성	4차 산업혁명 직업체험관 설치운영
		어선청년임대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국민체감형 5G 특화망 활성화 기반 조성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LAB 실증단지 조성
		지상지하공간정보 통합관리체계구축(정보화)
		공간정보기반 디지털 트윈시범사업(정보화)
		국가공간정보 표준화
		농식품 구매정보 DB 구축
		공예 공공데이터 기반구축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씨앗프로젝트
		게임 제작 지원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기타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연구개발(R&D)
		원예특용자원 생산과 품질표준화 연구(R&D)

구분	사업명	
국민 삶의 질 제고 (20개 사업, 146억원)	생활편의	인공지능 상담시스템 도입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조례개선 지원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및 운영(정보화)
		인터넷피해상담센터 구축·운영
		소득재산 공제 자동화 기능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ISP
		수상구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깨끗한 환경	가족방역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기타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모니터링 체계 구축
		행정심판청구 맞춤형 사례제공
		꾸러미 사업 지원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자연유산 디지털 데이터 구축
		천연기념물 힐링콘텐츠 제작 활용
		국가 수목유전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운영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나라배움터 성능 개선
공직윤리시스템교육지원 및 서비스데스크 운영		
취약계층 지원 (16개 사업, 218억원)	저소득층	자활사례관리
		지역자활센터 운영
	장애인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유공자 등	일상재활체육 지원
		독립의 전당 건립
		친환경차량 지원
		보훈요양원 자원봉사자 식비 지원
	기타	영세납세자지원단 수당
		청년여성 농업농촌분야 교육 지원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확대
		외국인, 취약계층을 위한 119신고서비스 개발
		가족역량강화지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사회적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년도 국민참여예산 총 71개 사업, 1,414억원 반영」, 2021. 9. 2.

(요약·정리: 이은솔 연구원)

2022년 총 89개 부담금 20.5조원 징수 계획, 중소기업 지원,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

- 2022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국회 제출 -
- 2021. 9. 2., 기획재정부 -

- 기획재정부는 9월 3일에 「부담금관리기본법」 제6조의2에 따라 중앙부처·지자체 등이 관리 중인 2022년도 부담금운용계획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작성되는 「부담금 운용종합계획서」* 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요 내용) 부담금별 ① 신설·폐지 현황, ② 부과·징수 관련 주체·요건, ③ 사용계획 등

<2022년도 부담금 현황>

- 2022년도의 부담금 수는 총 89개로 전년 대비 1개 감소함
 - * 부담금 수(개): (2014) 95 → (2018) 90 → (2020) 90 → (2021) 90 → (2022) 89(예정)
 - 회원제골프장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9. 12. 27.)*에 따른 부담금 폐지를 반영함
 - * 수많은 체육시설 중 유독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의 이용자만을 국민체육진흥 계정 조성을 위한 조세 외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됨
 - ** 2020년부터 징수 중단, 부담금 폐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 계류 중
- 부처별로 살펴보면, 환경부 20개(2.5조원), 국토교통부 15개(1.4조원), 산업부 9개(4.5조원), 금융위원회 8개(4.3조원) 등
-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2.8조원), 예보채상환기금특별기여금(2.1조원),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2.1조원) 순

<2022년도 부담금 징수 및 사용계획>

- 징수 규모는 총 20.5조원으로, 전년계획 대비 0.8조원(3.5%) 감소할 전망이다
 - * 징수실적(조원) (2019) 20.4 → (2020) 20.2 → (2021 계획) 21.2 → (2022 계획) 20.5

- 총 89개 부담금 중 38개 부담금은 증가, 39개 부담금은 감소 전망, 기타 12개는 변동 없음
 - 징수 규모가 증가하는 부담금은 38개, 증가 규모는 0.8조원으로 전망됨
 - 예금보험 적용 대상 금융기관 예금평잔 증가 전망에 따라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특별기여금 0.2조원 증가(예금평잔의 0.1% 징수)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증가 전망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0.1조원 증가(대출금 평잔의 0.0225% ± 차등요율 징수)
 - 징수 규모가 감소하는 부담금은 39개, 감소 규모는 1.6조원으로 전망됨
 -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정책 등에 따라 부과대상인 경유차 수량이 감소할 전망으로 환경개선부담금 0.2조원 감소
 - 재활용 비중 확대에 따른 매립·소각 폐기물 수량 감소로 폐기물처분부담금 0.05조원 감소
- 징수된 부담금은 중앙정부 기금·특별회계, 지자체 특별회계, 공공기관 수입으로 귀속되어 분야별 지출에 사용
- 중앙정부 33개 기금·5개 특별회계*로 18.0조원, 지자체 특별회계** 세입 등으로 2.0조원,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수입으로 0.5조원 편입될 예정
 - * 국민건강증진기금(2.8조), 전력산업기반기금(2.1조) 및 에특(1.6조), 환특(0.7조) 등
 -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0.3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0.2조) 등
 - 사용계획으로는 서민금융지원 5.1조, 산업·에너지 4.5조, 보건의료 2.8조 등에 배분될 예정
 - 금융 부문에서는 신보·기보 중소기업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서민대출, 주신보 서민 주택금융 보증재원으로 활용(신보·기보 기금 등 5.1조)
 - 산업 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장비·설비 보급 보조·용자, 수소생산기지 구축,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 재원으로 활용(전력산업기반기금·에특 등 4.5조)
 - 환경 부문에서는 하수관로 정비, ICT 기반 상수도 관리, 노후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보급 등의 재원으로 활용(환특 등 2.5조)
 - 보건 부문에서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치매관리체계구축·암관리 등 공공의료 필수 인프라 보강(국민건강증진기금 등 2.8조)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2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국회 제출」, 2021. 9. 2.

(요약·정리: 이은솔 연구원)

범정부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전환 지원,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실증 시범사업 추진 등 핵심사업평가 결과 2022년도 예산안 반영

- 2021. 9. 6., 기획재정부 -

- 정부는 지난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발표한 핵심사업평가³⁾ 결과(재정지원 개선방안)를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1년 핵심사업평가 대상 8개 과제〉

① 범정부 클라우드 전환	②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	③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
④ 고졸취업 활성화	⑤ 산업단지 환경조성	⑥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⑦ 규제자유특구 지원	⑧ 위기극복 정책금융 지원	

* 2021년 4월부터 최근 신규도입되거나 확대되고 있는 8개 재정사업을 핵심사업평가 과제로 선정하고, 과제별로 기획재정부·민간전문가·조세연구원 등으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재정투입·집행실적·사업성과 등을 집중 점검

-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범정부 클라우드 전환 부문에서는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이 민간 클라우드 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공공기관 및 지자체를 포함하여 총 2,149개 정보시스템(서버, SW 등)의 클라우드 전환 지원(2,402억원)
 - 클라우드 이전에 따른 민간 클라우드 1년치 이용료, 클라우드 설치비, 상용SW라이선스, 컨설팅 비용 등 지원
-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민간에서 적극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예산** 신규 반영(80억원, 국고보조율 80%)
 - * SaaS(Software-as-a-Service)는 기관들이 공동으로 인터넷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기관별로 응용SW를 자체 개발·구축하지 않아도 됨

3) 「국가재정법」 제8조 제6항, 시행령 제3조 및 「재정사업심층평가 운용지침」에 근거하며,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상황 및 사업성과 등을 점검하여 재정투입방향 등 제시

** 클라우드 보안인증, 서비스품질, 전자정부 플랫폼과 호환 등 기준 충족 지원

■ 첨단도로교통체계 부문에서는 C-ITS⁴⁾ 구축에 필요한 통신방식 결정을 위해 필요한 LTE-V2X 실증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우선 반영(126억원)

- 실증사업 완료 후 시범사업(WAVE와 LTE-V2X방식 고속도로 병행구축)을 거쳐 통신방식을 결정하고 C-ITS* 전국 구축사업 착수 계획

* (2021~2022년) LTE-V2X 실증사업 → (2021~2022년) WAVE와 LTE-V2X방식 시범사업 → (2024년~) 시범사업 결과 및 국제표준 동향 고려, 단일표준 결정 및 전국 확산

〈C-ITS 구축 계획〉

① (실증추진) LTE-V2X방식 단기간 내 실증완료 2021년 하반기~2022년

- LTE-V2X 실증완료 시까지 사업지연 최소화를 위해 고속도로 일부구간에 WAVE방식 우선구축

2021년 하반기부터

② (병행구축) 실증 후 상용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고속도로 일부구간에 WAVE와 LTE-V2X방식 병행구축 2022~2023년까지

③ (전국확산) 시범사업 결과 및 국제표준 동향 등을 고려하여 단일표준으로 전국으로 확산 구축

2024년 이후

■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부문에서는 ① 패키지사업*을 직접적 고용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기업·산업 지원을 통한 간접적 고용사업은 총사업비의 20% 내로 한정함

* 고용위기 우려지역에서 광역-기초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자체 특성에 따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일자리사업 추진(최대 5년간 국고 지원)

- ② 간접적 고용사업은 고용효과가 직접 나타나는 사업*에 한해 인정

* 예) 신규채용 또는 고용유지를 약정한 기업에 한해 경영활동(시제품제작·판로개척 등) 지원

- ③ 고용위기를 선제 판단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 우려지역 선정기준에 경기선행/동행지표(제조업가동률 등) 반영(2021년 하반기 지침 개정, 고용부)

■ 고졸취업 활성화 부문에서는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고졸취업 장려금(5백만원)* 지급방

4)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자동차-교통인프라 간 양방향 교통시스템

식을 '취업 시 일시지급'에서 '분할지급'***으로 전환(취업현장 안내 등을 거쳐 2023년부터 적용)

*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시 장려금(500만원)을 지급

** 예) 채용 시 200만원(40%), 6개월 후 150만원(30%), 1년 후 150만원(30%)

● 아울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하여 취약계층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 지원

* 취약계층 청년(14만명)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연 최대 960만원)으로, 고졸 취업자(2만명)도 포함

■ 산업단지 환경조성 부문에서는 현재 복잡·다기한 산단 환경개선사업을 핵심사업 위주로 집약화 (18개 → 13개)하여 집중 투자함

●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산단 공모사업의 연계추진이 가능한 통합계약방식 도입(2022년, 산업부)

●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 중 민간의 자본과 창의적 아이디어 활용이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 검토

- 예) ① 산단 내 신재생 에너지 발전·저장시설(태양광발전, 연료전지, 에너지 저장장치 등), ② 스마트공동물류센터, ③ 완충저류시설 등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부문에서는 스마트공장 시범모델을 2022년 5천개 추가 보급(3,543억원) 하여 2022년까지 3만개 지원목표 달성

● 이후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의 본격적 투자소요는 저리 정책금융 방식으로 지원 (2022년 6,000억원)

■ 규제자유특구 지원 부문에서는 2021년 재정지원(2년 한시)이 종료되는 14개 특구에 대한 추가 지원요구에 대해 성과가 우수한 특구를 선별(최대 7개)하여 신기술·신서비스 사업화자금 지원 (32억원)을 통해 선택과 집중에 입각한 2단계 재정지원으로 사업성과 극대화를 목표로 함

* 중기부는 「성과우수 특구 재정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2021년 하반기)하고, 내년 3월 성과 우수 특구 선별 및 지원 계획

■ 위기극복 정책금융 지원 부문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완화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화 목적의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신규출자는 중단하고, 추가소요 발생 시 기존 미집행 출자금 활용 함

●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규모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방역규제 등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선별하여 긴급융자 자금** 지원

* 소상공인지원(융자, 억원): (2020) 45,500, (2021) 41,000, (2022 예산안) 36,000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억원): (2020) 13,000, (2021) 8,000, (2022 예산안) 2,000

신보·기보기금출연(억원): (2020) 38,149, (2021) 7,906, (2022 예산안) 4,020

** 소상공인 희망대출(신규) 0.7조원(저신용 금지·제한업종 7만 명 대상 1.9%, 1천만원) 등 지원

- 배지철 재정성과심의관은 올해 핵심사업평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확대되었던 주요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집행실적과 성과를 점검,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삭감·조정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힘
 - 향후에도 주요 문제사업에 대한 핵심사업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환류시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핵심사업평가 결과 “2022년도 예산안 반영”」, 2021. 9. 6.

(요약·정리: 이은솔 연구원)

제3차 공공조달 수요발굴위원회 개최


- 2021. 9. 24., 기획재정부 -


- 기획재정부는 민관 합동 위원회인 ‘공공조달 수요발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 조달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부총리) 산하 분과위원회로서 혁신제품 지정 및 혁신구매목표제 등 혁신조달 관련 사안 심의·의결(「조달사업법」 5조 및 동법 시행령 7조)

〈제3차 공공조달 수요발굴위원회 개요〉

- **일시:** 2021. 9. 24.(금) 14:00~15:30
 - **참석자:** 기획재정부 2차관(위원장), 과기정통부·행안부·산업부·환경부·농식품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조달청·특허청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3명
 - **안건: (의결)** 2021년도 혁신조달 추진현황(1~9월) 및 4/4분기 추진계획(안)
2021년 3차 혁신제품 지정(안)
(보고) 부처별 혁신조달 추진현황 및 계획 등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부처별 2021년도 1~9월간의 혁신조달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올해 4/4분기 혁신조달 주요 과제 추진계획(안)을 논의·확정하였음
- ① 관계부처 및 전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88개의 혁신제품 신규지정(누적기준 총 776개 지정) (☞ **【붙임 1】**: 신규지정 주요 혁신제품 예시)
 - 올해 혁신제품 지정목표 900개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남은 4/4분기 중 혁신제품을 추가 지정할 계획

〈참고〉 혁신제품 주요 사례〉

제품명	제품 설명 및 공공서비스 개선 사례
AI 연동 스마트소화기 (주)사프고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감지·경고·진화기능을 모두 제공하는 휴대용 소화기 • 부산시, 경찰청, 행안부 등 다양한 기관에 도입·활용 중 * 2021년 6월 부산 사상구 주택화재 시 기존 분말소화기가 작동불량인 상황에서 해당제품으로 화재진압 및 6인 대피 등 피해 최소화

제품명	제품 설명 및 공공서비스 개선 사례
<p>시·청각장애인 민원안내시스템 (주)멀틱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기술 기반의 음성·수어 민원안내 서비스 제공 • 대전시 등 지자체에 도입되어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 e-행정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장애인 대상 비대면 맞춤형행정 확산 가능

- ②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연계한 혁신제품 발굴·지정
 - 올해 신설된 「한국판 뉴딜 관련 시제품 지정 트랙」을 통해 ‘착용형 보행보조 로봇’ 등 37개 제품 신규 지정(누적기준 총 53개 지정, 16개는 2021년 6월 기 지정)
 - 또한, 시제품이 아니더라도 뉴딜사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거나 현재 활용 중인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존 혁신제품 지정트랙 확대 개편
- ③ 혁신조달을 통한 문제해결(인큐베이팅*) 및 민간 전문가(스카우터**)를 활용한 기업·제품 발굴 등 적극적 조달시스템 활성화
 - * 공공문제 발굴, 과제화, 솔루션 탐색 지원 등 혁신조달연계 컨설팅 지원(수요기관)
 - ** 전문가 그룹이 유망기업 제품을 발굴하여 혁신조달연계 컨설팅 지원(혁신기업)
 - 환경문제에 한정했던 인큐베이팅 분야를 안전 등 전 공공서비스로 확대하고, 수요발굴 대상도 공공부문에서 기업·국민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과제 발굴
 - * 기존과제(탄소중립·자원순환·물순환 분야 9개 과제)는 연내 혁신제품 공모 및 R&D 연계

※ (참고) 인큐베이팅 추진 사례: 해양폐기물 재활용 콘크리트 앵커

- ▶ 환경 분야 자원순환 등 공공문제 선정(2021년 4월) → 전문가·수요기관 등의 인큐베이팅 수요개발단* 구성·수요기획(2021년 5~7월) → 과제 확정(2021년 8월) → 혁신제품 공모(2021년 9월 9일~10월 5일)
- * 조달청, 한국조달연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촌어항공단, 한전전력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 ☞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등을 재활용한 친환경적 콘크리트 구조물(앵커) 제작으로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 해양수산의 탄소중립 추진 → 현재 혁신제품 공모 중

- 스카우터가 발굴한 유망제품 중 평가·선정을 거쳐 ‘액체 생검 암 진단패널*’ 등 15개 제품을 연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스카우터단 규모도 확대(기준: 10명 → 2021년 4/4분기: 20명)
- * 1~2기의 암환자도 정확히 검사 가능하도록 검출민감도를 개선하여 조직검사 대체

※ (참고) 스카우터 추천 혁신제품 지정 사례

- ▶ 바이오헬스 분야 전문투자회사 소속 전문가를 스카우터로 위촉(VC협회 추천)
 - 해당 스카우터가 유망기업 제품인 '액체 생검 암 진단패널'(진캐스트)을 발굴·추천
- ☞ 전문심사위원, 국민평가단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 → 컨설팅 및 혁신제품 지정 연계

- ④ 내년 혁신조달 예산(안)을 2021년 대비 30% 수준 확대(2021년: 1,110 → 2022년(안): 1,434억원(+324억원))
 - '공공수요 발굴 → R&D 수행 → 혁신제품 지정 → 공공구매 연계 및 민간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혁신조달 연계형 R&D' 예산*도 대폭 확대(2021년: 554 → 2022년(안): 878억원, +58.5%↑)
 - * 부처별 예산(2021 → 2022 정부안): (과기부) 57 → 94억원, (산업부) 64 → 124억원, (중기부) 433 → 660억원
 - ※ 2021년 혁신조달 연계형 R&D 신규과제 126개 진행(과기부 7개, 산업부 10개, 중기부 109개) → 2022년 총 278개 추진(2021년 과제 117개(과기 7개, 산업 10개, 중기 100개) + 신규 161개(과기 1개, 산업 10개, 중기 150개))
 - 특히, 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를 신설하여 혁신제품 발굴·평가, 조달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서비스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2022년 예산안에 운영비 등 10억원 반영)

※ (참고) 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 주요 업무

- ▶ (정책연구) 제도개선 등 정책수립, 성과관리
- ▶ (기업지원) 인큐베이팅·스카우터, 컨설팅, 사후관리
- ▶ (제품지정) 규격검토 등 제품지정·평가 업무
- ▶ (해외진출) 해외진출 지원프로그램 코디네이팅

- 금번 회의에서는 신규지정되는 주요 혁신제품에 대한 설명회도 진행하였음
 - 'IoT기반 자동개폐 그늘막'은 날씨 변화에 실시간·자동으로 대응하여 관리가 용이하고, 시민 편의성이 크게 향상
 - '착용형 보행보조로봇'은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하지마비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 재활훈련의 효과성 제고
- 기획재정부는 혁신조달을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도약과 함께 새로운 혁신기술·산업 육성의 발판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하고,
 - 연말까지 혁신제품 900개 이상 지정 목표 달성과 함께,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출시되

는 혁신제품에 대해 공공조달 시장을 크게 열어주고,

- 민관 합동으로 혁신제품 수요를 발굴하고, 유망 혁신조달 기업을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 혁신제품기업 등 우수 조달기업과 해외바이어·조달기관 관계자 등이 참가하는 국제 공공조달 종합 박람회인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를 개최할 예정

* 혁신제품, 정부조달 우수제품 등 총 450여 개 업체(850여 개 부스) 제품 전시

-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행사의 의의 및 목적

- 국내 유일 국제 공공조달 종합 박람회(올해 21회)
- 혁신성장산업, 우수중소·벤처기업 제품 판로지원으로 고용창출
- 해외바이어 초청 등 우수제품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전시장 구성

- 제품전시관(15개관): 6개 특별관, 9개 일반 전시관
 - (특별관: 6개관) 혁신성장, 기술마켓, 창업벤처, 디지털서비스, K-방역, 공공관료육성
 - (일반관: 9개관) 전기전자, 사무기기, 기계장치, 건설환경, 안전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 우수발명품, 경기 중소기업, 지자체 공동관
- 기타: 정책홍보관(정부조달관), 공공구매 상담회장, 해외바이어 상담회장 등


- 주요 행사

- (국내) 공공구매 상담회, 구매 실무교육(온라인), 수요기관 간담회, 정부조달 문화상품 공모전, 추계학술대회 등
- (국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온라인), 해외정부기관·국제기구 관계자 초청 국제 워크숍(온라인)

- 이 행사를 통해 혁신제품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국내 공공관료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 한편, 엑스포 기간 중 제1회 조달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혁신조달 우수추진기관 등 조달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격려 예정임

붙임 1 2021년 3차 신규지정 주요 혁신제품 예시

제품명	제품사진	제품 설명 및 공공서비스 개선 사례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다기능 그늘막 메탈크래프트코리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IoT기술을 결합한 원격 자동개폐 그늘막 기존 그늘막(수동 작동) 대비 인적자원 절감, 날씨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우수 보행로 및 교차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제고 예상 수요기관: 각 지자체 등
스쿨존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시스템 알티앤씨(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쿨존 진입·보행 상태를 자동 인식하여 어린이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IoT 스마트 솔루션 보호자앱·블루투스장치를 통한 원격관리, 모니터링 가능 국민(어린이) 안전 제고,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에 기여 예상 수요기관: 각 지자체 등
착용형 보행보조로봇 (주)엔젤로보틱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착용형 로봇기술을 적용한 하지 재활로봇 대퇴골, 경골의 원활한 회전을 돕는 보행보조토크 제어장치 활용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재활치료에 기여 예상 수요기관: 각 의료원, 대학병원 등
액체 생검 암 진단패널 진캐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혈액 내 존재하는 암 유전자 분석기기 기존 조직검사에 비해 신속·간편하고, 반복검사 가능 → 혈액만으로 극초기, 1~4기 암환자의 암 진단 가능 간편 정밀의료 제공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예상 수요기관: 각 의료원, 대학병원 등
생체발열 측정 및 위험 온도감지를 위한 열상·영상 듀얼카메라시스템 (주)이오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얼굴인식 및 온도를 동시에 체크하는 듀얼 열화상카메라 일반영상, 열영상의 합성영상을 제공하여 하나의 영상 스트림에서 사물 인식 및 온도 정보 파악 가능 이외에도 영상 관제, 온도 모니터링을 통해 설비 고위험 감지, 화재 감시 등 수행 → 국민안전 제고 예상 수요기관: 각 지자체, 관공서 등
친환경 무취 눈슬립 바닥재 (주)한국콘크리트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부 친환경 페인트기준(EL241) 충족 기존제품 대비 유독가스로 배출 저감, 난연기능 강화 → 대기오염 저감, 국민안전 제고에 기여 예상 수요기관: 관공서 학교 등 건축물, 발전소 등

제품명	제품사진	제품 설명 및 공공서비스 개선 사례
<p>고강도 제설용 고무삼널 (주)동일인더스트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 강화섬유, 초내마모 고무를 적용하여 내구성 및 제설능력이 뛰어난 고강도 고무삼널 • 기존 철삼널 대비 도로면 파손 저감, 기존 고무삼널 제품 대비 뛰어난 내구성으로 흠 발생 저감 • 노면파손 예방, 제설공백 방지, 장비수명 연장 등 효과 • 예상 수요기관: 각 지자체 등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3차 공공조달 수요발굴위원회 개최」, 2021. 9. 24.

(작성자: 이형석 연구원)

1·2차 추경 등 3분기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4분기 집행관리 방향 논의

–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 2021. 9. 29., 기획재정부 –

■ 기획재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는 2021년 1·2차 추경의 집행실적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4/4분기 재정집행 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 안 차관은 2021년 1·2차 추경예산 집행을 위해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노력해온 결과, 당초 계획한 집행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함
 - 1차 추경(3월 25일 확정)은 6개월 동안 관리대상사업(9.5조원)의 90.6%(8.6조원)에 해당하는 집행실적⁵⁾을 달성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현금지원사업은 지급대상 377만 명에게 5.3조원을 지급하여 현재 사업을 완료함
 - 인건비 보조 등 분할 집행되는 일자리 사업(긴급고용대책 2.5조원, 63개 사업)은 71.3%인 1.8조원을 집행함
 - 연말까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채용·집행실적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있음
 - 2차 추경(7월 24일 확정)⁶⁾은 2개월간 관리대상(20.9조원)의 상당부분인 75.3%(15.7조원)를 집행하여 정상적으로 추진 중
- 피해지원 3종 패키지(14.9조원)의 경우, 철저한 사전준비를 바탕으로 총 4,520만 명에게 12.1조원(81.2%)을 지급
 - 상생 국민지원금(8.6조원)은 9월 6일 지급*을 시작하여 4,060만 명에게 7.9조원(91.7%)을 지급함

5) [참고 1]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실적(9월 24일 기준)

6) [참고 2]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실적(9월 24일 기준)

- *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등에서 대상 조회 및 신청 가능
- 가구구성 변경, 지역가입보험자의 기준소득 보정 등 지급대상에 대한 정보가 현행화되지 못해 발생한 오류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국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심사하여 최대한 구제할 계획
- * 9월 23일 18시 온라인 국민신문고 기준 19.5만 건
-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저소득 추가 국민지원금(0.3조원)은 8월 24일 지급을 시작하여 대상자 전원인 281만 명에게 0.3조원(94.9%) 지급 완료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4.2조원)은 8월 17일부터 신속지급을 시작하여 179만 명에게 3.9조원(92.4%)을 지급하였으며, 9월 30일부터는 공동대표 및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확인지급을 시작하고, 11월 중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연말까지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할 예정
- 소상공인 손실보상(1.0조원)은 법령*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지원대상, 손실보상 기준 등 세부지침을 마련·고시(10월 중순)하고 개별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아 10월 말부터 지급을 개시할 계획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월 7일 개정
- 상생 소비지원금(0.7조원)은 현재 카드사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안내·홍보를 위한 콜센터 및 웹페이지 개설 등 집행준비를 완료하였으며, 10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다음달인 11월 15일 캐시백* 지급을 개시할 예정
- * 10월 및 11월 카드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지급(지원금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 이 밖에 고용·민생안정(2.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0.3조원) 등 여타 사업(6.0조원)은 3.3조원(55.0%)을 집행하였으며, 철저한 방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 집행 계획을 수시로 점검·관리 추진할 예정임
- 더불어 안 차관은, 코로나 4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방역관련 사업(12.7조원)* 예산에 대한 집행 실태를 별도 점검한 결과, 68.5%(8.7조원)가 집행되었다고 밝힘
- 특히, 중증환자 긴급치료비용 확충*, 진단검사비 지원** 등 사후정산 방식의 지출사업의 경우, 적정소요 검증 등 사전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여 병원·보건소 등 현장에 신속히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
- * 시설·장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 현장실사 등에 약 3개월 소요 → 10월 중으로 예정된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조속히 집행

** 진단검사 후 실적집계·서류 확인 등에 1~2개월 소요 → 신속집행이 가능한 '진단검사비 집행 지원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도입 중으로 10월 중 완료 예정

- 또한, 코로나 4차 확산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방역 활동에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경우,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동원하여 적시 지원할 것이라 언급

■ 향후 남은 4/4분기 중 재정운용은,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코로나 4차 확산 및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취약계층 고용 확대 등 민생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힘

■ 또한, 부처별로 2021년 예산의 이·불용 최소화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고 사업별 집행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집행률 달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중앙재정 집행률(%), 총지출 기준: (2018) 96.7, (2019) 97.8, (2020) 97.7

참고 1 2021년 1차 추경(3월 25일 확정) 집행실적(9월 24일 기준)

	예산	집행	지급액		비고	
			(%)	(지급인원)		
총 계	12.2조원	10.0조원	81.5	(해당없음)	예비비(1.1조원), 2차 추경 감액(1.8조원) 반영	
관리대상	9.5조원	8.6조원	90.6	(해당없음)		
주요 현금지원 (신속집행)	5.5조원	5.4조원	98.4	5.3조원 (377만 명)	96.6 (100.0)	
버팀목자금 플러스+	4.9조원	4.9조원	100.0	4.8조원 (291만 명)	98.1 (100.0)	지급 완료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0.5조원	0.4조원	84.0	0.5조원 (71.5만 명)	0.4조원 (100.0)	
법인택시기사	560억원	549억원	98.0	560억원 (7.8만 명)	549억원 (100.0)	
방문·돌봄 종사자	309억원	171억원	55.3	309억원 (3.4만 명)	172억원 (98.5)	
전세버스기사	245억원	241억원	98.4	245억원 (3.0만 명)	241억원 (100.0)	
기타사업 (적기집행)	4.0조원	3.2조원	79.7	(해당없음)	(해당없음)	연내 집행 완료
긴급피해지원	0.7조원	0.6조원	86.9	(해당없음)	(해당없음)	사업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
방역대책	0.8조원	0.8조원	99.0			
긴급고용대책	2.5조원	1.8조원	71.3			

	예산	집행	지급액		비고
			(지급인원)	(%)	
비관리대상	2.8조원	1.4조원	50.3	(해당없음)	연내 집행 완료
감염병 예방관리 (해외백신 구매)	2.3조원	1.0조원	44.0	(해당없음)	탄력적인 집행 예정이 거나 집행 시기 특정 이 어려운 사업
긴급복지	0.4조원	0.3조원	86.4		

참고 2 2021년 2차 추경(7월 24일 확정) 집행실적(9월 24일 기준)

(단위: 조원, %)

구분	예산 (조원)	집행 (조원)	지급액	
			(%)	(%)
집행관리대상 합계	20.9	15.7	75.3	(해당없음)
1.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4.9	12.4	83.5	12.1 81.2
①-1. 상생 국민지원금	8.6	7.9	91.8	7.91 91.7
①-2. 저소득 추가 국민지원금	0.3	0.3	100.0	0.28 94.9
②-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4.2	4.2	100.0	3.90 92.4
②-2. 손실보상 법제화	1.0	0.0	0.0	0.00 0.0
③ 상생 소비지원금	0.7	0.0	0.0	0.00 0.0
2. 3종 패키지 외	6.0	3.3	55.0	(해당없음)
① 백신·방역 보강	3.4	1.5	42.8	(해당없음)
· 의료기관 손실보상	1.1	0.5	47.0	
② 고용·민생안정	2.3	1.6	69.4	
②-1. 고용 회복 지원	0.8	0.5	60.7	
· 신규일자리 창출	0.5	0.3	72.8	
②-2. 민생안정 지원	1.5	1.1	74.3	
· 택시·버스기사	0.1	0.1	94.2	
③ 지역경제 활성화	0.3	0.3	80.4	
· 지역사랑·온누리	0.2	0.2	90.6	
비관리대상	14.0	· 지방교부세(금) 12.2, 관광기금 재정보강 0.2 · 해외백신 도입 1.5, 긴급복지 0.1 등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2021. 9. 29.

(요약·정리: 이은솔 연구원)

2. 미국

미국 관리예산처(OMB)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Priority Open Recommendation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2021. 6., 미국 감사원(GAO) –

〈이슈 선정 배경〉

- ◆ 미국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이하 GAO)은 매년 연방정부 운영 개선을 위해 1,000건 이상의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 이 자료는 2021년 6월 기준 미국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이하 OMB)에 대한 44가지 우선적 공개 권고사항(Priority Open Recommendations)을 간략하게 설명함
- ◆ 재정 절감, 고위험 목록 문제 해결 및 정부 운영 개선 관련 GAO의 권고사항은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운영에도 참조가 될 것으로 기대됨

1. 검토 배경

- 2020년 4월 미국 감사원(GAO)은 미국 관리예산처(OMB)에 35개의 우선적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음
 - 이후 OMB는 권고사항 중 4가지를 실천하였으며, GAO는 올해 6월 13개의 우선적 권고사항을 추가로 제시함
 - 총 44개 권고사항은 아래 9개 영역으로 나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OMB의 지속적인 관심은 재정 절감 및 정부 운영 개선에 기여할 것임
 - 정부 성과 개선
 - 정부 데이터의 이용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 조달관리(acquisition management) 기능 개선 및 비용 절감
 - 범정부적(government-wide) 부적절 지출 절감
 - 정보보안 강화
 - 재난 구호(disaster relief)를 위한 규제 설정
 - 성폭력 관련 연방정부 자료 감독기능 개선
 - 연방 부동산 자산 관리체계 개선

- 정보 관리체계 개선

■ 이하에서는 GAO가 OMB에 제안한 우선적 권고사항을 관련 영역별로 나누어 설명함

2. 정부 성과 개선

- 17가지 정부 성과 개선 관련 우선적 권고사항을 실천할 경우, 다양한 의사결정자의 정보 요구 사항에 OMB가 보다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음
 - 연방 프로그램 목록(federal program inventory) 시스템을 완전히·효과적으로 구현
 - 17가지 권고사항 중 10가지는 2010년 제정된 「GPR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현대화법」에서 요구한 연방 프로그램 목록(federal program inventory) 관련 내용임
 - 연방 프로그램 목록을 완전히 구현할 경우 의사결정자들이 정부의 분할·유사·중복 문제를 보다 잘 식별할 수 있을 것임
 - 프로그램 관리체계 개선
 - 연방기관 성과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 확대
 - 해외 지원 사업에 대한 감독 및 평가실무 강화
 - 아동 복지 지원 및 장애인 고용을 위한 목표 개발 등

3. 정부 데이터의 이용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 7가지 지출 투명성 관련 우선적 권고사항을 실천할 경우, 데이터 품질 향상 및 연방기금 지출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음
 - 재정 지출 데이터 및 연방 프로그램 목록(federal program inventory)의 연결
 - 명확히 정의된 데이터 요소 개발
 - 데이터 표준 정의 변경 관련 투명성 제고
 - 분기별 지출 데이터 작성 시 연방기관에 기술적 지원 제공 등

4. 조달관리(acquisition management) 기능 개선 및 비용 절감

- 연방 조달 관련 10가지 우선적 권고사항을 실천할 경우, 기관들이 최우선 순위 정보기술(IT) 프로젝트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기타 잠재적인 비용을 절감하도록 할 것이며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 IT 투자 프로젝트에 최고정보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 CIO)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도록 함
 - 연방정부는 매년 900억달러 이상을 IT에 투자하고 있는데, 비용초과 및 일정 지연 문제가 만연한 상황임
 - 이에 GAO는 우선순위가 높은 IT 프로젝트의 감독 강화를 위해 최고정보책임자(CIO)가 프로젝트 감독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것을 권고함
-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 개정
- 범정부적 데이터 문제 해결 등

5. 범정부적(government-wide) 부적절 지출 절감

- GAO의 3가지 우선적 권고사항을 실천할 경우, 범정부적 부적절 지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음
 - '부정지출 방지를 위한 부정수급자 지불 방지 시스템(Do Not Pay working system)' 사용 평가를 위한 감독 체계 구축
 - 연방기관들의 부적절한 지출을 식별하는 지침 개발
 - 부적절한 지출 추정 방법론에 COVID-19 구호 기금을 포함하도록 지침을 개발

6. 정보보안 강화

- GAO의 2가지 우선적 권고사항을 실천할 경우, 연방 정보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음
 - 사이버 보안 관련 회의(CyberStat) 참여 기관 확대
 - '미 연방 위험·승인 관리 프로그램(Federal Risk and Authorization Management Program, FedRAMP)'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승인기관 감독 절차 수립

7. 재난 구호(disaster relief)를 위한 규제 설정

- GAO의 2가지 우선적 권고사항을 실천할 경우, 내부통제계획(internal control plans)을 통해 긴급 상황 시 발생하는 부적절 지출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음
 - 재난 구호 기금 활용을 위한 내부통제계획(internal control plans) 설계 관련 표준지침 개발
 - 재난 구호 기금의 효과적인 감독을 위한 통제계획 전달 전략 개발

8. 성폭력 관련 연방정부 자료 감독기능 개선

- GAO의 1가지 우선적 권고사항을 실천할 경우, 연방 성폭력 데이터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향상시켜 미국 내 성폭력 문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을 것이며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음
 - 성폭력 데이터 수집 기관을 위한 실무단(working group) 구성

9. 연방 부동산 자산 관리체계 개선

- GAO의 1가지 우선적 권고사항을 실천할 경우, 연방정부가 부동산 자산을 보다 능률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음
 - 자산관리지침(asset management guidance) 갱신 등 연방 자산 관리에 대한 기존 정보를 개선

10. 정보 관리체계 개선

- GAO의 1가지 우선적 권고사항을 실천할 경우, 연방기관 기록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음
 - OMB는 자체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기록보관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들이 누락되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GAO는 기록보관 시스템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포함하도록 정책 및 절차 업데이트 기간을 설정할 것을 권고함

참고문헌

- 미국 GAO, “Priority Open Recommendation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21. 6. 24., <https://www.gao.gov/products/gao-21-567pr>, 검색일자: 2021. 10. 21.
- 미국 GAO, “Priority Open Recommendation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21. 6. 24., <https://www.gao.gov/assets/gao-21-567pr.pdf>, 검색일자: 2021. 10. 21.

(작성자: 변이슬 연구원)

증거기반 정책: 증거구축계획과 연간평가계획

- 2021. 6. 30., 미국 관리예산처(OMB) -

〈보고서 추천 배경〉

- ◆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문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진행한 분석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가 필요함
- ◆ 체계적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방법을 바탕으로 수집한 양질의 정보를 활용해야 하며, 자료의 사용 과정을 보호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 ◆ 이 보고서는 양질의 정보를 생성하고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증거 구축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한국의 증거기반 정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소개함

1. 주요 내용 요약

- 증거를 중요시하는 문화는 연방정부 운영의 핵심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증거기반 문화로 전환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증거기반 문화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장이 주도하여 소속기관에 문화를 조성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기관장 등 최고위 관리자에만 국한되어 실행되는 것이 아닌 모든 이해관계자가 증거기반 문화 조성에 참여해야 함
 - 부처는 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활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사용하고, 부족한 분야의 증거를 보완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자국민에게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최종 상태를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뒀야 함
 - 기존의 증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고려해야 하며, 부처 운영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정책의 설계 및 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 활용되도록 해야 함
- 전략적 증거구축계획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증거에 기관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며 즉각적인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루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함
- 체계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진행되는 평가는 프로그램, 기관,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부처는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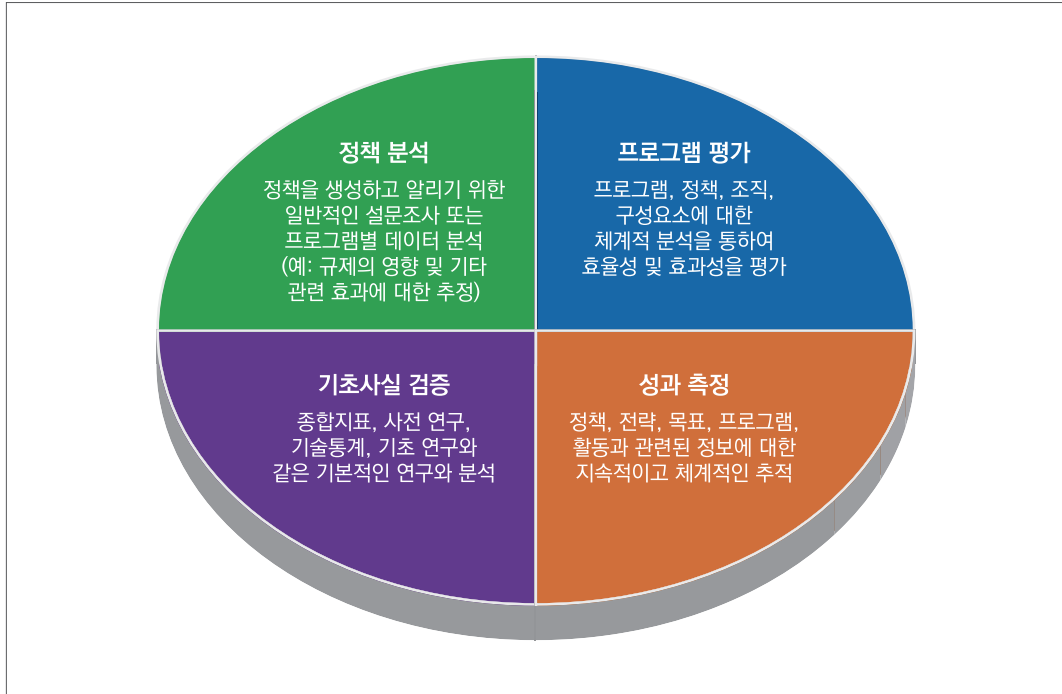
- 프로그램의 시행 초기부터 평가자를 참여시켜 데이터 등의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결과를 프로그램 운영 개선에 활용해야 함
 - 평가 정책은 관련성과 유효성(Relevance and Utility), 엄격성(Rigor), 독립성과 객관성(Independence and Objectivity), 투명성(Transparency), 윤리성(Ethics)을 반영해야 함
 - 기술 전문성을 우선시하고 증거에 기반하는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평가 담당자 등의 인력에 투자하고, 평가자의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전략적인 노력을 해야 함
- 각 부처는 계획의 유연한 성격을 인식하고 해당 부처의 프로그램, 정책, 규정 및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를 활용한 방식 등과 같이 사용한 증거에 대하여 기록해야 함

2. 전략적 증거 구축(Strategic Evidence Building)

- 전략적인 증거구축계획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증거에 기관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부처의 산발적인 분석과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 증거구축계획의 가치는 부처가 새로운 증거를 생성하거나 부처의 우선순위가 변경될 때,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에 있음
- 부처가 증거구축계획과 연간평가계획을 개발하는 과정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고 공정한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
- 협력을 통하여 부처는 중요성이 높고 긴급한 질문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생성할 수 있음
 - 또한, 부처의 직원은 정책이 수혜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점 및 개선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음
- 증거가 구축, 공유 및 적용되고 새로운 우선순위가 등장함에 따라 증거구축계획 및 유사 활동은 관련성을 유지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조정 과정에서 과거에 선행되었던 계획으로 인하여 생성된 증거를 활용해야 함
- 증거구축계획의 핵심은 즉각적인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루기 위한 것이며, 더 나아가 부처의 운영이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의 능력을 개선하는 데 요구되는 사항도 포함해야 함

■ 기관이 구축해야 하는 4가지 유형의 증거

[그림 1] 4가지 유형의 증거



자료: OMB, "Evidence-Based Policymaking: Learning Agendas and Annual Evaluation plans," p. 19.

■ 증거구축계획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따른 증거의 유형과 방법론

- 각 부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정한 방법만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상황에 대한 고려와 다양한 책임자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인지해야 함

〈표 1〉 증거 작성과 관련된 질문, 증거 구축 유형과 방법

질문	잠재적 증거 유형	증거 구축 방법 (아래의 방법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님)
프로그램, 정책, 규정, 조직이 사전 설정된 목표를 달성했는가?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서비스 제공이 계획대로 효과적인가?	성과 측정 (Performance Measurement) 사전에 설정된 프로그램의 성과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수단에 대한 추적 및 보고 • 가치 흐름 매핑 (Value Stream Mapping) • 데이터 대시보드 • 근본 원인 분석
특정 프로그램, 조직, 정책, 집단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참여자, 국민, 조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무엇인가? 결과와 관련된 특징은 무엇인가?	기초사실 검증 (Foundational Fact Finding) 인과관계를 추론하거나 효과를 측정하지 않고 양적 또는 질적 데이터를 통해 프로그램, 정책, 규제, 조직, 모집단을 체계적으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기반 참여 연구 • 민족지학(Ethnography) • 과정 매핑 • 상관관계 분석 • 질적면담 • 문헌연구 • 시간연구(Time Studies)
프로그램, 정책, 규정, 조직이 의도한 대로 실행되었는가? 프로그램, 정책, 규정, 조직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과정평가 (Process/Implementation Evaluation) 프로그램, 조정, 운영, 규제가 의도된 변화와 비교하여 어떻게 구현되는지 평가 (평가대상의 과정, 내용, 양, 품질, 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화된 관측 • 질적면담 • 민족지학(Ethnography) • 프로그램 또는 민원인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행정 데이터 및 조사) • 문헌연구 • 시간연구(Time Studies)
프로그램, 정책, 조직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프로그램, 조정, 정책이 설계된 대로 실행될 수 있는가?	형성평가 (Formative Evaluation) 프로그램, 정책, 조직 접근법 등의 실현 가능성과 적절성 및 허용 가능 여부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 프로젝트 • 구조화된 관측 • 질적면담 • 사례 연구 • 프로그램 또는 민원인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행정 데이터 및 조사) • 지역사회 기반 참여 연구
프로그램, 정책, 규정, 조직의 의도한 결과가 달성되었는가?	결과평가 (Outcome Evaluation) 프로그램, 정책, 조직이 의도한 결과에 대한 달성 정도를 측정하고,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결과에 초점(인과관계 파악이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적면담 • 프로그램 또는 참가자 자료의 분석 • 데이터 연계
프로그램, 정책, 조정, 규정의 작동 여부와 누구에게 효과가 있었는가? 활동이 제대로 수행되었는가?	영향평가 (Impact Evaluation) 활동과 관찰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그램, 정책, 조직의 결과를 추정하고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설계 • 무작위 통제 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 준실험설계 • DID분석 • 회귀단절모형 • 확률추정매칭 등 • 도구변수모형

자료: OMB, "Evidence-Based Policymaking: Learning Agendas and Annual Evaluation plans," pp. 20~22.

참고자료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Evidence-Based Policymaking: Learning Agendas and Annual Evaluation plans,”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1/06/M-21-27.pdf>, 검색일자: 2021. 10. 28.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Phase 4 Implementation of the 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 of 2018: Program Evaluation Standards and Practices,”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0/03/M-20-12.pdf>, 검색일자: 2021. 11. 11.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Preparing, Submitting, and Executing the Budget,”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8/06/a11.pdf#page=638>, 검색일자: 2021. 11. 11.

(작성자: 이응준 연구원)

증거기반 정책수립: 연방기관들의 증거 구축 역량 강화

Evidence-Based Policymaking: Survey Data Identify Opportunities to Strengthen Capacity across Federal Agencies
 - 2021. 7., 미국 감사원(GAO) -

〈이슈 선정 배경〉

- ◆ 미국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설문조사를 통해 연방정부 및 기관의 증거 구축 역량 강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 및 통찰력을 제공하는 보고서를 소개함
- ◆ 이 보고서는 증거기반 정책수립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21년 7월 미국 감사원은 증거기반 정책수립 강화의 일환으로 연방기관의 증거 구축 역량을 분석한 보고서를 소개함
 -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로 다룸
 - 증거 구축을 위한 연방 정부의 노력
 - 증거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증거 구축 및 활용
 - 연방기관 간의 상이한 증거 구축 역량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안

1. 증거 구축을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

- 증거는 양적 및 질적 정보로 구성되며, 성과측정, 프로그램 평가, 연구 및 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에서 도출될 수 있음
 - 미국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는 연방기관들에게 단일 근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의사결정 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증거를 바탕으로 한 포트폴리오는 문제 식별, 프로그램 개선, 중요한 의사결정 및 자원 배분 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
- 연방기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과거 설문조사 결과 및 감사원의 이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사결정에 있어 고품질의 증거를 구축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연방정부 전체의 오랜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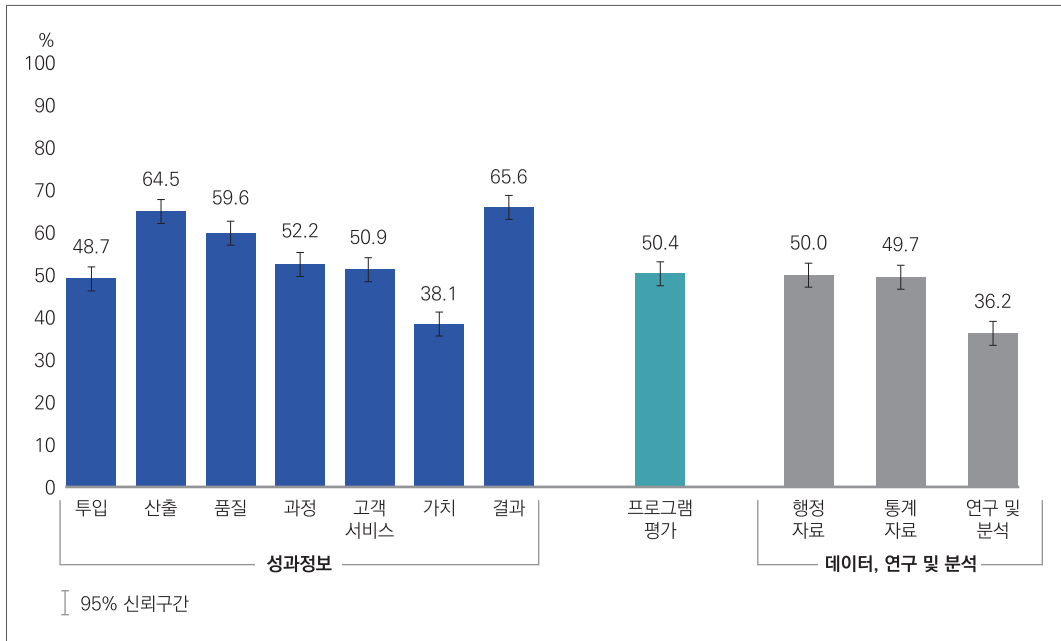
- 증거 가용성: 설문조사에서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질문을 처음 한 해인 2013년과 2017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불충분한 증거로 인해 프로그램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음
 - 증거의 품질: 과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증거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양질의 성과 데이터 및 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음
 - 그러나 2017년 설문조사에서는 이러한 성과 데이터 및 정보의 질을 물어보는 문항에서 관리자 중 절반 미만(약 42%)이 “훌륭”하거나 “매우 훌륭”하다고 답하였음
 - 증거의 활용: 1997년부터 감사원 설문조사는 프로그램 우선순위 설정과 같은 다양한 의사결정 활동에서 관리자들이 성과정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해왔음
 - 2017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의사결정에 대한 성과정보 반영정도가 1997년과 비교했을 때 변하지 않았거나 감소하였다는 결과가 확인됨
- 감사원의 과거 연구에 따르면, 증거 수집 및 구축을 위해서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려는 기관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함
- 연방기관은 직원들이 다양한 증거 구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 고용 및 직원 교육을 통해 관련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함
 - 또한 연방기관 직원들이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분석 프로그램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함
- 하지만 많은 연구에 따르면 연방기관에서 증거를 구축하고, 구축한 증거를 이용하여 실제 적용하는 능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함
- 이에 대통령은 2016년 3월 「증거기반 정책결정에 관한 법률(the Evidence-Based Policymaking Commission Act of 2016)」을 제정하여 위원회를 설립하였음
 - 증거기반 정책결정위원회(Commission on Evidence-Based Policymaking)는 연방정부의 증거기반 정책결정을 돕기 위한 관련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음
 - 2017년 9월, 증거기반 정책결정위원회는 증거를 구축하는 연방기관들의 역량이 불균형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증거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기관들마저 증거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발견됨
 - 이는 이전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증거 구축 및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연방기관의 미흡한 투자를 보여줌

2. 증거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증거 구축 및 활용

- 2020년 감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거의 모든 관리자(약 95%)가 프로그램 진행 시 최소 한 가지 유형의 증거를 기반으로 진행한다고 밝힘
 - 의사결정 시 신뢰할 수 있는 증거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라는 미국 관리예산처의 지침에 따라
 - 약 71%의 관리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까지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증거를 기반으로 진행한다고 보고했으며,
 - 약 35%의 관리자가 세 가지 증거(성과정보, 프로그램 평가, 연구 및 분석)를 모두 활용하여 진행한다고 설문에 답하였음

- 설문조사는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추가로 보여주기 위해, 관리자가 프로그램만을 위한 특정 유형의 데이터와 정보를 어느 정도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음
 - 관리자들 중 절반 이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정보가 증거기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구축된 데이터와 정보의 양이 “훌륭”하거나 “매우 훌륭”하다고 답변함([그림 1] 참고)

[그림 1] 연방기관 관리자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증거의 양이 “훌륭”하거나 “매우 훌륭”하다고 답변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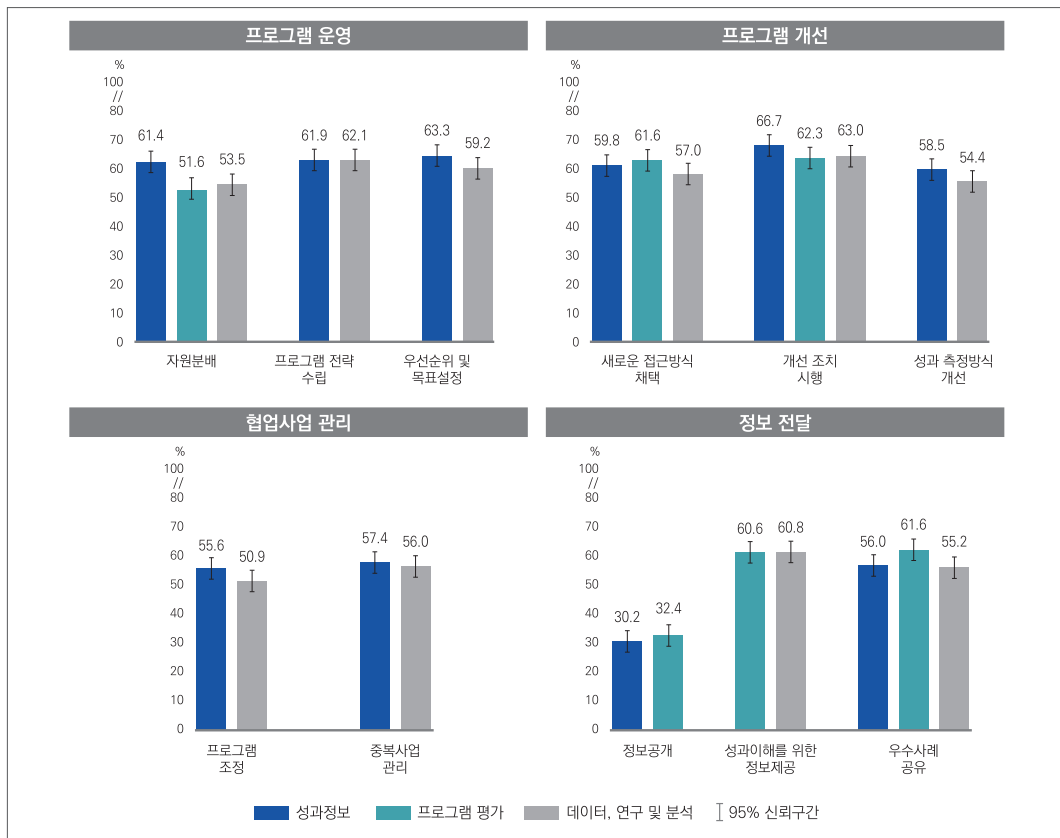


자료: GAO 홈페이지, <https://www.gao.gov/products/gao-21-536>, 검색일자: 2021. 10. 28.

- 감사원은 2020년 설문조사부터 소속기관의 성과정보 및 프로그램 평가에 대해 관리자에게 질문하는 문항을 포함하였음
 - 연방 관리자들 중 절반가량은 자신이 구축하고 있는 성과정보와 프로그램 평가의 질이 “훌륭”하거나 “매우 훌륭”하다고 답변하였으나(약 54%), 소속기관의 성과정보 및 품질에 대한 관점을 폭넓게 묻는 질문에서는 약 42%의 관리자만이 충분한 품질이라고 답변함

-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특정 유형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한 관리자들 중 2/3는, 이러한 증거를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 협업 프로그램 식별 및 관리, 정보 전달 등과 관련된 정책결정 활동 시 활용한다고 보고함
 - 다만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약 30%의 관리자만이 프로그램 성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증거를 활용한다고 보고하였음

[그림 2] 연방기관 관리자가 다양한 증거를 정책결정 활동에 “훌륭”하거나 “매우 훌륭”한 정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한 비중



자료: GAO 홈페이지, <https://www.gao.gov/products/gao-21-536>, 검색일자: 2021. 10. 28.

3. 증거 구축 역량에 대한 연방 관리자의 견해는 기관마다 상이함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존 증거 구축 역량에 대한 연방 관리자의 견해는 기관마다 상이하며, 정부 차원에서 증거 구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짐
 - 프로그램 관리자 중 절반 이상은 현재 프로그램 담당 직원들이 다양한 유형의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소속기관의 직원 역량을 묻는 질문에서는 약 45~47%의 관리자만이 “훌륭”하거나 “매우 훌륭”하다고 답변함
- 미국 관리예산처가 권고한 바와 같이 증거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 직원들의 역량을 파악해야 함
 - 소속기관의 직원들이 다른 유형의 증거로부터 발견한 결과를 통합하고 비교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대략 43%의 관리자가 “훌륭” 및 “매우 훌륭”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함
 - 이러한 설문 결과는 연방기관 직원들이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분석 프로그램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임
- 증거기반 정책결정위원회는 연방정부가 증거 구축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할 필요성과 책임이 있다고 설명함
 - 다만 행정 및 통계자료는 개인정보와 같은 중요한 정보와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증거 구축을 위한 데이터 사용 시 국민의 사생활이 필수적으로 보호되어야 함
 - 또한 데이터의 손실 혹은 훼손이 국민과 연방정부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공신력과 국가 안보에 필수적임
- 설문조사 결과를 세분화한 결과, 감사원은 24개의 기관 간의 역량 격차가 크다는 것을 발견함
 - 연방기관의 기존 역량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에 대한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과 최저 점수를 받은 기관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증거 구축 역량이 기관마다 불균일하다는 증거기반 정책결정위원회의 보고서의 결과와 일치함
- 기존 증거 구축 역량과 관련된 질문 중 정부 전체 평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기관은 16개로 나타났음
 - [그림 3]은 증거 구축 역량과 관련된 질문에 정부 전체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위 7개 기관, 하위 8개 기관, 상위와 하위 역량을 모두 가지고 있는 1개 기관에 대한 표임

[그림 3] 연방기관 관리자가 자신의 기관의 역량이 통계적으로 정부기관 평균 역량보다 높거나 낮다고 응답한 기관

연방기관	직원 역량 (8)				분석 역량 (5)	
	성과정보 (2)	프로그램 평가 (3)	데이터, 연구 및 분석 (2)	교차 증거수집 (1)	성과정보 (2)	데이터, 연구 및 분석 (3)
국립과학재단	+	+	+	+	+	+
항공우주국	+	+	+			+
연방조달청	+			+	+	
노동부	+				+	
보훈부					+	+
사회보장국					+	+
중소기업청		+				
국제개발처	+	-	+	+		+
인사관리처	-		-	-	-	-
주택도시개발부	-		-	-		-
농무부	-				-	-
교육부						-
국토안보부		-	-			
상무부			-		-	
내무부					-	
교통부		-				

+/- Agency result on one of more question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lower than the 2020 government wide average.

자료: GAO 홈페이지, <https://www.gao.gov/products/gao-21-536>, 검색일자: 2021. 10. 28.

- 정부 전체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가 나온 기관은 8곳이었으며, 이는 기관들의 설문 결과가 다른 정부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았음을 시사함
 - 국립과학재단, 항공우주국, 국제개발처, 연방조달청 등 4개 기관은 여러 유형의 증거 구축 역량과 기관 역량 측면(직원 역량 및 분석 역량)에 걸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됨
 - 9개 기관은 통계적으로 정부 전체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결과가 나왔으며, 인사관리처와 주택도시개발부는 여러 유형의 증거 구축 역량 및 기관 역량 측면에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됨
- 감사원은 또한 증거 구축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기관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정부 전체 평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기관은 21개로 나타났음
 - [그림 4]는 증거 구축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및 투자에 관련된 질문에 정부 전체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위 11개 기관, 하위 9개 기관, 상위와 하위 역량을 모두 가지고 있는 1개 기관에 대한 표임

[그림 4] 연방기관 관리자가 자신의 기관의 역량강화 교육 및 투자가 통계적으로 정부기관 평균보다 높거나 낮다고 응답한 기관

연방기관	직원교육 (12)				투자 (3)	
	성과정보 (6)	프로그램 평가 (1)	데이터, 연구 및 분석 (4)	교차 증거수집 (1)	성과정보 (2)	데이터, 연구 및 분석 (1)
국제개발처	+		+	+	+	+
보건부	+		+	+	+	+
연방조달청	+	+	+	+	+	
보훈부	+		+	+	+	
국립과학재단			+	+	+	+
노동부	+		+			
원자력규제위원회					+	+
교통부	+					
중소기업청	+					
항공우주국			+			
사회보장국				+		
환경보호국	+	-				
내무부	-	-			-	-
인사관리처	-				-	-
상무부		-			-	
농무부			-			
교육부						-
국토안보부	-					
주택도시개발부						-
법무부			-			
국무부		-				

+/- Agency result on one of more question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lower than the 2020 government wide average.

자료: GAO 홈페이지, <https://www.gao.gov/products/gao-21-536>, 검색일자: 2021. 10. 28.

- 정부 전체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가 나온 기관은 12곳이었으며, 이는 기관들의 설문 결과가 다른 정부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았음을 시사함
 - 보건복지부, 국제개발처, 연방조달청, 보훈처, 국립과학재단 등 5개 기관은 여러 유형의 증거 구축 역량을 위한 직원교육 및 투자에 걸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됨
 -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교육과 관련하여 현저히 높은 결과를 얻은 기관은 연방조달청이 유일함
 - 10개 기관은 통계적으로 정부 전체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결과가 나왔으며, 미국 내무부, 상무부 및 인사관리처는 여러 유형의 증거 구축 역량을 위한 직원 교육 및 투자에 걸쳐 결과가 도출됨

4. 결론 및 정책 제언

- 의회와 행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연방정부 전반에 걸쳐 증거 구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음
 - 미국 관리예산처와 인사관리처, 관련 기관 위원회는 연방기관에 증거 구축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교육 세션 제공, 모범 사례 공유, 지침 개발, 전문 인력 고용 지원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해왔음
 - 다만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방정부와 개별 기관들의 증거 구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임
 - 2020년 감사원의 설문조사 결과는 정부 전체 관리자의 시선으로 증거 구축 역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그림 3]과 [그림 4]를 통해 연방기관 역량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고 개별 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음
 - 예산관리처는 설문 결과를 분석하고 활용하고, 인사관리처 및 관련 기관 위원회와 협업하여 감사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연방정부 및 기관의 증거 구축 역량 강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참고문헌

미국 GAO, “Evidence-Based Policymaking: Survey Data Identify Opportunities to Strengthen Capacity across Federal Agencies,” 2021. 7. 27., <https://www.gao.gov/products/gao-21-536>, 검색일자: 2021. 10. 28.

(작성자: 심태완 연구원)

정부 차원의 증거구축계획

– 2021. 8. 23., 미국 Performance.gov 뉴스레터 –

〈보고서 추천 배경〉

- ◆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에 근거한 정책평가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예방하고 효과성이 떨어지는 정책에 대하여 구조적 조정을 단행하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달성해야 함
- ◆ 이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 보고서를 한국의 증거구축계획에 도움이 되고자 소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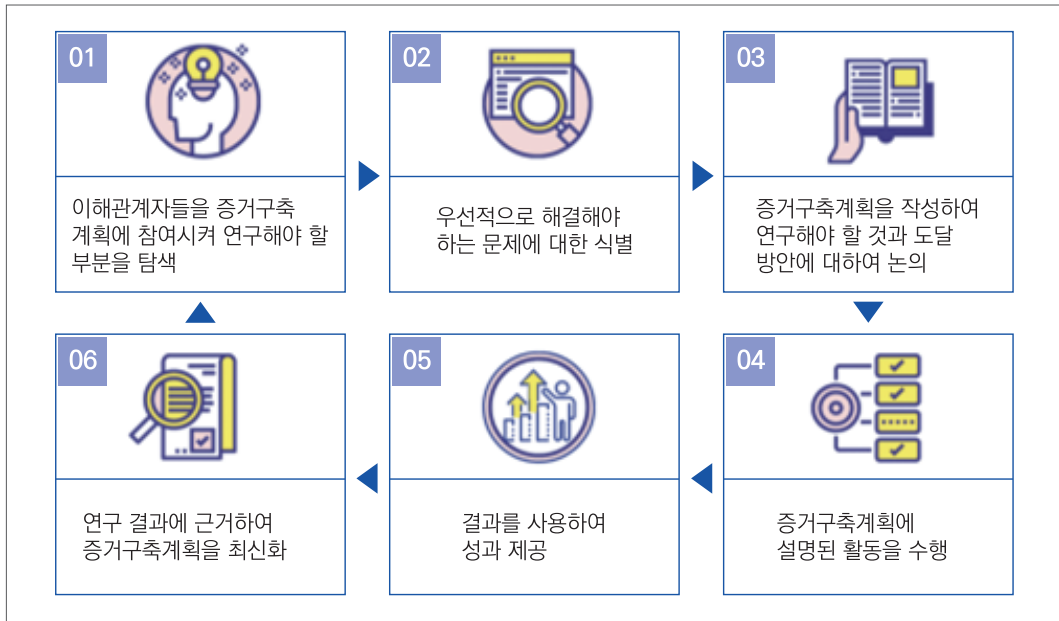
■ 연방정부는 2022년 2월에 증거구축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 증거구축계획을 시행하려는 노력은 증거기반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 전체에 증거기반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줌

■ 정부 차원의 증거구축계획이 필요한 이유(Why a Government-Wide Learning Agenda?)

- 혁신과 학습에 대한 초점을 강화
증거구축계획은 프로그램이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접근 방식이 효과가 있는지, 누구를 위해 작동하는지 배우는 것이며 이는 여러 전후 관계를 바탕으로 적용됨
- 부처 간 연계
가장 시급한 문제 대부분은 단일 부처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정부 차원의 증거구축계획은 여러 기관에서 학습 및 증거구축계획을 조성할 기회를 제공함
- 연방정부 이외의 정부 우선순위에 대한 혁신을 촉진
 - 전국의 많은 연구자, 주 및 지역의 지도자, 실무자가 혁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며 지역 사회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증거를 생성하고 있음
 - 그렇기에 정부 차원의 증거구축계획을 명확하게 전달하면 주정부, 지방정부 및 연방정부에 걸쳐 기관 내부 및 기관 간에 조정된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음

■ 증거구축계획 과정(The Learning Agenda Process)



자료: OMB, "Building a Government-Wide Management Learning Agenda," <https://www.performance.gov/blog/government-wide-learning-agenda/>, 검색일자: 2021. 10. 28.

■ 다음 단계(What's next?)

- 정부 차원의 잠재적인 증거구축계획을 알리기 위한 포괄적인 과정을 개발하여 정부 안팎에서 통찰력을 확보
- 잠재적 우선순위 영역에 따라 답이 없는 주요 질문을 구체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수집
 - 형평성을 증진하고 소외된 지역 사회에 대한 지원방안
 - 국민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방안
 - 정부 프로그램과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

참고자료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Building a Government-Wide Management Learning Agenda," <https://www.performance.gov/blog/government-wide-learning-agenda/>, 검색일자: 2021. 10. 28.

(작성자: 이응준 연구원)

시설자본 기금 제안: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초기자금 조달의 효율성 비교 분석

Capital Fund Proposal: Upfront Funding Could Benefit Some Projects, but Other
Potential Effects Not Clearly Identified
- 2021. 9., 미국 감사원(GAO)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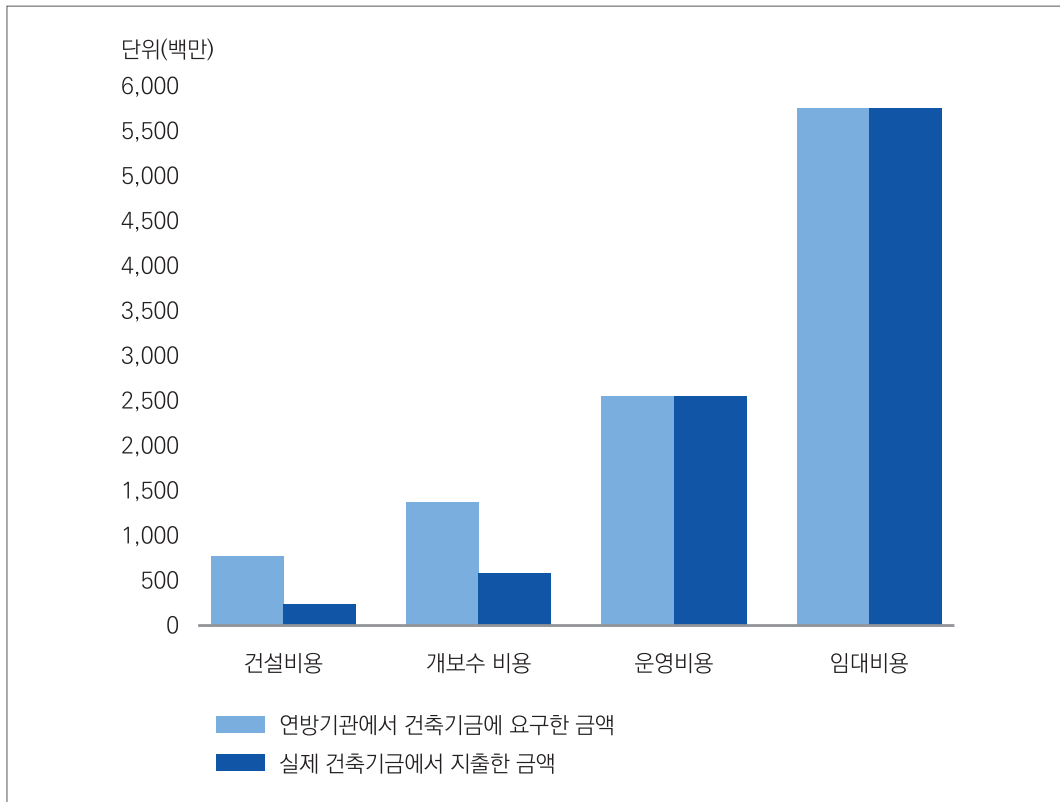
〈이슈 선정 배경〉

- ◆ 미국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한 세 개의 사례를 통해, 청사의 구매·건설·개보수 등을 위한 선제적 예산 반영이 비용 증가 및 일정 지연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제시함
- ◆ 이 보고서는 시설자본 기금(Capital Fund)이 기존 건축기금(Buildings Fund)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규모 자본 프로젝트의 초기자금 조달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배경

- 연방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다양한 관리방법과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연방기관들은 2019 회계연도 기준 약 299,000개의 건물과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상무부와 같은 기관들은 자체 청사를 소유 및 관리하며 이에 대한 예산이 책정됨
 - 상무부와는 다르게 많은 연방기관들은 청사에 대한 자금 조달 및 관리를 미국 연방조달청(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방조달청이 관리하는 건물을 사용하는 연방기관은 연방조달청이 관리하는 건축기금(Buildings Fund)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의회는 연방조달청이 시설물 건설과 취득, 유지보수에 지출할 수 있는 기금에 대한 연간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건축기금을 통제하였으며, 이로 인해 실제 연방기관에서 요구한 시설물 건설 및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함([그림 1])

[그림 1] 연방기관이 건축기금에 요구한 금액과 실제 지출한 금액



자료: GAO 홈페이지, <https://www.gao.gov/products/gao-21-215>, 검색일자: 2021. 10. 28.

- 감사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많은 연방기관은 건물 및 시설물 취득을 위한 초기자금 조달의 부족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설 및 건물의 구매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수 있는 임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해왔음
- 이 보고서는 연방기관의 초기자금 조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 시 보다 비용 효율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임

2. 선별된 프로젝트 분석 결과: 초기자금 조달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음

- 이 보고서는 연방기관들의 청사 건설과 구매, 개보수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한 세 개의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프로젝트에 대한 선제적인 예산 반영이 비용 증가 및 일정 지연 방지를 위해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가 도출됨

- 선별된 세 개의 프로젝트가 모든 연방기관의 프로젝트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선제적인 예산 반영 및 자금 조달을 통해 아래와 같은 결과를 확인함
 - 미국 교통부 청사 건설을 통해, 임대 및 최종 구매 시보다 약 12억달러(명목) 절약
 - 국토안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칼렉시코 국경검문소 설치 프로젝트의 조기완공
 - 미국 표준기술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실험실 개보수 프로젝트의 조기 완공
- 연방조달청이 청사건물 건설에 대한 자금을 초기에 전액 지원받을 수 있었다면, 원래 예상 비용이었던 2억 9,400만달러로 미국 교통부의 청사건물을 건설할 수 있었을 것이라 예상됨
 - 실제 비용은 다를 수 있지만, 이 접근방식은 실제 사용된 선 임대 후 매입 방식에 비해 약 12억달러(명목 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됨
 - 1998년 연방조달청은 미국 교통부 청사건물을 건설을 위해 2억 9,400만달러를 의회에 제안하였으나, 의회는 연방조달청에게 청사건물을 임대하라고 지시하였고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비용으로 7억 5,300만달러가 지출되었음
 - 2020년 3월, 연방조달청은 임대하고 있던 청사건물을 매입하여 추가로 7억 6,800만달러를 지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약 15억달러(명목 달러)가 지출되었음
- 국토안보부가 진행하고 있는 칼렉시코 국경검문소 설치 프로젝트 또한 현재 완공 예정일보다 12년 더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완료할 수 있었을 것이라 예상됨
 - 2007년부터 연방조달청은 칼렉시코 국경검문소의 수용 차량과 보행자를 늘리기 위해 국경검문소 재정비 및 확장을 계획하였으며, 2014년까지 2억 7,500만달러가 지출될 것으로 추정하였음
 - 하지만, 충분한 초기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연방조달청은 여러 해에 걸쳐 전체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분할하였지만, 2014년까지 아무런 자금 지원도 받지 못했음
 - 칼렉시코 국경검문소 설치 프로젝트는 2억 7,500만달러의 예산으로 2014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4억 1,300만달러의 비용으로 2026년 완공이 예정되어 있음
 - 사업 기간 동안 칼렉시코 국경검문소 설치 프로젝트에 주차 공간 및 건물 면적 확장 사업이 추가되어 예산에 대한 절대적 비교는 어려우나, 자금 확보의 어려움은 프로젝트 완공을 지연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

- 미국 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실험실 현대화를 위한 초기자금 지원은 실험실의 개보수 완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 예상됨
 - 1950년대에 완공된 NIST는 2006년에 전체 실험실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 및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NIST는 연구실 개보수가 한 번에 진행될 경우 전체 직원과 진행 중인 업무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했기에, 2010년부터 6년간 7,600만달러의 예산으로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음
 - 하지만 단계적으로 프로젝트를 나눠서 진행하다 보니 항상 요구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으며, 이는 프로젝트의 완공을 지연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
 - 또한, 프로젝트가 연장됨에 따라 개보수 및 현대화 실험실 대상이 3개에서 4개로 확장되어 완공기간이 지연됨
 - 2021년 1월, 이 프로젝트의 개보수 및 현대화 작업은 10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억 2,550만달러가 지출되었고 프로젝트의 완공에는 총 4억 5,180만달러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됨

3. 대규모 프로젝트의 초기자금 조달을 위한 시설자본 기금 제안

- 2018년 6월, 미국 예산관리처는 연방기관이 2억 5천만달러 이상의 비용이 드는 시설을 건설, 구매 또는 개보수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100억달러 규모의 시설자본 기금을 제안함
 - 미국 예산관리처가 제안한 시설자본 기금이 제정되면, 승인된 연방기관은 건설, 구매 및 개보수 프로젝트에 대해 초기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됨
 - 연방조달청은 연방기관과 시설자본 기금 간의 자금 이전을 도우며, 기존에 있던 건축기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 건설 및 구매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연방조달청에 의존하던 연방기관들은 시설관리 기금에서 조달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조달받은 자금은 최대 15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해짐
 - 이를 통해 연방기관은 시설관리 기금으로부터 조달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에 대해 25년에 걸쳐 임대료 공제(Rent credit)를 받게 되며, 이는 연방기관이 시설관리 기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연방조달청에 감면된 임대료를 지급하게 됨을 의미함
 - 25년간의 임대료 공제가 끝나게 되면, 해당 연방기관은 다시 연방조달청 건축기금에 임대료 및 관리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게 되는 구조임

4. 시설자본 기금이 기존 건축기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함

- 제안된 시설자본 기금이 기존 건축기금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없기 때문에 시설자본 기금에 대한 효과는 불분명하지만, 연방조달청과 미국 예산관리처는 서로 다른 견해를 피력하고 있음
- 미국 예산관리처 관계자는 제안된 시설자본 기금이 기존의 건축기금과 독립적으로 운용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함
 - 만일 청사를 임대하는 것보다 구매하는 것이 더욱 비용효율적인 옵션이라면, 초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설자본 기금은 연방기관들에게 더욱 좋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또한 미국 예산관리처는 연방기관이 시설자본 기금을 이용하여 청사를 구매하는 것은 기존 건축기금에게도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시설자본 기금 상환 후에는 다시 건축기금에 임대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건축기금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함
- 연방조달청 관계자는 시설자본 기금이 건축기금에 필요한 수입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 임대료 일부 공제로 인해 연방기관들이 임대료를 기존 건축기금에 지급하는 대신 시설자본 기금을 상환하는 것이 기존 건축기금의 잔액, 현금 흐름 및 운용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함
 - 감사원은 시설자본 기금이 건축기금에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효과에 대해 확인했지만, 잠재적인 효과는 아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복잡하고 불분명함
 - 인수와 관련된 특정 기관의 개입
 - 연방기관이 연방조달청에서 관리되고 있는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로의 이전 여부
 - 해당 건물의 상태 및 현황
 - 임대료를 감면받는 기관의 수
 - 또한, 연방기관의 임대료 공제 기간 중, 연방조달청에서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의 영향도 불분명함
 - 시설자본 기금은 홍수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상당한 보수비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연방조달청에서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을 조달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함
- 연방조달청은 시설자본 기금의 자금 이전을 관리하고 건축기금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두 기금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하고 시설자본 기금을 어떻게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수정안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음

- 연방조달청은 시설자본 기금이 기존 건축기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 시설자본 기금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음
 - 이러한 분석은 미국 예산관리처와 의회가 연방조달청이 마주할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연방기관이 대규모 자본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자금 조달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함에 따라 중요함

5. 결론 및 정책 제언

- 시설물 건설과 구매, 개보수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자금 조달은 프로젝트 총 소요기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이에 미국 예산관리처는 초기 자본을 제공하기 위해 100억달러의 시설자본 기금을 제안함
 - 다만 시설자본 기금은 기존 건축기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험 분석 없이 제안된 사업이므로, 연방조달청은 시설자본 기금이 건축기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예산관리처와 의회에 제공하기를 권고함
 - 분석결과는 미국 예산관리처가 시설기금과 건축기금의 잠재적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의회가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임

참고문헌

미국 GAO, “Capital Fund Proposal: Upfront Funding Could Benefit Some Projects, but Other Potential Effects Not Clearly Identified,” 2021. 9. 10., <https://www.gao.gov/products/gao-21-215>, 검색일자: 2021. 10. 28.

(작성자: 심태완 연구원)

정부성과관리: 범부처 우선순위(CAP) 목표수립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및 권고사항 이행 경과

Government Performance Management:
Key Considerations for Implementing Cross-Agency Priority Goals and Progress
Addressing GAO Recommendations
- 2021. 9., 미국 감사원(GAO) -

〈이슈 선정 배경〉

- ◆ 미국 관리예산처(OMB)은 「GPR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현대화법」 제정에 따라 최소 4년에 한번 연방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범부처 우선순위(Cross-Agency Priority, 이하 CAP) 목표'를 수립하여야 함
- ◆ 이 자료는 미국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이하 GAO)이 제시한 CAP 목표 수립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및 OMB·기타 기관들의 권고사항 이행 경과에 대한 내용을 다룸

1. 검토 배경

- 2010년 연방정부의 성과 향상을 위해 제정된 「GPRA 현대화법」은 연방 성과계획 및 보고체계 통합을 목표로 하였음
 - 「GPRA 현대화법」 제정에 따라 미국 관리예산처(OMB)는 최소 4년에 한번 연방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범부처 우선순위(CAP) 목표'를 수립해야 함
- GAO는 이 보고서를 통해 CAP 목표 수립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및 OMB·기타 기관들의 권고사항 이행 경과에 대해 설명하였음
 - CAP 목표 수립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목표 설정
 - 목표 지도자 및 기여자 식별
 - 자원 식별
 - 성과정보 사용
 - 결과 보고

- 이하에서는 CAP 목표 수립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및 OMB·기타 기관들의 권고사항 이행 경과에 대하여 설명함

2. 목표 설정

- 정부의 정책 최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결과 지향적(outcome-oriented) 미션’과 ‘관리중심적(management-focused) 목표’를 균형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CAP 목표 설정 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를 반영하여야 함
 - 이는 관계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연방정부 전체에 걸쳐 CAP 목표 수립을 위한 강력한 유인을 제공함
- 결과 지향적(outcome-oriented)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 초기 개발 단계에 목표팀(team) 및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함
 - 또한 CAP 목표 지도자는 목표 팀의 활동과 기대되는 결과 간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고, 목표 팀이 성과지표를 이해하고 이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목표 지도자 및 기여자 식별

- 리더십 및 연속성을 제고하고, 기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공동지도자와 하위목표 지도자를 선정해야 함
 - 하위목표 지도자 혹은 전략 지도자를 선정할 경우, 리더십과 연속성을 토대로 CAP 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음
- 목표팀의 역할, 책임 및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히 하고 구성원들이 이에 합의하도록 해야 함
 - 팀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성은 협업을 촉진하며, 명확한 의사결정체계의 확립은 CAP 목표 구현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또한 CAP 목표 실행기준 설정을 통해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을 것임

4. 자원 식별

- 자금·인력·기술 등의 자원을 할당하여야 함
 - 참여기관 관계자 및 관련 기술·역량·인센티브 등을 식별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이 적절하게 조달될 수 있음
- 목표 팀 구성원 간 공유를 위해 경험지식 등을 저장소(repository)에 저장해야 함
 - 학습한 내용을 다루는 카탈로그와 템플릿을 작성하여 목표 팀원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처럼 학습한 경험지식을 저장 및 공유할 경우, 범부처 유사문제 해결 등을 통해 반복 작업을 줄일 수 있을 것임

5. 성과정보 사용

- 목표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 및 품질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함
 - CAP 목표 팀은 성과정보를 사용하여 조직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성과격차(performance gaps)를 파악하고, 개선 목표를 설정해야 함
 - 결과 측정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품질 및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검토가 가능해짐

6. 결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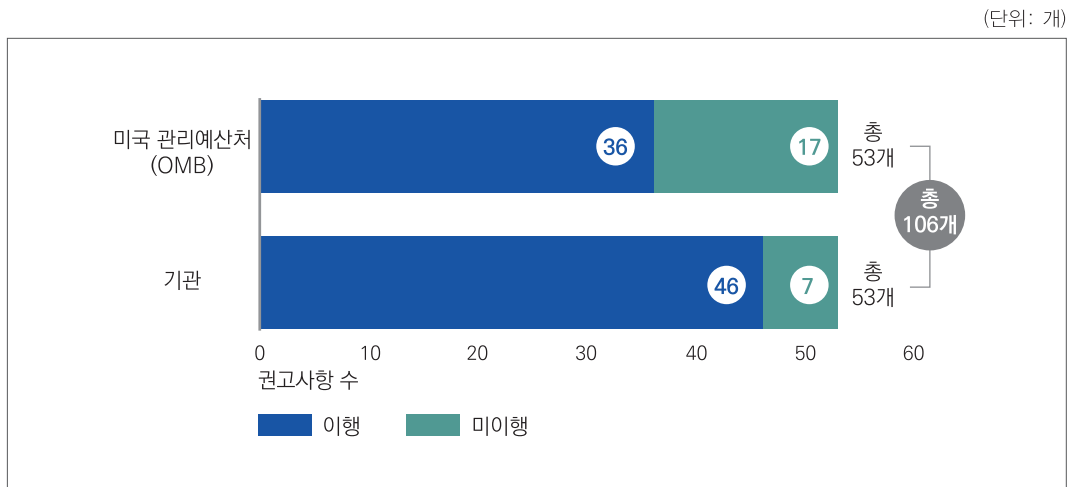
- 성과지표 및 기타 척도 개발을 위해 실행 완료한 조치들을 보고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등의 개발 절차를 구성원에게 명확히 전달하여 해당 조치들이 주요 활동과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참여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목표기간 종료 시 목표 진행 상황을 평가 및 보고해야 함
 - 이는 향후 CAP 목표 수립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발해야 함
 -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수립은 CAP 목표의 가치를 주요 이해관계자 및 대중에게 전달하도록 할 것임

7. OMB 및 기타 기관들의 권고사항 이행 경과

- 그동안 OMB 및 연방기관들은 「GPRA 현대화법」 관련 GAO의 권고사항을 이행해왔으며, 관련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음
 - GAO는 「GPRA 현대화법」 제정 이후 해당 법의 개선을 위해 106건의 권고사항을 제시함
 - 2021년 7월 기준 106개 권고사항 중 82개가 이행되었음
 - [그림 1]과 같이 총 106개의 권고사항 중 절반(53개)은 OMB를 대상으로 함
 - OMB는 36개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으며, 나머지 17개 권고사항은 완전히 이행되지 못함
 - GAO는 그 중 11개를 OMB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권고사항으로 지정함
 - 기관의 경우 GAO가 제시한 53개 권고사항 중 46개를 이행하였으며, 7개는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음

- OMB와 기관은 그간 많은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지만, 24개의 권고사항이 아직 이행되지 못한 상태임
 - GAO는 나머지 권고사항이 실현되면 OMB와 기관이 「GPRA 현대화법」을 통해 정부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그림 1] 「GPRA 현대화법」 관련 GAO의 권고사항 이행 현황
(2021년 7월 기준)



자료: 미국 GAO, "Government Performance Management: Key Considerations for Implementing Cross-Agency Priority Goals and Progress Addressing GAO Recommendations," 2021. 9. 28., p. 23.

참고문헌

미국 GAO, “Government Performance Management: Key Considerations for Implementing Cross–Agency Priority Goals and Progress Addressing GAO Recommendations,” 2021. 9. 28., <https://www.gao.gov/products/gao-21-104704>, 검색일자: 2021. 10. 20.

미국 GAO, “Government Performance Management: Key Considerations for Implementing Cross–Agency Priority Goals and Progress Addressing GAO Recommendations,” 2021. 9. 28., <https://www.gao.gov/assets/gao-21-104704.pdf>, 검색일자: 2021. 10. 20.

(작성자: 변이슬 연구원)

분할·유사·중복 문제 해결: 정부 효율성 향상 및 재정 절감

Addressing Fragmentation, Overlap, and Duplication:
Progress in Enhancing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Achieving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in Financial Benefits
– 2021. 9., 미국 감사원(GAO)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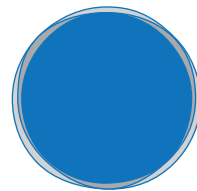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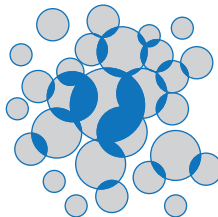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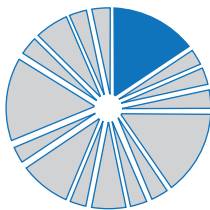
〈이슈 선정 배경〉

- ◆ 미국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이하 GAO)은 연방정부 부처의 분할·유사·중복 사업 실태에 대한 점검내용과 해결조치 권고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 5월 11번째 연례 보고서가 발표됨
- ◆ 이 자료는 의회 및 행정부가 2011년부터 해결한 권고사항과 의회 및 행정부의 추가 조치가 창출할 수 있는 재정 절감 효과에 대하여 설명함
- ◆ 정부 부처 및 행정기관들의 분할·유사·중복사업 관련 개선 조치 내용은 우리나라 재정사업 운영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의회 및 행정부의 조치 해결 현황

- GAO는 분할·유사·중복⁷⁾되는 연방 프로그램에 대해 매년 연례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올해 5월 11번째 연례 보고서를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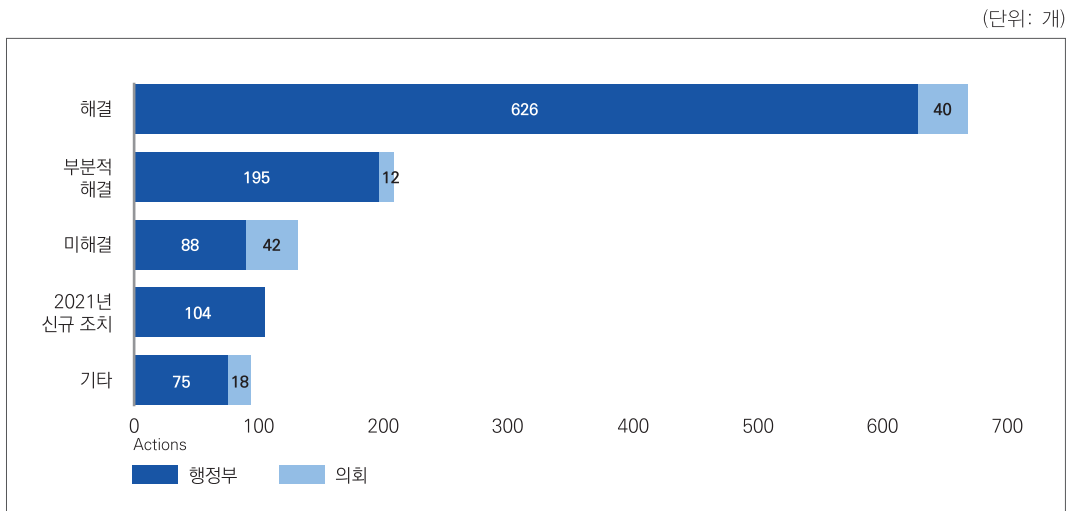
7) 보고서(p. 3)에서는 분할(Fragmentation), 유사(Overlap), 중복(Duplication)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분할(Fragmentation)	유사(Overlap)	중복(Dupl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이상의 연방부처 또는 부처 내 하부 부서가 동일 분야의 서비스 집행에 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 부처의 사업이 유사한 사업 목적 하에 유사한 활동 또는 전략을 구사하거나 수혜자 범위를 유사하게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 부처의 사업이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거나 동일 수혜자에게 같은 효과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

- 의회와 연방기관은 그동안 GAO가 지적한 내용 중 다수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이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5,150억달러 이상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 의회와 행정부는 GAO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재정 절감 및 기관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제시한 1,200개 조치 중 다수를 실행함([그림 1] 참조)
 - 그 결과, 2020년 연례 보고서 발행 이후 확인된 850억달러를 포함하여 총 5,150억달러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었음
 - 아직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나머지 441개 조치를 실행할 경우 수백억달러를 추가적으로 절감하고 정부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임

[그림 1] 2011~2021년 조치 해결 현황(2021년 8월 기준)



자료: GAO, "Addressing Fragmentation, Overlap, and Duplication: Progress in Enhancing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Achieving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in Financial Benefits," 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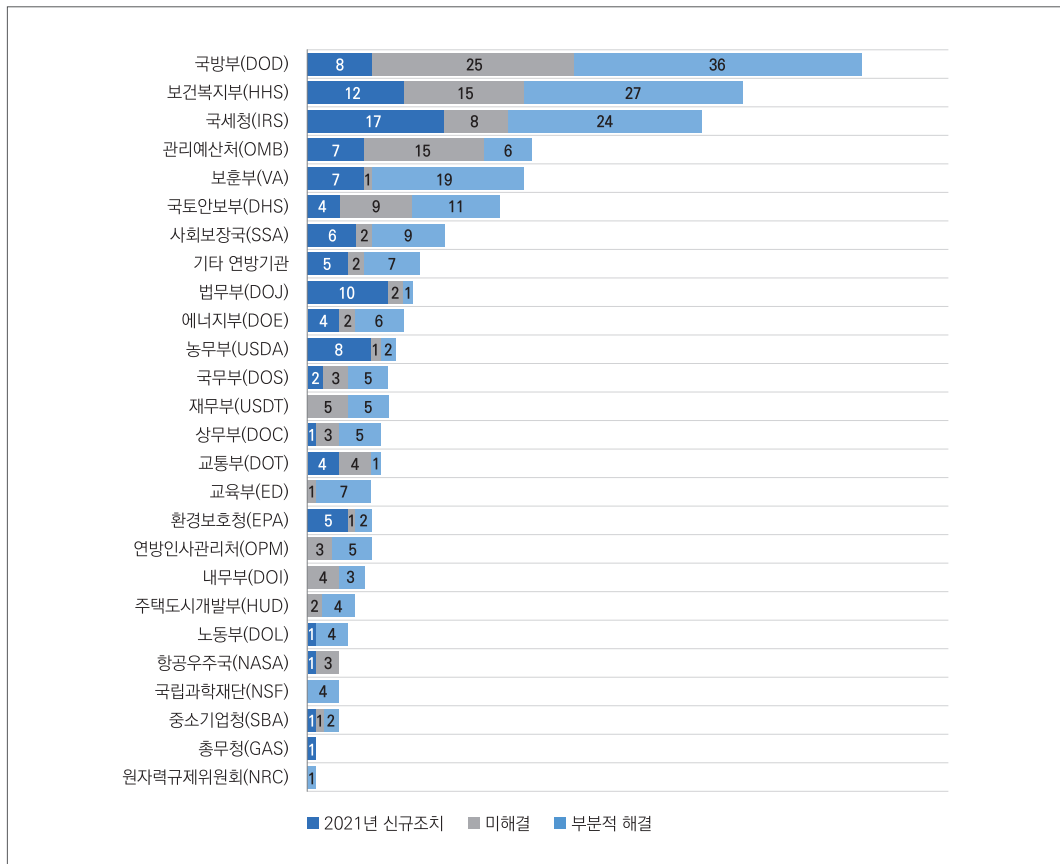
2. 추가 조치가 창출할 수 있는 재정 절감 효과

- 의회와 행정부는 2011년 이후 GAO가 식별한 총 1,200건의 조치 중 666건을 해결함으로써 재정을 절감함
 - 그러나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거나, 2021년 새로 추가된 총 441개 조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의회와 행정부가 미해결 조치를 완전히 해결할 경우 수백억달러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GAO는 설명함

- 2011~2021년 연례 보고서에서 GAO는 의회에 112가지 조치를 제시함
 - 2021년 8월 기준, 112개 조치 중 54개(48%)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임
- 또한 행정부의 경우 1,088건의 조치가 제안되었으며, 그중 387개(약 36%)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임(2021년 8월 기준)
 -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 관리예산처(OMB),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6개 기관은 최소 20개의 조치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음 ([그림 2] 참조)

[그림 2] 부처별 신규·미해결·부분적 해결 조치 수(2021년 8월 기준)

(단위: 개)



자료: GAO, "Addressing Fragmentation, Overlap, and Duplication: Progress in Enhancing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Achieving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in Financial Benefits," p. 14.

- GAO는 의회와 행정부가 잠재적으로 수백만달러에서 수천억달러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하여 설명함(〈표 1〉 참조)
- 또한 글로벌 경쟁력 유지, 국토 및 국가 안보 개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과 같은 기타 이득을 위
해 기관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설명함(〈표 2〉 참조)

〈표 1〉 10억달러 이상의 잠재적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조치 목록

내용	부문	잠재적 재정 절감 효과
에너지부(DOE)의 저준위 방사성폐기물(low activity waste) 처리: 에너지부는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법을 채택함으로써 특정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임	에너지	수십억달러
서비스 장소별 메디케어(Medicare) 지불: 수행되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특정 의료 서비스의 메디케어 지불 비율을 의회가 균 등화한다면,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수십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임	보건	연간 수십억달러
구매전략(Category Management): 관리예산처(OMB)는 구매전략 계획 발전을 통해 기관의 데이터 관리 문제를 해결하 고, 재정 절감 및 잠재적 중복 계약 제거를 위한 성과 지표를 설정하는 등 기관의 재화 및 서비스 구매 방식을 개선해야 함	일반 정부	향후 5년간 수십억 달러
장애 및 실업 수당: 의회는 사회보장국(SSA)이 실업보험 급여와 장애보험 급여를 동시에 지급할 수 없도 록 하는 법안의 통과를 고려해야 함	소득 보장	10년간 22억달러
연방 공유서비스: 관리예산처(OMB)와 총무청(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GSA)은 연방 공유 서비스 개혁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비용 절감 목표를 달성하고 비효율적인 유사·중복 문제를 줄일 수 있음	일반 정부	10년간 20억달러
소득 기준 학자금 상환 계획: 교육부(ED)는 소득 기준 학자금 상환 신청시 소득이 0으로 보고된 자의 소득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함	훈련, 고용 및 교육	10년간 20억달러 이상
해군 선박 건조(Shipbuilding): 미 해군은 구매 관행을 개선하고, 선박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용 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임	국방	수십억달러
국세청(IRS)의 집행 노력: 국세청의 집행능력 및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면 세수 징수 및 자진납세 촉진을 통해 납 부해야 할 세금과 납부한 세금(taxes owed and paid) 간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임	일반 정부	수십억달러

자료: GAO, "Addressing Fragmentation, Overlap, and Duplication: Progress in Enhancing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Achieving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in Financial Benefits," pp. 17~18.

〈표 2〉 잠재적 이득을 위한 행정각부의 조치 목록

내용	부문	잠재적 이득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의 소액대출 프로그램(Microloan Program): 중소기업청은 소액대출 프로그램 분할 문제를 보다 잘 관리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른 연방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함	경제 발전	소액대출 프로그램 관련 협조 및 협업 개선
보훈부(Veterans Affairs, VA)의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 프로그램 분할: 보훈부는 재향군인의료센터 장기요양 프로그램을 보다 잘 관리하고 올바른 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관된 접근 방식을 구현해야 함	보건	재향군인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및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화학 테러: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화학 테러 관련 분할 문제를 보다 잘 관리하기 위해 화학 방어 프로그램 및 활동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계획을 실행해야 함	국토안보 / 법집행	국토안보부의 화학 방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지도, 통합, 협동
연방 연구(Federal Research): 연방기관은 분할 문제 관련 주요 사례를 구현함으로써 미국의 양자 컴퓨팅(quantum computing) 및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 분야 경쟁력 유지를 위한 연구 노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임	과학 / 환경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경쟁력 유지
수입 수산물 감독: 수입 수산물 감독에 대한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과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간 협력을 개선함으로써 기관이 분할 문제를 보다 잘 관리하고 소비자를 위험물질로부터 보호하도록 할 수 있음	농업	수입 수산물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졸업 후 의학교육(Graduate Medical Education Funding) 기금: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는 2015년 연방정부가 145억달러를 지출한 졸업 후 의학교육에 대한 효율성 개선 및 내과의사 교육기금 관련 분할 문제에 대한 감독기능 개선을 위해 보훈부를 포함한 연방기관과 협력해야 함	보건	졸업 후 의학교육 프로그램 검토를 위한 데이터 품질 향상

자료: GAO, "Addressing Fragmentation, Overlap, and Duplication: Progress in Enhancing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Achieving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in Financial Benefits," p. 19.

참고문헌

미국 GAO, "Addressing Fragmentation, Overlap, and Duplication: Progress in Enhancing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Achieving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in Financial Benefits," 2021. 9. 28., <https://www.gao.gov/products/gao-21-104648>, 검색일자: 2021. 10. 20.

미국 GAO, "Addressing Fragmentation, Overlap, and Duplication: Progress in Enhancing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Achieving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in Financial Benefits," 2021. 9. 28., <https://www.gao.gov/assets/gao->

21-104648.pdf, 검색일자: 2021. 10. 20.

미국 GAO, “Health: Medicare Payments by Place of Service (2016-30),” 2021. 8. 31.,
<https://www.gao.gov/action-tracker/health-medicare-payments-place-service-2016-30>, 검색일자: 2021. 11. 15.

(작성자: 변이슬 연구원)

3. 영국

프로그램의 신속한 제공

(Lessons learned: Delivering programmes at speed)
- 2021, 8, 22.,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NAO) -

<이슈 선정 배경>

- ◆ 코로나19와 같이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에서 기존의 계획과 관련이 없던 정책을 통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 신속한 정책적 지원을 위하여 고려해야 하는 부분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관리 방안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기 위해 이 보고서를 소개함

1.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항

- 빠른 속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프로그램 자체와 수행하는 기관 모두에게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에 모든 프로그램이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아님
- 의사결정권자(Decision-makers)는 신속한 프로그램 제공에 앞서 속도의 필요성과 빠른 속도로 인하여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정도, 신속한 제공의 정당성, 영향력 등을 고려해야 함
- 프로그램은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상황과 올림픽 개최, 브렉시트와 같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으며, 정부가 목표한 결과를 더 빨리 달성하기를 원하는 경우 또한 신속한 제공이 가능하나 명확한 근거를 설정하지 못한다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의사결정권자가 빠른 속도로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제공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내부와 조직 전반에 걸쳐 위험의 정도를 파악해야 하며, 위험 선호도(Risk Appetite)를 기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에 대하여 인지해야 함
 - 증가하는 위험과 제한된 재정 및 인력으로 인해 정부는 모든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없음
 - 프로그램 초기 의사결정권자는 제공의 이점과 속도에 대하여 인지하고, 증가한 위험에 대한

감수 여부와 프로그램 제공 내용의 변경 가능성에 대하여 결정해야 함

2.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 의사결정권자가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으면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관리가 요구됨
- 의사결정을 위한 명확한 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목표로 제공 속도를 포함
 - 속도, 비용, 결과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 속도를 포함하여 명확하고 일관된 프로그램 목표를 합의해야 함
 - 속도를 명시된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여 의사결정권자가 속도와 다른 목표를 비교한 후에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속도의 이점, 위험에 대한 평가, 제시시간에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음
- 명확하고 신뢰가 가능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도력과 여러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팀을 구성
 - 프로그램의 리더는 개방성과 협업의 문화를 확립하고 적절한 기술을 갖춘 인재를 적시에 모이게 해야 함
 -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조직 내·외부의 다양한 전문지식을 결합해야 하며,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경우 효율적인 협력의 중요성은 더 증가함
 - 누가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리는지 알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
 - 적시에 인력을 투입하고 명확한 역할을 갖추도록 구성된 거버넌스 구조는 작업의 속도를 지원하도록 맞춤화되어야 하며, 협업을 지원하고 진행 방향을 제공해야 함
 - 간단하고 명확한 구조는 광범위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복잡한 구조는 부처 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를 불분명하게 만들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해야 함
- 프로그램 의사결정에 가치와 추진력을 더하기 위해 프로그램 과정을 조정
 -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발생한 새로운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강력하고 시기적절한 위험관리 과정을 수립해야 함
 - 신속하게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선택한 결정과 위험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 프로그램을 간소화하거나 병렬로 실행
 - 신속한 수행은 예상 경로를 따르지 않기에 투명성이 추가적인 제어수단이 될 수 있음
 - 프로그램 위험에 비례하여 적절하게 보증을 조정해야 함

- 프로그램 제공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대안을 보유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결과물을 고려해야 하며 프로그램의 가장 위험한 측면을 테스트하여 유연성을 유지해야 함
 -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잠재적 문제에 대한 이해, 초기 제한된 정보 아래에서 잘못된 결정에 대한 예방 등을 위하여 양질의 정보를 사용해야 함
 - 데이터를 적시에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치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순간을 파악 가능
 - 신속한 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해서 의사결정권자는 다음과 같은 자료와 정보를 보장해야 함
 - 문제와 관련된 전달사항에 중점을 둔 정보
 -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효율적인 정보 공유
 - 적절한 시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고려
 - 위험 전반에 걸쳐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기 경고지표
 -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예상치 못한 변화를 처리할 수 있는 유연성의 확보가 필요함
 - 다양한 옵션을 유지하거나 프로그램의 범위를 축소
 - 시범프로그램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여 위험에 대한 조기 식별

참고자료

National Audit Office, “Lessons learned: Delivering programmes at speed,” 2021, <https://www.nao.org.uk/report/lessons-learned-from-delivering-programmes-at-speed/>, 검색일자: 2020. 10. 28.

(작성자: 이응준 연구원)

2021년 지출검토

(Spending Review 2021)

– 2021. 9. 7., 영국 재무부(HM Treasury) –

〈이슈 선정 배경〉

- ◆ 영국 재무부의 지출검토는 정부의 재정정책 기초, 재정지출에 대한 우선순위, 향후 다년간 부처의 지출 한도를 포괄하는 문서로, 이를 통해 계획적인 예산 편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2021년 지출검토에서 정부는 다년간의 모든 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검토할 예정이며, 특히 공공부문 개혁과 코로나19를 통해 얻은 생산성 향상을 활용할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둘 것임
- ◆ 향후 코로나19 종식 이후 한국의 상황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됨

1. 지출검토 요청 서한(Spending Review launch letter)

- 2021년 9월 7일, 영국 재무부 장관이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2021년 지출검토(Spending Review)의 개시를 요청함
 - 오는 10월 27일, 2022~2023년에서 2023~2025년까지의 자원 및 자본 예산을 책정한 다년간의 지출검토와 2021년 추계 예산안(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이 발표될 예정임
- 2021년 지출검토에서는 경기회복 및 고용 지원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보장 –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Service, 이하 NHS), 교육, 사법체계, 주택 등에 적절히 투자하여 국민 삶의 질 개선
 - 기회의 평등화, 취약지역 지도자들과 긴밀한 협력 및 잠재력 발굴 – 취약한 민간부문 강화
 - 전국적·세계적인 탄소중립 전환 주도
 - 세계적인 영국(Global Britain)으로의 진전 – EU 탈퇴 기회의 포착
 - 성장 계획의 이행-산업기반시설 및 혁신에 대한 야심찬 계획 집행, 민간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과학 초강대국 실현

2. 공공지출 계획(Public spending plans)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영국 정부는 일자리, 생계 보호를 위해 전국의 기업과 공공서비스에 전례 없는 규모로 지원하였으며, 이로 인해 300년 만의 최악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고용 등 경기 회복에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었음
 - 지난 2020년 지출검토의 핵심 내용으로, 향후 경기 반등과 정책적 도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음
 - 2021년 지출검토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존의 보건·사회·복지 등 시스템 전반의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주요 부처의 공공지출은 실질적으로 연평균 약 4%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는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임
 - 여기에는 2020년 지출검토에서 계획했던 6,000억파운드 이상의 공공부문 투자 계획이 2020~2021년부터 2024~2025년까지 다년간의 공약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계획을 토대로 2021년 공공지출은 자본투자에 대한 단계적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임
 - 각 부처는 이렇게 증가한 지출이 주요 공약 이행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코로나19의 위협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계획 이외에 추가적인 공공지출의 필요성은 인지하되,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해야 할 것임

3. 국정 효율성 보고(Efficiency in government)

- 앞서 7월 14일에 발표한 국정 효율성 보고(Efficiency in government)*에서는 전례없는 전염병 유행과 정부지출로 인해 전반적인 장기적 영향과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음
 - * 국정 효율성 보고(National Audit Office, 감사원)는 2021년 최초 발간되었으며, 이 보고서에서 제기된 이슈는 재정효율화 수단의 가치를 평가할 때 활용할 예정임
 - 정부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으며, 이번 추계 지출검토에서 정부처에 걸친 중기 지출 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 정부는 향후 몇 달, 몇 년에 걸쳐 공공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재정효율성을 높일 전망이다
 -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고 지출한도 및 정책목표를 설정할 것임
 - 영국 재무부는 이번 지출검토를 앞두고 각 부처에 2024~2025년까지 실현가능하고 효율적인

증거기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함

참고자료

GOV.UK, HM Treasury, *Spending Review 2021 launch letter*, 2021. 7. 27.,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pending-review-2021-launch-letter>, 검색일자: 2021. 10. 28.

GOV.UK, HM Treasury, *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 representations*, 2021. 9. 7.,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utumn-budget-and-spending-review-2021-representations>, 검색일자: 2021. 10. 28.

NAO, *Efficiency in government*, 2021. 7. 14., <https://www.nao.org.uk/report/efficiency-in-government/>, 검색일자: 2021. 10. 28.

(작성자: 강경민 연구원)

4. 호주

공공관리, 성과 및 책임성 뉴스레터 발간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 Newsletter, No. 69; 70; 71; 72 –

– 2021. 7. 1., 호주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 –

〈이슈 선정 배경〉

- ◆ 이 자료는 호주 재정부의 2013년 「공공관리, 성과 및 책임성법」(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이하 「PGPA법」)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관리 개혁의제(Public Management Reform Agenda, 이하 PMRA) 관련 소식과 이슈들을 소개하는 뉴스레터(제69호; 제70호; 제71호; 제72호)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1. 디지털 연례보고도구(Digital Annual Reporting Tool, DART)

- 새로운 워크플로시스템 등을 사용할 수 있는 MasterDocs 3.0버전을 배포
 - 새로운 워크플로시스템 등은 디지털우선접근(Digital First Approach)방식을 사용하는 기관(Entity)에 향상된 중단 간 경험을 제공하여 더욱 빠르고 간단하며 직관적인 승인을 가능하게 함
 - ※ 디지털우선접근은 성과보고서(Annual Report)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작성 및 워크플로, 승인에 DART의 사용을 의미함
- DAR team의 두 번째 CoP(Community of Practice) 행사를 6월 11일 개최
 - 디지털우선접근 방식을 사용해 DART 사용을 극대화 하는 데 중점
 - 해당 이벤트는 녹화되며 Digital Annual Reports GovTEAM 커뮤니티의 CoP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음
- DART 워킹그룹 회원 후보 모집
 - DART 워킹그룹은 DART의 향후 개발을 지원하고 안내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성과보고 커뮤니티 내에서 다양한 규모와 기관유형을 대표하고 이에 대한 혜택을 부여

- 지금까지 영연방 비법인기관에서 많은 호응을 해주었으며, 영연방 법인과 회사 등 더욱 다양한 기관들에게도 서비스 제공을 희망함
- 워킹그룹의 구성원은 다음을 담당
 - 주요 전문지식 및 지침 제공
 - 전략적 목표 및 조치를 위한 정보 제공
 - DART 개선 및 향상을 위한 사용자 승인 테스트 참여
 - 합의된 그룹의 책임영역에 대한 진행 상황 보고
- ※ DART 워킹그룹의 구성원에 관심이 있다면 digitalannualreportproject@finance.gov.au로 요청 바람

2. 새로운 성과 규제 가이드

- 2021년 7월 1일, 규제기관의 새로운 성과관리를 제시하는 정부의 새로운 규제기관성과가이드를 출시
 - 규제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모범사례를 장려하며, 규제기관의 전문성을 구축하고 문화적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가이드임(기본편)
 - 새로운 가이드는 세 가지 원칙의 모범사례를 통해 규제기관의 성과관리에 대한 정부의 기대를 설명함
 - 지속적인 개선과 신뢰 구축
 - 위험기반 및 데이터 기반
 - 협업 및 참여
 - 2021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2014 규제기관 성과프레임워크를 대체
 - 규제기관은 더 이상 독립된 성과보고서를 생성 불필요
 - 대신, 규제기관 성과보고는 「PGPA법」 및 규칙에 따라 기업의 보고 프로세스에 통합
 - 보고 첫 해는 과도기 연도로 간주하며 기관은 자율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가장 잘 적절하게 포함하는 방법을 결정
 - 보고 요구사항을 간소화하기 위한 변경사항 등 새로운 성과보고를 위한 지침을 제공
 - 모범사례 연구를 포함하여 전환 중인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는 ‘모범사례 라이브러리’에서 확인 가능

3. 플립 차트의 변경 사항

- 2021년 7월 16일, 「PGPA법」 영연방 법인(CCE) 및 기업(companies)의 새로운 플립차트를 발표
 - 업데이트된 플립차트의 내용은 2021년 7월 2일(2020년 2월 1일에 시작) 북부 호주 기반시설(Northern Australia infrastructure Facility)에 대해 산업, 과학, 에너지 및 자원 포트폴리오에서 인프라, 운송, 지역개발 및 통신으로 이동을 반영

4. 신규 지침 - 영연방 평가

- 정부의 호주공공서비스(Australian Public Services, APS) 개혁의제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새로운 지침에 대해 사용자 테스트 프로그램 참여 및 피드백을 요청
 - 재정부의 정부의 호주공공서비스 개혁의제를 지원하기 위해 평가역량, 전문성 및 관행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지침을 개발
 - 정책 주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정부의 프로그램 및 활동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증거에 기반하여 의도한 혜택이 실현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임
 - 신규 지침은 평가 레퍼런스 그룹과 영연방 전역의 주요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설계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용자 테스트 프로세스를 마련함
 - 두 가지 그룹, 즉 신규 평가대상 그룹(신규 지침의 대상)과 전문가 그룹(신규 지침 자료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그룹)으로 구분하여 피드백을 요청 중임

5. RMG 138 및 139가 새로 출시된 성과보너스 지침을 포함하도록 업데이트

- 호주공공서비스위원회(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 APSC)는 영연방기관(Entities) 및 회사(Companies)의 성과보너스에 적용되는 원칙을 담은 지침을 발표
 - RMG 138 - 영연방기관 성과보고서에 대한 경영진의 보수보고 가이드
 - RMG 139 - 영연방기업 성과보고서에 대한 경영진의 보수보고 가이드
 - 영연방기관 및 회사는 국민을 위한 성과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모든 성과보너스는 기대 이상의 공익을 제공하는 것과 명확히 일치하도록 신중한 설계가 필요
 - 모든 영연방기관 및 회사는 공공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정부로부터의 독립 수준에 관계 없이 보수에 관한 지역사회의 기대에 따라 행동해야 함
 - 영연방기관 및 회사는 성과상여금 사용에 엄격하고 자제해야 함
 - 성과보너스는 의회와 대중에게 정당화되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6. 기업계획 - 출판 기한 마감일정 안내

- 2021~22년 기업계획 발표 기한은 2021년 8월 31일임을 상기시킴
 - 기업 계획을 기관 및 회사의 웹사이트에 게시하기 이전에 담당 장관과 재무장관에게 제공해야 함
 - 2020~21년 회계연도부터 개정된 PGPA 규칙에 따라 다음 같은 사항을 반영해야 함
 - 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주요 활동
 - 이러한 활동이 수행되는 운영 상황
 - 기관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누구와 협력하고 어떠한 협력을 수행하는지
 - 기업이 관리하는 위험과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

7. 영연방 조달 시상

- 2021년 영연방 조달 시상(2021 Commonwealth Procurement Awards for Excellence)을 위한 후보 추천이 곧 마감될 예정이므로 영연방기관 등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수상 카테고리에 후보 지명을 권고
 - 기관 역량 구축
 - 조달을 통한 혁신 제공
 - 중소기업과의 교류
 - 디지털 서비스 조달
 - 디지털 서비스 조달 부문은 올해 새로운 수상 분야임
 - 혁신적인 디지털 지원시장 접근법 또는 혁신적인 디지털 솔루션을 가장 잘 장려하고 가능하게 한 제품 등을 통해 조달 결과가 달성된 사례들을 인정
 - 조달우수센터(Center of Procurement Excellence)는 조달 활동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의 참여를 권장하며 기관들은 하나 이상의 카테고리에 후보 제출을 권고

8. 디지털 성과 보고(Digital Annual Reporting)

- 성과 보고 피크기간으로 2020~21년 성과보고서의 웹 접속 버전은 온라인상(tabling) 작업 후 포털(Transparency Portal)에 게시해야 하는 것이 법적 요구 사항임을 상기시킴
 - DART(Digital Annual Reporting Tool)를 사용하면 PGPA 규칙과 정부의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HTML 버전이 생성됨

- 기관들의 DART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웹 접근성을 향상시킬 사례 연구 및 예시를 담은 새로운 가이드를 출시
 - 사례 연구는 디지털 성과보고서의 특정 구성요소를 대상으로 하고 동료(fellow) 코디네이터의 시연과 팁을 제공하도록 제작됨
- 다음의 사례 연구를 Digital Annual Reports GovTEAMS 커뮤니티에서 이용할 수 있음
 -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와 상호참조 및 하이퍼링크
 - 대체 텍스트가 호주해상안전청(Australian Maritime Safety Authority, AMSA)의 WCAG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
 - 접근성: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 포털에 HTML 성과보고서를 연결
- 사례 연구의 개발을 지원한 보건부, 호주해상안전청,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에 감사를 드리며, 사례 연구 발표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를 희망하는 성과보고서 코디네이터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희망함

9. 신규 DART FAQ – 규제요금 부과 요약표(Regulatory Charging Summary Note table)

- DART에서 규제활동에 대한 과금 사항을 작성하는 것과 관련된 몇 가지 질의사항
 -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DART FAQ 웹 페이지에 다음의 FAQ를 추가함
 - 규제활동에 대한 과금 요약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규제활동에 대한 과금 요약표는 관련 재무제표에 기술된 정보를 불러옴
 - 해당 표는 2015 「PGPA법」 section 34A에 따른 RMG 125 영연방기관 재무제표지침에 따라 작성됨
 - 기관은 규제활동에 대한 과금과 관련된 부서별 및 사업별 수익과 비용 총계를 DART에 보고해야 함
 - 규제활동에 대한 과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RMG 302 호주정부과금프레임워크를 참조 바람

10. 컴커버(Comcover) – 위험 교육

- 영연방 위험관리 정책 검토-업데이트
 - 「PGPA법」 및 규칙의 운영에 대한 독립 검토의 권장사항 41에 따라 재무부 컴커버는 일관성

및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영연방 위험관리 정책을 검토 중임

- 해당 정책은 기업의 위험도(risk maturity)를 개선하기 위해 위험 문화와 행동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검토에 대한 감독을 위해 기관 상호 간의 운영 위원회를 설립하고 범정부적 검토 및 호주 주(state)와 국제 정부의 위험프로세스, 민간부문 및 학문적 통찰력 등을 고려함
 - 8가지 권고안 초안이 합의되었으며 현재 이러한 권고사항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임

■ 영연방 위험관리 우수상 - 후보자 투표를 곧 마감!

- 2021년 영연방 위험관리 시상식이 시작됨
 - 혁신 및 향상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위험관리 관행에서 탁월한 영연방기관을 인정하고 수상하고자 함
 - 지난 몇 년 동안 예외적인 문제가 발생했지만 강력한 기본 위험관리프레임워크의 중요성과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민첩하고 우수한 위험관리 솔루션의 필요성을 강조
 - 추천은 모든 영연방기관에 권장하며, 다음의 카테고리 중 한 가지 이상에서 추천 가능
 - 전사적 위험관리 - 조직 전반에 걸쳐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관행 및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데 탁월함
 - 위험 이니셔티브 - 특정 기관 프로그램/프로젝트 또는 서비스 제공 이니셔티브에 의해 입증된 위험관리의 우수성
 - 수상을 위한 일정은 다음과 같음
 - 후보자 공개 - 2021년 8월 19일
 - 후보자 마감 - 2021년 10월 5일
 - 심사위원단에 제출한 결선 진출자 - 2021년 10월 하순(확정 예정)
 - 시상식 - 2021년 11월 하순(확정 예정)

■ 컴커버(Comcover) 교육 프로그램 - 워크숍 일정

- 컴커버는 COVID-19 팬데믹에 대응하여 대면 위험 워크숍을 온라인에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모든 APS 직원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4가지 수준의 워크숍 가운데 3개의 워크숍이 진행 중임
 - 워크숍이 도움이 된다면 누구든지 컴커버 학습센터에 등록 바람
 -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온라인 및 대면방식으로 진행됨
 - 실질적 위험관리: 단순한 체크표시 그 이상(10. 6_가상워크숍, 11. 16~17.)

- 조직의 DNA에 위험관리 포함(10. 12., 12. 7.)
- 고위공무원(SEs)의 위험관리 프로그램 리더십: 위험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 가이드(11. 2., 12. 8~9., 가상워크숍)

참고자료

호주 재정부,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Newsletter69, 2021. 6. 1., <https://www.finance.gov.au/about-us/newsletters/2021/pgpa-newsletter-69>, 검색일자: 2021. 12. 8.

호주 재정부,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Newsletter70, 2021. 6. 30., <https://www.finance.gov.au/about-us/newsletters/2021/pgpa-newsletter-70>, 검색일자: 2021. 12. 8.

호주 재정부,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Newsletter71, 2021. 8. 13., <https://www.finance.gov.au/about-us/newsletters/2021/pgpa-newsletter-71>, 검색일자: 2021. 12. 8.

호주 재정부,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Newsletter72, 2021. 9. 17., <https://www.finance.gov.au/about-us/newsletters/2021/pgpa-newsletter-72>, 검색일자: 2021. 12. 8.

(작성자: 소준영 연구원)

기업계획 2021-22

(Corporate Plan 2021-22)

- 2021. 7. 23., 호주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 -

〈이슈 선정 배경〉

- ◆ 이 자료는 호주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의 2021~22 기간의 기업계획 중 재무의 우선순위를 설명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부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 호주 재정부의 최근 주요 이니셔티브를 확인하고 제공서비스의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성과관리 항목의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2021~22 기업계획은 보고기간 재무의 우선순위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며 성과프레임워크와 통합된 통합성과사이클을 기반으로 구성됨
 - (목적) 재정은 지출에 대한 조언, 지속가능한 공공부문 자원관리, 공공부문 혁신 주도, 정부에 효율적이고 비용효율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호주 정부가 재정 및 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함
 - (통합성과사이클) 재무의 통합성과사이클은 기업계획과 일치
 - 기업계획은 재 정부가 공공자원의 사용과 책임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함
 - 성과계획은 정기적인 예산 책정 프로세스, 포트폴리오 예산명세서(PBS) 및 성과보고서의 성과 보고를 통해 이루어짐
 - 통합된 비즈니스 계획 및 거버넌스 프로세스는 개인 및 부서 활동을 지시하여 목적을 달성하고 부서의 전략적·운영적 사업계획 간 명확한 시야를 제공함
 - (우리의 접근) 데이터 분석기능의 지속적인 개선과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및 호주공공서비스(Australian Public Services, APS) 전반의 공유서비스 혁신 추진을 위한 책임과 핵심 거버넌스 기능을 유지
 - 공공부문에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브 중 하나인 재정부의 서비스제공부서(Service Delivery Office, SDO)는 표준 및 지속가능한 기술을 제공하여 공공부문 생산성을 직접 지원함

■ (운영 개요) 디지털 기반 솔루션의 채택과 업무방식의 혁신을 장려

- 복잡성·불확실성 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 재무와 광범위한 호주 공공서비스는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함
 - 운영 모델이 보다 일상적인 측면을 자동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직원의 가치를 가장 높이는 방식으로 관행·프로세스·절차를 지속적으로 검토
- 우선순위에 근거한 자원 동원과 프로그램 결과 및 운영에 대한 강력한 조정을 보장
 - 강화된 사례 관리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한 확대
 - 연간 예산 및 관련 경제 정보 업데이트 제공
 - 공유서비스 제공(Grants Hubs, Shared Service Hubs)을 통한 기관 지원 개선 및 호주 공공서비스 디지털 거버넌스, 디지털 기능 및 범정부적 솔루션 보장
 - 호주 공공서비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사적 접근방식
 - 미래 호주 공공서비스 리더 양성(entry-level)에 참여
- 정부에 대한 조언을 강화하고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의 현대화에 중점
 - 정부의 우선순위에 대응한 신규 및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영연방 지출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 평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최근 예산 조치 이행
 - 고객을 위한 현대화된 디지털 서비스 제공
 - 예: 의회비용관리시스템(Parliamentary Expenses Management System, PEMS), COMCAR-자동자원시스템(Automated Resource System, CARS)로의 전환 지원
 - 영연방 투자프레임워크의 발전을 통한 정책결과 제공에 있어 상업적 투자 및 조달 모델을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
 - 비즈니스 최적화 및 기능 기반 업무혁신 연구
 - 서비스제공부서(SDO)의 클라이언트 환영 프로세스(on-boarding) 및 새로운 GoverERP 기술플랫폼 채택을 포함한 공유서비스의 추가 개발

■ (성과) 2021~22년 기업계획 중 성과 부문의 특징은 향후 재정 목적 및 기능, 그리고 우선순위 활동을 보다 명확하게 연결하는 성과프레임워크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함

- 재정부는 보고 사이클 및 문서 전반에 걸쳐 알기 쉽고, 성과정보의 명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활동 및 성과 측정에 대한 설명 등을 업데이트함
- 성과 측정에 대한 변경사항
 - 성과 프레임워크는 재무의 목적 달성에 대한 진행 상황 측정과 관련하여 상당한 세부사항을 제공함

- 기업계획에서 재무는 2021~22년부터 2024~25년까지 보고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19가지 성과 측정을 식별함
- PGPA 프레임워크의 다양한 측면에 걸쳐 더 넓은 범위의 일관성을 지원하고 측정·수집 방법론의 강화, 성과정보의 명확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부 성과 측정 사항을 업데이트함
 - 기존에는 12개 주요 활동 항목에 대한 16개 관련 사업 활동에 대하여 성과를 측정함
 - 주요 활동의 항목은 다음과 같음
 - 1) 예산 업데이트, 세출 법안 및 재무제표 전달
 - 2) 중앙 현금 관리 제공
 - 3) 공공자원의 적절한 사용 및 관리
 - 4) 조달의 비용 대비 가치 실현
 - 5) 영연방기관에 대한 보험 및 위험관리 지원
 - 6) 영연방 자산관리 지원
 - 7) 정부기관과의 협력
 - 8) 투자기금 및 민간 연금제도 활성화
 - 9) 공유서비스를 통한 영연방기관 변화
 - 10) ICT사업을 통한 APS 현대화
 - 11) 장관 및 의회 서비스 제공
 - 12) 재무 유지기간 관리
 - 2021~22년에는 사업 활동의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세 가지 성과 측정 항목을 추가하여 업데이트함
 - 향후 실행전략에 부합하도록 성과 측정을 업데이트함
 - 주요 활동 9. 공유서비스를 통한 영연방기관 변화
 - 9.1. 공유서비스 정책 - 기관 서비스
 - 9.2. 공유서비스 허브가 클라이언트 요구사항을 충족함
 - ※ PBS와의 연결성: 프로그램 2.6 서비스 제공 부서(결과 2)
 - 의회비용관리시스템(PEMS) 개발활동의 발전을 반영하고 중간 및 주요 결과를 식별하기 위해 성과 측정을 업데이트함
 - 주요 활동 11. 장관 및 의회 서비스 제공
 - 11.2. 의회 비용 관리 개선
 - ※ PBS와의 연결성: 프로그램 3.1 장관 및 의회 서비스(결과 3)

〈표 1〉 서비스 제공 주요 활동 및 성과 측정(2021~22년 업데이트 항목)

정부를 위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 주요 활동 및 성과 측정				
핵심 활동 9: 공유서비스를 통한 영연방기관의 변화 - 정책개발 및 공유기술, 표준화된 프로세스 제공을 통한 영연방기관의 변화 지원, 조직관리의 효과 및 효율성 증대	2021-22	2022-23	2023-24	2024-25
성과 측정 9.1.: 공유서비스 정책 - 기관 서비스 - 비법인영연방기관(NCE)을 위한 기관 서비스 기능(예: 재무·인적자원 및 관련 IT시스템)은 공통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에서 공유서비스허브를 통해 제공됨				
이 성과 측정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9.1.1 정부와 기관은 공유서비스 채택에 대한 재무관리, 정책조건, 참여 및 지침에 만족함	√	√	√	√
9.1.2 공유서비스 프로그램과 관련된 결정은 디지털 의제 및 정책과의 연계를 포함하여 범정부적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구현됨				
· 재무부서는 공유서비스 정책과 유사기관 기술플랫폼 및 표준화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채택에 대해 광범위하게 컨설팅함	√	√	√	√
· 기관이 제시한 유사기관 기술플랫폼 채택을 위한 2차 통과 비즈니스 사례는 정부가 동의한 범정부 1차 통과 비즈니스 사례와 일치함	√	√	√	√
9.1.3 벤치마킹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에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함	기준점	√	√	√
방법론: 진행 상황은 주요 이정표,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집한 정보 및 벤치마킹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공유 서비스 프로그램 목표에 대해 측정됨				
성과 측정 9.2.: 공유서비스 허브가 클라이언트 요구사항을 충족함 - 공유서비스 허브인 SDO(Service Delivery Office)는 클라이언트 기관에 고품질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이 성과 측정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9.2.1 다음을 포함하여 서비스의 효율성 및 효과성 측정을 포함하여 클라이언트 기관과의 서비스 수준계약이 충족됨	√	√	√	√
· 클라이언트 요청의 평균 해결시간 10일 이내	<10 일	<10 일	<10 일	<10 일
·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등급 향상	53%	+1%	+1%	+1%
9.2.2 공유, 표준 및 지속가능한 ERP 기술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이점이 실현됨				
· 허브로 알려진 SDO의 공유 ERP 기술솔루션에 대한 클라이언트 활용 증가(전년 대비 증가)	√	√	√	√
· 정부 차원의 전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클라이언트 채택증가(매년 증가)	√	√	√	√
9.2.3 SDO와 그 클라이언트 기관은 범정부 ERP 플랫폼인 GovERP를 채택함				
· SDO 클라이언트 기관이 예상시간 안에 GovERP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			√	√

· SDO 공유서비스 허브를 통해 추가적으로 GovERP를 채택한 클라이언트 기관에 대해 비즈니스사례(Second pass case)를 제공함	√			
방법론: 월 단위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SDO의 양해각서에 있는 7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진행 상황을 측정함. 고객만족도의 진척도는 SDO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측정됨, 공유되고 지속가능한 표준기술과 프로세스의 이점은 성과 보고를 통해 측정됨. GovERP에 대한 접속 및 비즈니스 사례 전달은 공유서비스 운영위원회에 제공된 GovERP 프로그램 상태보고서를 통해 측정됨				
정부를 위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 주요 활동 및 성과 측정				
핵심 활동 11: 장관 및 의회 서비스 제공 - 호주 정부가 결정한 바에 따라 국회의원, 직원 및 기타 사용자가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	2021-22	2022-23	2023-24	2024-25
성과 측정 11.2.: 의회 비용 관리 개선 - 의회 비용 관리의 적시성, 효율성, 명료성 투명성이 개선됨				
이 성과 측정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11.2.1 의회비용관리시스템(PEMS)은 2022년 중반까지 향상된 HR 및 비용관리기능을 제공함	√	√	√	√
11.2.2 의회 의원과 직원의 PEMS 사용 증가				
방법론: 추가기능 제공 및 PEMS를 통해 처리된 청구건 수 증가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결과는 연간 성과보고서에 매년 보고됨				

참고자료

Department of Finance, “Corporate Plan 2021-22,” 2021. 7. 23., available at: <https://www.finance.gov.au/publications/corporate-plan/corporate-plan-2021-22>, 검색일자: 2021. 12. 9.

(작성자: 소준영 연구원)

5. 뉴질랜드

성과보고서 및 세출에 대한 연간 성과정보 준비 지침

(Preparing the Annual Report and End-of-Year Performance Information on Appropriations : Guidance for Crown Entities)
- 2021. 8. 16., 뉴질랜드 재무부(The Treasury) -

〈이슈 선정 배경〉

- ◆ 이 자료는 뉴질랜드 재무부(The Treasury)의 2021년 성과보고서 지침의 신설 규정 및 COVID-19의 영향에 대해 성과보고서 작성 시 권고사항에서 확인된 주요 메시지를 요약·정리한 것임.
- ◆ COVID-19로 받은 영향에 대해 성과보고서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지침 내용을 담고 있음.

1. 2021년 새롭게 변화된 사항 및 고려사항

- 2021년 성과 보고 및 감사에 대한 일정 연장 입법을 제정하여 CEA(Crown Entities Act 2004) 규정상 감사일정을 최대 2개월 연장함
 - 해당 기간 연장은 감사인 부족 문제를 완화하여 견실한 감사의견을 얻기 위한 것으로 2020/21 및 2021/22 회계연도에 적용됨
 - 다음의 일정에는 2020/21년 적용되는 연장된 날짜와 함께 CEA에 따른 성과보고 일자를 적용함
 - Action C.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받음(section 156(2)(b))
 - * 기존 일정: 10월 31일까지 → 연장된 마감 일정: 12월 31일까지
 - Action D. 담당 장관에게 성과보고서를 제공함(section 150(1)(b))
 - * 변동사항 없음. 다만, 기존 규칙이 "C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로 Action C의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받음
- 모든 정부기관은 COVID-19로 받은 영향에 대해 2019/20 성과보고서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함
 - 성과보고서를 만들 때 기관은 두 가지 광범위한 질문을 고려해야 함

- 일상적인 운영 및 활동에 대한 보고와 COVID-19 이후 운영에 대한 보고 간의 균형은 무엇인가?
- COVID-19 관련 업무 보고 시 사용되는 성과정보는 무엇인가?
 - 우수한 성과정보의 특성(성과보고서 및 세출에 대한 연간 성과정보 준비 지침, Page 9 참조)
 - 감사원의 COVID-19 지침(Audit New Zealand의 Bulletin 2, 참조)
- ※ 업무의 성질과 변화 속도는 양적정보와 질적정보의 혼합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

2. 우수한 성과정보의 특성(공공기관 재무보고 기준, Public Benefit Entity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PBE FRS 48)⁸⁾

- 2017년 외부보고위원회(External Reporting Board, XRB)는 서비스 성과보고에 대한 새로운 표준인 공공기관 재무보고 기준 48(PBE FRS 48)을 발표
 - 새로운 기준의 목적은 기관이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서 책임 및 의사결정 목적에 유용한 서비스 성과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원칙과 요구사항을 설정하는 것임
 - (원칙) 기관은 재무제표 및 동일한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에 책임성과 의사결정에 유용한 서비스 성과정보를 표시해야 함
 - 재무제표와 함께 서비스 성과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사용자가 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음
 - (특성)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에 정보의 질적 특성과 전반적인 제약 조건을 적용한 서비스 성과정보를 선택하고 표시하는 것은 공익기관의 개념 체계를 알게 해 줌
 - 정보의 질적 특성: 관련성, 충실한 표현, 이해가능성, 적시성,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 전반적인 제약: 중요성, 비용-편익 및 정성적 특성 간의 균형
 - (충족요건) 서비스 성과정보는 다음을 충족해야 함
 - 사용자에게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 중장기적으로 광범위한 관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이에 대한 진행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현황 정보를 제공
 - 기관이 더 넓은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고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

3. 뉴질랜드 감사원의 COVID-19 지침

- 뉴질랜드 감사원은 COVID-19의 영향에 비추어 성과보고 등에 관한 일련의 지침(guidance in

8) BDO New Zealand, "PBE FRS 48 SERVICE PERFORMANCE REPORTING, BDO New Zealand," 2021. 1. 1.

bulletins)을 개발하였고, 해당 지침은 감사위원회와 재무제표, 성과정보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함

- 현재 COVID-19 상황에서 계속 적용되는 서비스 성과보고의 목표와 핵심은 무엇인가?
 - 보고서의 사용자가 보고기간 동안 기관이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 평가할 수 있음
 - 책임성 및 의사결정을 위한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 서비스 성과정보는 보고기간 동안 기관의 성과를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공정하게 나타냄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관행(GAAP)을 준수
 - 서비스 성과보고서는 평가될 성과를 위해 보고기간 동안 기관의 실제 활동에 대한 충분한 수행정보를 제공해야 함
 - 연초에 합의된 공식적인 성과지표를 포함하여 해당 기간에 계획된 활동
 - 계획되지 않은 중요 활동(예: COVID-19 비상사태에 대응한 신규 또는 상당히 변화된 서비스)
 - 적절한 성과정보(예: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를 고려할 때 기관은 다음을 고려해야 함
 - 다양한 차원의 성과(예: 수량, 적시성 및 품질)
 - 관련성, 신뢰성, 이해가능성, 적시성 및 비교가능성과 같은 유용한 성과정보의 질적 특성
 - 목표 달성 정도 또는 원하는 영향, 결과에 대한 진행 상황과 같은 서비스의 영향에 대한 정보도 중요
 - 기관은 일반적으로 정량화된 목표와 결과로 성과 측정을 보고하지만 성과에 대한 균형 있는 설명을 제공하는 서술적 보고는 일부 상황에서 적절하고 수용 가능함
 - 기관은 보고기간이 시작될 때 공식책임문서에 명시된 모든 성과지표에 대해 보고해야 함
 - 기관은 서비스 성과보고서에서 실제 성과와 해당 연도의 예상성과 간 중요한 차이를 설명해야 함
 - 성과정보는 기관의 성과에 대한 일관된 그림을 전달하기 위해 재무정보와 연계하여 운영될 필요
- 공공기관은 서비스 성과보고에 COVID-19 비상사태의 영향에 대한 정보 공개를 포함해야 하는가?
 - 예, 공공기관이 연중 활동에 대한 COVID-19 비상사태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것을 희망함
 - 공개의 범위는 영향의 수준에 따라 다르며 영향이 제한적이라면 높은 수준의 공개로 충분해 보이며 기관 서비스에 대한 COVID-19 영향이 매우 중대한 경우라면 더 포괄적인

공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정보 공개는 COVID-19 비상사태가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음
 - 다양한 COVID-19 통제수준 가운데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었는지 여부
 - COVID-19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서비스를 축소(또는 증가)해야 하는 정도
 - COVID-19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해당 기간 동안 새롭거나 향상된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 COVID-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이나 자원이 다른 조직에 재배치된 정도
 - 대규모 사회통제(lockdown)가 성과지표 등 보고기관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예: 서비스 성과정보시스템 또는 통제가 폐쇄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 등)
- 정보 공개는 각 기관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개하는 정보는 균형 있고 타당해야 하며 더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영향을 받지 않은 이유를 간략히 기술
-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잡한 기관의 경우 COVID-19 비상사태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가 다르게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데 이러한 기관은 각 활동(지방당국), 결과물(공공기관), 예산책정(정부 부처)에 대한 보고가 포함된 보다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높은 수준의 전체 공개가 적절할 수 있음
- 서비스가 COVID-19 비상사태로 심각한 영향을 받은 경우 서비스 성과보고서에 이를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가?

(CASE 1) COVID-19 비상사태로 인해 서비스 수준이 크게 변경된 성과지표에 대한 보고

 - 기관이 COVID-19 비상사태 동안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서비스 수준을 크게 줄인 경우 성과계획서에 설정된 일부 성과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기관은 계획된 성과수준과 실제 성과수준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제공해야 함
 - 단순히 COVID-19 비상사태로 인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었음을 명시할 수도 있음
 - 마찬가지로 COVID-19 대응기간 서비스 제공이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수준이 높아진 이유를 설명해야 함
 - 일부 기관은 설정된 성과목표의 “달성” 또는 “미달성” 여부를 보고해야 하는데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현저히 줄어든 경우 성과목표는 “미달성”으로 보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정

보공개와 다양한 설명 등은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고려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로 관련 서비스 조치에 대해 COVID-19 통제 이전 기간과 COVID-19 대응으로 영향을 받는 기간, 두 기간으로 나누어 성과를 보고할 수 있음
 - 사용자는 이 접근방식을 통해 “정상”기간 동안 성과가 예상대로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이후 기간 COVID-19 영향을 나타내야 함
- 대상의 특성에 따라 기간에 걸쳐 대상을 비례 배분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목표가 시의회 도서관 방문 횟수인 경우 시의회는 도서관이 개방된 기간 동안 예상방문 횟수를 표시하도록 목표를 할당할 수 있음
- 기관은 보고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사전 통제기간과 이후 COVID-19 대응 영향을 받는 기간 모두에 대한 차이 설명을 제공해야 함

(CASE 2) COVID-19 비상사태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지표에 대한 보고

- 성과보고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성과보고서가 보고기간 동안 기관의 실제 활동에 대한 충분한 성과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는 해당 기간 동안 계획되지 않은 새로운 중요한 활동의 성과도 포함됨
 - 예: COVID-19 비상사태로 인한 새로운 서비스
- COVID-19 비상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신규 또는 크게 개선된 서비스(예: 의료서비스)의 경우 기관은 이러한 서비스 성과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함
 - 기관은 가능한 서비스 성과보고의 핵심원칙을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함
- 긴급한 COVID-19 대응의 비상 특성을 감안할 때, 기관이 다른 외부보고 목적으로 개발·수집한 자료들(성과 측정기준 및 정량화된 정보 등)이 서비스 성과보고에 포함됨이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함
- 적절한 양적 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기관이 COVID-19 비상 대응 서비스에 대한 서술적 성과정보를 포함할 수 있음
 - 이상적으로는 서비스의 범위(예: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 적용범위 또는 사용 자원)와 제공된 서비스의 품질 또는 성과에 대한 사용가능한 정보와 함께 신규 혹은 크게 변화된 서비스를 설명해야 함
- 서비스 성과보고서에는 COVID-19 상황과 관련하여 보고마감일 이후,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 일반적으로 서비스 성과보고는 보고기간에 중점을 둠
 - 그러나 정보가 유용하고 사용자에게 시간 관련성이 있으려면 서비스 성과보고기간과 완성기간 사이에 발생하는 중요 문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여짐

- 예를 들어, 대규모 사회통제(lockdown) 기간 동안 일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관은 성과보고기간과 완성기간 사이에 서비스가 다시 시작되었는지를 공개해야 함
- 서비스 재개에 대한 계획 또는 향후 서비스 제공 계획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이러한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음
- COVID-19 비상 상황에서 서비스 성과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관리를 실패한 경우 어떻게 하는가?
 - 대규모 사회통제(lockdown) 기간 동안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 일부 기관은 해당 기간 성과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을 유지하지 않았을 수 있음(예: 사내 또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불능 등)
 - 이는 성과정보를 보고 할 수 없거나 보고할 성과정보가 있지만 사용된 자료들이 보고된 성과에 대한 확신을 주기에는 증거로써 제한적임을 의미함
 - 기관은 서비스 성과보고서에 다음을 설명해야 함
 - 성과 측정에 대해 성과를 보고할 수 없는 이유
 - 대규모 사회통제 기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조치에 대해 보고된 성과(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사례), 보고된 성과의 정확성·신뢰성 문제, 보고된 성과수준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중대한 한계 등을 초래한 성과보고 시스템 및 통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

참고자료

- The Treasury, “Preparing the Annual Report and End-of-Year Performance Information on Appropriations: Guidance for Crown Entities, Guide,” 2021. 8. 16., available at: <https://www.treasury.govt.nz/publications/guide/preparing-annual-report-crown-entities-html#child-13>, 검색일자: 2021. 12. 9.
- BDO New Zealand, “PBE FRS 48 SERVICE PERFORMANCE REPORTING, BDO New Zealand,” 2021. 1. 1., available at: <https://www.bdo.nz/>, 검색일자: 2021. 12. 9.
- Audit New Zealand, “Implications of the COVID-19 emergency for service performance reporting, Bulletin two,” 2020. 6. 17., available at: <https://auditnz.parliament.nz/good-practice/public-sector-reporting/bulletin-two>, 검색일자: 2021. 12. 9.

(작성자: 소준영 연구원)

6. 아일랜드

2021년 하계경제담화

(Summer Economic Statement 2021)

- 2021. 7. 27., 아일랜드 공공지출개혁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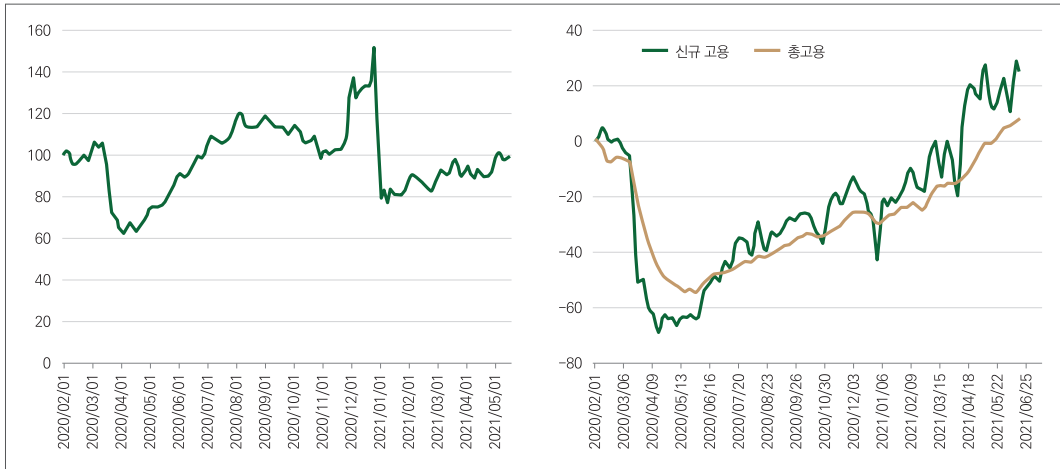
〈이슈 선정 배경〉

- ◆ 아일랜드 공공지출개혁부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대국민 담화 형태의 포럼을 매년 개최함
- ◆ 2021년 7월에 개최된 2021년 하계경제담화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1년 반가량 지난 시점에서 경제 및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규제 완화 등 포스트 코로나(post-pandemic) 시대의 대응이 논의되었으며, 향후 한국의 상황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됨

1. 하계경제담화 주요 내용

- 아일랜드 공공지출개혁부는 2022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정부의 중기 예산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하계경제담화(The Summer Economic Statement, 이하 SES)를 진행함
 - 수정된 국내수요(Modified Domestic Demand, 이하 MDD) 및 고용 현황 등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하계경제담화에서는 이를 코로나19(COVID-19) 관련 공공 보건규제 완화에 따른 강력한 경기 회복의 징후로 보고 있음([그림 1])

[그림 1] (a) 수정된 국내수요(MDD), (b) 신규 및 총고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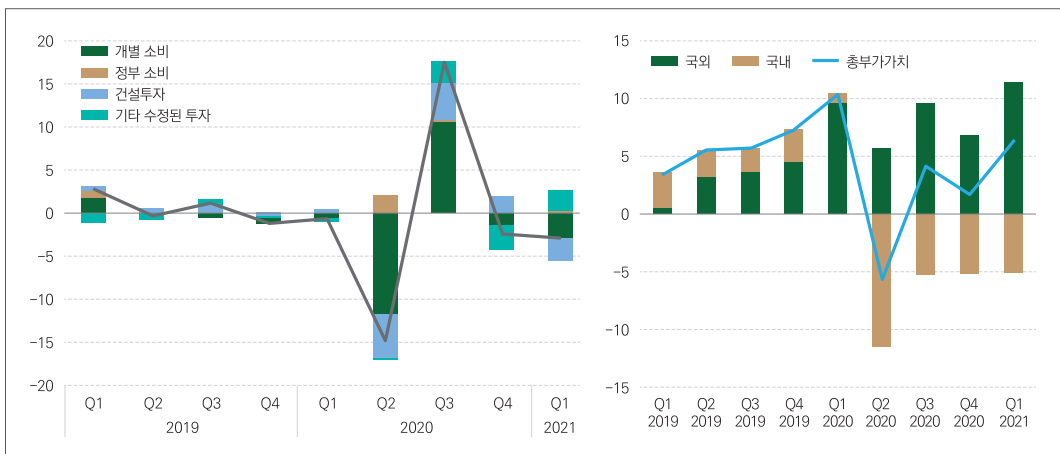


주: (a) 7일 이동 평균, 1인당 지출, 2020년 2월 기준 지수화한 값
(b) 7일 이동 평균, 2020년 2월 1일 대비 변화율

출처: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 수정된 국내수요(MDD)는 작년에 가파른 하락세를 보인 후 반등하고 있으며([그림 2]), 올해와 내년에 각각 2.5%와 7.5%의 성장이 예상됨
- 국내 경기의 정확한 반등 속도는 가계 지출 규모의 정상화 속도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여전히 변수가 될 수 있음

[그림 2] (a) MDD 변화에 대한 기여도, (b) 총부가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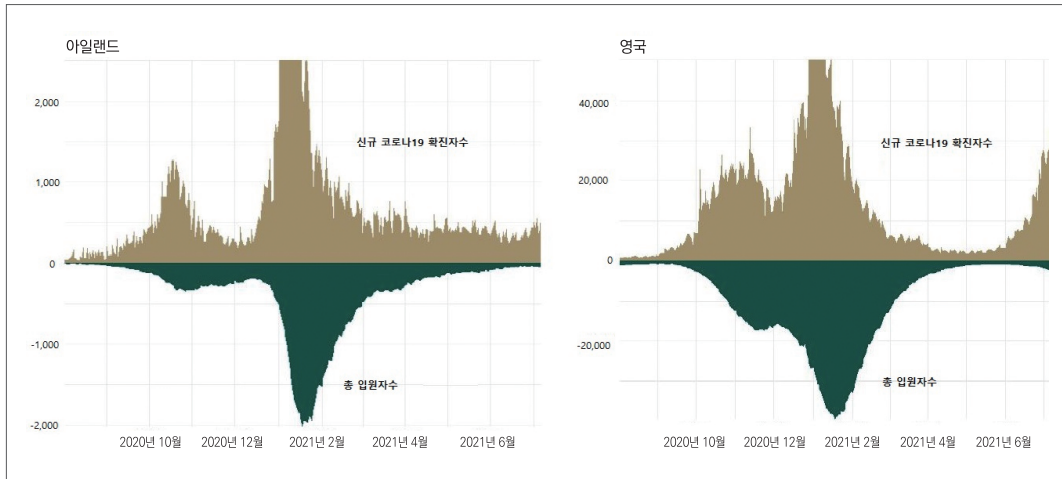


주: 수정된 국내수요(MDD)는 주식, 항공기 임대 투자사업, 순수 연구개발 수입(net R&D imports)을 제외한 개별 소비(private consumption), 정부소비(government consumption) 및 투자(Construction & Other Modified-Investment)의 합을 나타냄

출처: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 지속적인 세수 호조를 바탕으로 국내총생산(GDP)은 2021년 8.75% 증가하였고 세입 또한 전망치 대비 16억유로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반영된 모습을 보임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delta variant) 출현으로 확산세에 따른 우려가 상존하나, 아일랜드의 신규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원자 수 간 관련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그림 3] 백신 접종: 코로나19 확진자 및 입원자 간 관련성 약화



주: 시각화를 위해 Y축이 절단된 형태의 그래프로 표시됨 이 그래프는 매일 보고되는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수(유량 자료)와 병원에 입원한 사람의 총 수(저량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됨

출처: 영국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UK Government)

- 아일랜드 정부는 최근 2년간 코로나19 관련 가계 및 기업 대상 직접지출로 약 380억유로 이상 예산을 확보하였고,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경제회복계획(The Economic Recovery Plan)으로 50억유로가 추가함
- 이에 따라 아일랜드의 예산적자 규모*는 올해와 내년 모두 EU 회원국 중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국민총소득(GNI) 기준 -9.4%, 국내총생산(GDP) 기준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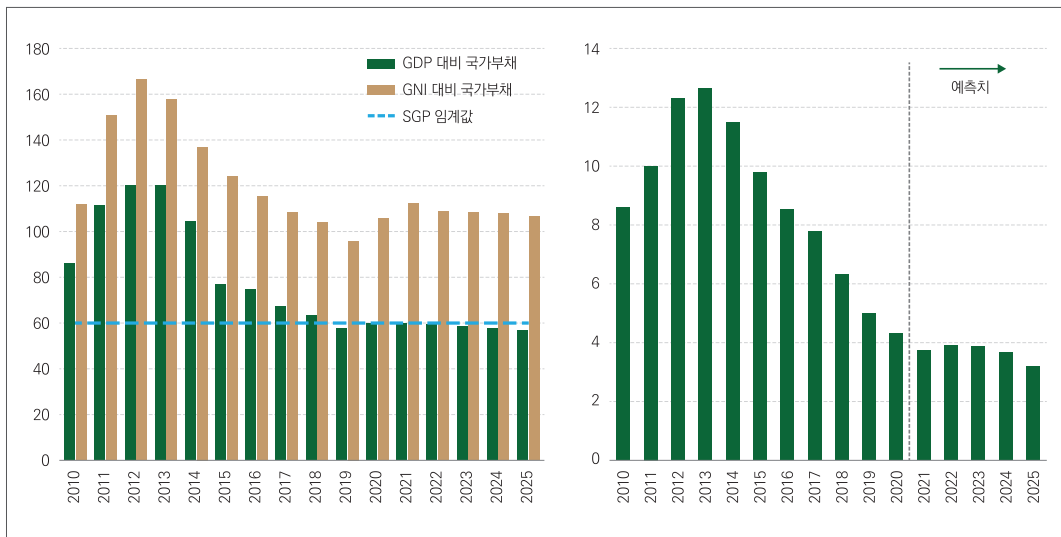
* EU 적자 규모: 몰타(-11.8%), 이탈리아(-11.7%), 벨기에(-10.0%), 유럽지역(-8.0%), EU(-7.5%)

(출처: 유럽 집행위원회 추계예보, 아일랜드 재무부)

2. 중기 예산전략의 핵심 요소

- 정부는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하계경제담화(SES)에서 수립된 중기 예산전략에는 지출규칙 및 정책결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 이 지출규칙 및 정책은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제외한 핵심 지출 증가분이 경제성장 추세를 따라갈 것을 목표로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유럽의 유사 국가들의 재정적자 관련 규칙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
 - 이는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부채 확대를 허용한 흐름과도 일치함
 - 공공재정의 점진적인 복원에 따라 아일랜드의 국가부채비율은 점차 하향 궤도를 밟고 있으며 ([그림 4]),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자금 조달로 인한 일시적 재정지출 증가를 역전시킬 것으로 예상됨

[그림 4] (a) 소득 대비 국가부채, (b) 수입 대비 이자율



출처: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및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공재정의 적자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허용하였으나, 과도한 공공지출로 인한 재정압박은 지속가능한 전략이 될 수 없음
 -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줄어들어 따라 일시적인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른 위기 상황(cliff-edge)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 임금 보조금 제도, 코로나19 관련 규제 지원 및 실업급여 제도 등에 재정지출을 확대함에 따라, 올해 약 203억유로

(국민총소득의 9.4%)의 재정적자가 예상됨

- 정부의 중기 예산전략 중 2022년 핵심 공공지출(코로나19 관련 외 사업)에 전년 대비 5.5% 증가한 801억유로로 책정함
 - 추가적으로, 정부는 80억유로(EU 자금 지원 포함)에 달하는 일시적 재정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그럼에도 국내 경제 회복이 더딜 경우 지출상한선(2022년도 882억유로) 내에서 적자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음
- 중기 예산전략의 핵심 요소는 2021~2030년 기간 개정 자본지출 상한선을 수용하는 것이며,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이하 NDP)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공표될 예정임
 - 따라서 이번 하계경제담화는 2021~2025년 기간의 전체 자본지출 한도를 정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약 5년간 연간순지출증가율은 추정 경제성장률 추세에 따라 약 5% 정도로 예상됨
 - 가결된 총자본투자 금액은 2025년까지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의 약 5% 수준인 136억유로로 증가할 것이며, 이번 투자 규모가 큰 만큼 사회보장제도 및 공공부문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임

3. 결론

-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면 재정균형은 다시 정상 범위로 복귀할 것이고, 여전히 자원의 유한성 하에서 선택해야 할 것임
 - 고령화, 탄소중립 등 이미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장기적인 과제가 남아있으며, 이를 위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에 다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정책의 성과와 효율화에 더 큰 중심을 두고, 보다 향상된 공공서비스와 복지제도, 지속가능한 재정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임
 - 첫째,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기업들을 위해 새롭고 지속가능한 분야로의 전환 지원
 - 둘째, 근로자에게 필요한 기술 및 교육을 제공하여 노동생산성 회복 지원
 - 셋째, 아일랜드 경제에 대한 국제적 신뢰 유지 및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 이를 위한 공공재정 확보
 - 넷째, 브렉시트(Brexit) 이후 환경에서 기업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규제 완화 등 가격경쟁력과 생산성 증대
 - 다섯째, 공공서비스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고령화,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와 같은 장기적인 과제 해결 노력

참고자료

Government of Ireland, 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
Summer Economic Statement 2021, 2021. 7. 27., [https://www.gov.ie/en/
publication/4d84e-summer-economic-statement-2021/](https://www.gov.ie/en/publication/4d84e-summer-economic-statement-2021/), 검색일자: 2021. 10. 28.

(작성자: 강경민 연구원)

2021년 지출검토 보고서

(The Spending Review papers for 2021)
- 2021. 8. 26., 아일랜드 공공지출개혁부 -

〈이슈 선정 배경〉

- ◆ 아일랜드의 지출검토(Spending Review)는 정책수립을 위한 핵심적인 증거자료로서 매년 신규 지출 검토 및 기존 지출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축적된 검토 결과를 중장기 예산 배분 시 활용함
- ◆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향후 한국의 예산 지출 과정 및 재정사업 평가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아일랜드 공공지출개혁부 장관은 2021년 7월 첫 번째 지출검토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지출검토가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부 지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함

참고 아일랜드 지출검토제도

- ▶ 아일랜드 공공지출개혁부(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는 매년 지출검토 보고서를 통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 활용할 각 부처의 정책 계획과 예산 지출 전략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정책 개선에 활용하고 있음
- ▶ 지출검토를 통해 비효율적인 지출을 식별하고 재원을 재배분해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재설정할 수 있음
- ▶ 아일랜드 정부는 공공지출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핵심 요소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존 지출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평가하고 지출의 증가 속도를 완만하게 증가시키는 재정전략을 목표로 함

- 2021년 8월 두 번째, 세 번째 지출검토 보고서를 연이어 발간하였고, 전반적인 정책수립의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함
 - 특히 브렉시트(Brexit) 및 코로나19(COVID-19) 등 핵심 정책과제에 대한 국가의 대응 맥락에서 토론과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핵심적인 정책 도구임
- 본 고에서는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추가로 발간된 12개의 지출검토 보고서를 요약·정리하였으며, 보건, 기업지원, 교육, 사회정책 등 주요 검토 분야와 내용은 <표 1>과 같음

〈표 1〉 아일랜드 2021 지출검토 보고서 주요 내용

분야	제목	주요 내용
보건 (5)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2022-2025년 건강지출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Demographic Change on Health Expenditure 2022- 2025)	이전의 IGEES*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구 통계학적 변화만을 고려할 때 2025년까지 '기존 서비스 수준(Existing Levels of Service)'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예산 추정치를 제공함 * IGEES: Irish Government Economic and Evaluation Service, 아일랜드 정부 경제평가국
	첨단약물(High-Tech Drug)에 대한 지출 계획 검토 (Review of the High-Tech Drug Scheme)	병의원 업계에 최초 적용되는 첨단약물의 조달 및 조제, 관련 지출에 대해 검토함
	피해 감소 및 복구 지원(RHSR)에 대한 중점적 정책 평가: 약물 및 알코올 오남용 분야의 지출 및 성과 분석 (Focused Policy Assessment of Reducing Harm, Supporting Recovery(RHSR): An analysis of expenditure and performance in the area of drug and alcohol misuse)	약물 지출을 분류하고, 약물 사용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약물에 대한 지출의 특성을 최초로 연구하였으며, 5가지 전략목표에 따라 RHSR*의 성과를 평가함 * RHSR: Focused Policy Assessment of Reducing Harm, Supporting Recovery, 피해 감소 및 복구 지원
	2018-2020년 일반 국고 자금조달 (Exchequer Funding of General Practice 2018-2020)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큰 의료비 지출 증가 분야를 검토함. 개별 정책결정의 근거와 그 영향, 코로나19(COVID-19)의 영향 등 지출 요인에 대해 분석함
	COVID-19가 정부지원 대출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COVID-19 on State Supported Lending)	정부지원 대출 제도의 목적과 현황, 수혜자의 특성 그리고 코로나19(COVID-19)가 시장에 미친 영향과 주 정부의 대응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정책개발 과정을 체계화함
기업지원 (2)	자본 지출검토 2006-2020 (Capital Expenditure Review 2006-2020)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업통상고용부(the Department of Enterprise, Trade and Employment)의 자본 지출을 주제별로 분석함
	기업지원 분포 분석 (An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of Enterprise Supports)	2015-2020년 기업통상고용부 산하 기관의 기업지원 분포에 대해 분석함
사회정책 (2)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과제와 전략 (Challenges and Strategies for Reforming Publicly Funded Pensions Systems)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 개혁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정책과제 극복을 위한 전략이 요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최근의 학술 문헌을 소개함
	2021년 사회영향평가: 생활수준평가 - 2019년 소득 및 생활실태조사 결과 (Social Impact Assessment 2021: An Assessment of Living Standards - Results from the 2019 Survey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CSO)이 제공하는 2019년 소득 및 생활실태조사(SILC)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소득, 빈곤 및 각종 사회지표 동향을 분석함. 또한 CSO 특집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COVID-19)가 소득과 빈곤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

분야	제목	주요 내용
교육 (2)	교원 대체 동향 (Trends in Teacher Substitution)	교원(teacher) 대체의 현황 및 추세, 이에 따른 비용 등을 분석함
	교원 배정: 주류 교원 예측 모델 개발 (Teacher Allocations: Developing a Model for Mainstream Teacher Projections)	2020년 지출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학교수준 예상순위에 따라 주류 교원 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측 모델을 개발함
행정 (1)	공무원 노사관계 전문성 평가 (Evaluation of Industrial Relations Expertise in the Civil Service)	정부기관 중 인적자원 분야 직원의 노사관계 및 산업 관련 전문지식이 충분한지 평가하고, 산업 내 비즈니스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와의 협력 등 경영진 능력에 결손(적자) 상황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등을 검토함

출처: 아일랜드 공공지출개혁부, 「지출검토(The Spending Review)」- 1~3부

참고자료

Government of Ireland, 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 *Minister McGrath publishes the first tranche of the Spending Review papers for 2021*, 2021. 7. 30., <https://www.gov.ie/en/press-release/0347c-minister-mcgrath-publishes-the-first-tranche-of-the-spending-review-papers-for-2021/>, 검색 일자: 2021. 10. 28.

Government of Ireland, 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 *Minister McGrath publishes the second tranche of the Spending Review papers for 2021*, 2021. 8. 13., <https://www.gov.ie/en/press-release/0347c-minister-mcgrath-publishes-the-first-tranche-of-the-spending-review-papers-for-2021/>, 검색 일자: 2021. 10. 28.

Government of Ireland, 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 *Minister McGrath publishes the third tranche of the Spending Review papers for 2021*, 2021. 8. 26., <https://www.gov.ie/en/press-release/1ef1a-minister-mcgrath-publishes-the-third-tranche-of-the-spending-review-papers-for-2021/>, 검색 일자: 2021. 10. 28.

(작성자: 강경민 연구원)

7. 프랑스

「재정법」(LOLF) 제정, 20년

(20 ans de la promulgation de la LOLF)

- 2021. 8. 2., 프랑스 재무부(Ministry for the Economy and Finance) -

〈이슈 선정 배경〉

- ◆ 프랑스의 「재정법」(Organic Law on Finance Laws, 이하 LOLF) 제정 20주년을 맞이하여 재정조직법의 정의와 역사, 성공요인에 대해 요약·정리 함
- ◆ 이 자료는 프랑스가 「재정법」을 제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역사를 뒤돌아보고 성공요인의 검토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을 검토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1. 「재정법」(LOLF)의 정의

- 「재정법」은 1959년 제정된 「조직법」을 2001년에 개정한 법안으로, 수단 지향적이었던 예산절차를 성과주의예산 방식으로 수정하였음
 - 성과주의예산은 광범위한 공공정책과 임무⁹⁾(안보, 문화, 교육, 정의 등)로 구분되며, 임무는 프로그램¹⁰⁾으로 세분화 됨
 - 공공정책의 지출은 목표와 목표 달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함께 할당됨
 - 재정법은 각 주 정부를 위해 성과관리연간계획(Projet Annuel de Performance, 이하 PAP)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음 해 성과관리연간보고서(Rapport Annuel de Performance, 이하 RAP)에서 평가됨

9) 임무(mission)는 「재정법」에 따라 하나의 미션을 만들 수 있고 각 미션들은 예산지출 표결 단위임 (김은경, 「프랑스의 재정」, 한국조세연구원, 2012, p. 43.)

10) 프로그램(programme)은 동일한 부처의 일관된 활동들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된 지출을 통합한 것으로, 추후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분명한 목표와 기대 효과를 가져야하며, 사후 평가 대상이 됨(김은경, 「프랑스의 재정」, 한국조세연구원, 2012, p. 43.)

〈성과관리연간계획(Projet Annuel de Performance, 이하 PAP)이란?〉

- ▶ 성과관리연간계획은 「재정법(LOLF)」과 관련된 유기적 법률 제51조¹¹⁾에 따라 재정법안(PLF) 초안에 첨부됨
 - 2006년 「재정법」 이후 성과관리연간계획은 각 프로그램에 대한 전략, 목표, 지표 및 결과 목표를 추적한 후, 규정 초안에 첨부된 성과관리연간보고서(Rapport Annuel de Performance, 이하 RAP¹²⁾)에서 측정됨
- ▶ 성과관리연간계획은 유로 지출에 대한 정보와 비용 분석을 제공하여 지출에 더 나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움
- ▶ 각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법안의 제안을 설명하고, 세 가지 유형의 목표는 각 프로그램의 전략적 우선 순위를 나타냄
 - 세 가지 목표: 사회 경제적 효율성,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효율성

2. 「재정법」의 목표: 투명성 제고 및 의회 역할 강화

- 「재정법」의 주된 목표는 848개 장(chapitres)에서 150개 프로그램으로 축소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임
 - 투명성은 지출에 대한 의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함
 - 감사법원과 의회의 역할에 기초하여 예산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함
- 「재정법」은 재정 법안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는 정부에 의무화하지 않고 예산정책 방향과 관련한 논의를 하도록 제도화 함
 - 토론 후에는 정부가 향후 4년간 경제, 사회, 재정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또한, 임무(mission) 수준에서의 세출통합은 국회의원의 재정 법안(Projet de Loi de Finances, 이하 PLF)에 대한 수정 권한을 강화시킴
 - 예산이 집행되면 「재정법」은 「결산법」(예: 의회가 승인한 예산 권한에 대한 정부의 준수를 통제하는 재정법)을 재평가함

11) 자세한 법률 내용은 https://www.legifrance.gouv.fr/loda/article_lc/LEGIARTI000026788900/ 참조

12) 성과관리연간보고서(Rapport Annuel de Performance, 이하 RAP)는 예산 법안에 첨부되며, 각 프로그램에 대해 예산 법안 초안을 검토 할 때, 성과관리연간계획에서 이뤄진 약속의 이행에 대해 보고함

3. 「재정법」의 역사

- 「재정법」은 1959년 조례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후, 많은 주체들의 참여와 정치적 합의를 통해 발전하였으며,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합의의 기반은 다음과 같음
 - 공적자금의 투명성을 위한 감사법원과 의회의 역할
 - 새로운 공공관리를 촉진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¹³⁾의 역할
 - 1980년대 이후 많은 국가에서 시작된 예산 및 회계 절차의 현대화
 - LOLF는 헌법위원회에 의해 검증이 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주요 역사는 다음과 같음
 - 2001년: 「재정법」 공포
 - 2004년: 「지방재정법」 제정
 - 2005년: 「사회보장재정법」에 관한 유기적 법률 제정
 - 2006년: 「재정법」 시행
 - 2008년: 「공공재정계획법」 제정 및 공공회계 균형목표 수립

4. 「재정법」을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던 근거

- 개혁의 성공은 큰 변화를 지양하는 것에 있었으며, 관련한 원칙은 다음과 같음
 - 정부 및 의회의 재정 특권에 대한 헌법 개정의 부재
 - 사회보장기금 법률과의 관계 수정 부재
 - 이전의 「재정법」과는 달리, 「재정조직법」의 경우 헌법위원회에 제출한 후, 이를 검증하여 투명성을 높임

참고자료

- 프랑스 재무부, <https://www.economie.gouv.fr/lolf-20-ans>, 검색일자: 2021. 10. 12.
- 프랑스 공공행정, <https://www.vie-publique.fr/fiches/21907-comment-la-lolf-t-elle-etepreparee-et-adoptee>, 검색일자: 2021. 10. 12.
- 김은경, 「프랑스의 재정」, 한국조세연구원, 2012, pp. 1~104.

(작성자: 이은솔 연구원)

13) OECD는 국가가 공공정책을 설명하고 목표 설정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시스템보다 세출예산 사용에 있어 상당한 자유도를 부여하는 성과 지향적인 예산 접근 방식 채택을 강조하였음. 이는 프랑스가 「재정법」을 제정하는 데 영향을 줌

「재정법」(LOLF)과 공공재정 개혁에 대한 5가지 질문

(Cinq questions sur la LOLF et la réforme des finances publiques)

– 2021. 8. 19., 프랑스 법률행정정보국(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

〈이슈 선정 배경〉

- ◆ 이 자료는 프랑스의 「재정조직법」 20주년을 맞아 공공재정 및 개혁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재정부의 답을 요약·정리함
- ◆ 이 자료는 「재정법」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개혁해야 할 부분과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2021년 공공재정 개혁의 주요 내용

- 「재정법」은 개정된 지 20년이 지나 예산 관련 논의의 질을 개선하고, 공공재정의 검토 및 통제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 통합 등을 목적으로 개혁을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에 초점을 맞춤
 - 공공재정 관리 개선
 - 공공재정의 투명성 강화
 - 의회 업무의 합리화 및 개선
-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사항의 표기를 제공하며, 대부분은 2023년의 「재정법」에 적용됨
 - 국내총생산(GDP) 포인트가 아닌 백분율로 변환한 유로 단위로 공공지출 목표를 표기
 - 예산 지출 및 수입, 세금, 기타 세금 등을 통일하여 표기
 - 투자비용과 운영비용 구분하여 표기

2. 「재정법」(LOLF)이란 무엇인가?

- 「재정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1959년 1월 2일 조례에 의거하여 국가 예산관리를 개혁하였지만, 2001년 예산관리의 근대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재정법」이 정치적 합의에 의해 제정됨

- 또한 「재정법」은 예산을 보다 읽기 쉽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도입하였음
 - 새로운 관리 모델을 기반으로 한 성과 중심의 관리
 - 예산 목록(예: 임무(mission), 프로그램)
 - 지출과 목적을 평가하는 지표
- 「재정법」의 목적은 보다 큰 책임의 대가로 관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며,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재정민주주의 개선을 위해 의회 역할을 재평가 받는 것에 있음

3. 다년 공공재정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 200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중기재정법률안(LPFP)을 만들었으며, 이후 5개의 다년간 국가계획법(loi de programmation)이 통과되었음
 - 2012년 공공재정계획과 관리에 관한 조직법률은 신재정협약 내의 안정·조율·거버넌스 조약(TSCG)의 조항을 통합함
 - 「조직법」은 중기재정법률안이 구조적인 균형수지를 이루기 위해 정부의 중기 목표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정법」에는 구조적 균형과 정부 인력을 추정 및 예측하는 서론을 포함해야 함
 - 「조직법」은 다년간 예산의 재정지출을 검토하는 독립 기구인 최고공공재정위원회(Haut Conseil des finances publiques)¹⁴⁾를 설립함
- 이러한 틀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중기재정법률안(LPFP)의 시행이 반복적인 실수, 임기까지 적용할 수 없는 반복적인 무능력, 다년간의 실행에 대한 잘못된 표현으로 특징지어진다고 비판함
 - 이러한 비판에 따라 현재 의회에서 검토 중인 해당 법안은 연간 예산 과정 내에서 공공재정에 대한 다년간 방향 범위의 강화를 목표로 함

4. 의회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제안

-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부속기관은 「재정법」 초안을 함께 제출 필요가 있음(디지털 전송 가능)

14) 최고공공재정위원회(High Council of Public Finances, 이하 HCPF)는 「국가재정운용계획법, 사회보장예산안 등 공공재정에 관한 의견 제시, 정부의 거시경제 전망에 대한 의견 제시(자체 분석이 아닌 적정성 평가), 장기 재정 균형 수지와 단년 예산 목표 간 비교를 수행하는 독립적 기관임(국회예산정책처, 『예산춘추』, 2020. vol. 58, p. 69.)

- 공공 부채에 대한 의회 회의는 매년 가을에 진행될 예정임
- 일반 예산, 특별 계정 및 부속 예산의 각 프로그램에 대해 이미 지출하였거나, 사용 가능한 지출은 수정 재정 및 경영 종료 법안과 함께 전달함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 감독 강화 필요

5. 변경된 예산 일정

- 공공재정의 다년간 방향과 관련한 단일 토론은 4월로 변경될 예정이며, 그 후 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과 공공재정 방향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해야 함
- 의원들이 예산 집행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함
- 규정 초안 제출 마감일은 5월 1일로 변경됨
- 「결산법」(la loi de règlement)은 공표된 정책평가업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관리결과 및 당해년도 회계결과의 승인에 관한 법률'로 개칭함

참고자료

프랑스 재무부, <https://www.vie-publique.fr/questions-reponses/281176-cinq-questionssur-la-loi-et-la-reforme-des-finances-publiques>, 검색일자: 2021. 7. 12.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춘추 2020 두 번째』, vol. 58, p. 69.

(작성자: 이은솔 연구원)

2022년 재정 법안

(L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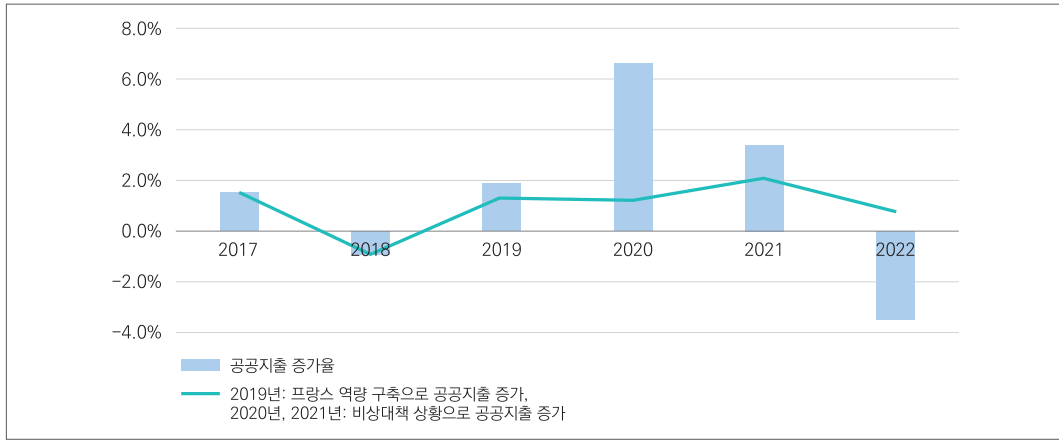
– 2021. 9. 22., 프랑스 재정부(Ministry for the Economy and Finance) –

〈이슈 선정 배경〉

- ◆ 프랑스는 2022년 재정 법안을 9월 22일에 발표하였으며, 이는 공공재정 정상화를 위한 세출 및 재정목표가 담겨있음
- ◆ 이와 같은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재정목표는 우리나라의 코로나 상황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9월 22일, 경제재정부 장관과 공공회계 담당 장관이 2022년 재정 법안을 발표하였으며, 공공재정 정상화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음
 - 2020년과 2021년에는 비상 상황에서 공공 균형을 위한 긴급 조치가 공공부문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면, 2022년 재정안은 공공재정의 점진적인 정상화를 위한 세출 및 재정목표를 반영함
 - 정부 적자는 2021년 GDP의 -8.4% 에서 2022년 GDP의 -4.8% 로 3.5% 포인트 감소할 것이며, 이는 2020년에 비해 약 두 배의 정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 봄부터 시작된 경기회복과 백신 적용범위 확대 지속으로 2021년 큰 반등(+6%) 이후, 2022년에는 지속적인 성장(+4%)이 가능할 전망이며, 이를 유지하면 2021년 말까지 활동이 위기 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됨

[그림1] 공공지출의 증가



출처: 프랑스 재무부, <https://www.economie.gouv.fr/projet-loi-de-finances-2022-plf#>

- 공공 적자의 급격한 감소와 2022년 국내총생산(GDP)의 지속적인 반등의 영향으로 부채는 2020년 GDP의 약 114포인트 비율로 2020년 115포인트의 가파른 성장 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의무부과율은 2020년 GDP의 44.5%에서 2021년 43.7%, 2022년 43.5%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야 하며, 기업과 가계가 납부하는 감면세가 지속됨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보건 위기 상황에서 주정부의 예측 수입은 2021~2022년 반등할 것으로 예측됨
 - 2021년의 순 세수는 2,786억 유로로 초기 예산법률(Loi de Finances Initiale, 이하 LFI) 2021의 예측보다 207억 유로, 수정예산법안1(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이하 LFR1)에 비해 196억 유로 증가할 것임

<표 1> 공공재정 추이

GDP 대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공공 적자	-2.3	-3.1	-9.1	-8.4	-4.8
공공지출 규모 증가	-0.9	1.9	6.6	3.4	-3.5
의무공제율	44.7	43.8	44.5	43.7	43.5
공공지출 비율	54	53.8	60.8	59.9	55.6
공공 부채	97.8	97.5	115	115.6	114

출처: 프랑스 재무부, <https://www.economie.gouv.fr/projet-loi-de-finances-2022-plf#>

- 2022년에는 경제 상황이 정상화 되어 정부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세부적으로 세수는 2021년에 비해 134억 유로가 추가로 증가한 2,920억 유로에 달할 것이며, 주로 소득세(+53유로), 부가가치세(+51억 유로) 및 법인세(+3.1억 유로)가 인상될 예정임
- 지출 둔화와 수입의 증가로 2022년에는 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프랑스 재무부, <https://www.economie.gouv.fr/projet-loi-de-finances-2022-plf#>, 검색일자: 2021. 10. 12.

(작성자: 이은솔 연구원)

재정 법안(Projet de Loi de Finances, 이하 PLF) 2022: 공공재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개혁

(PLF 2022: des réformes pour renforcer la gouvernance des finances publiques)
- 2021. 9. 22., 프랑스 재정부(Ministry for the Economy and Finance) -

〈이슈 선정 배경〉

- ◆ 2021년 5월 '공공재정 현대화 관련 국가조직법'이 발의되었으며, 해당 법안은 재정구성법의 강화에 목적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재정의 구조 개혁을 제안함
- ◆ 이 자료는 공공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프랑스의 노력을 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재정 관련 법령 또는 재정성과관리를 검토 및 개혁할 때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공공재정 현대화를 위한 「국가조직법」

- 2021년 5월 국회 재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총괄보고자가 발의한 '공공재정 현대화 관련 국가조직법'이 대표 발의됨
- 이에 따라, 2022년 금융법안의 언론보도 자료에는 공공재정의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주요 개혁 방안이 명시됨
 - 경제 위기라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지난해 봄, 국회는 재정운용 현대화를 위한 국가조직 법안을 상정하였음
 - 2001년 8월 1일 「재정법」(LOLF)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나고 법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국가조직 법안은 공공재정의 구조 개혁을 제안함
- 법안을 제정하는 목적은 「재정법」(LOLF)을 강화하여 공공기관이 공공회계 관리 문제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 「조직법」은 다년간의 공공재정 전략을 강화하고 제정관련 문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됨
 - 위 법안은 단순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 전반 통합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며, 공공 재정 운영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이 외에도, 예산 일정을 유럽 일정과 일치시킴으로써 단순화를 추구함

- 공공재정 관련 정책 논의는 안정성 프로그램 논의와 통합되며, 공공정책 평가 또한 '준계평가'의 법적 인정과 함께 강화됨


2. 통합 공공관리 책임 실현

- 정부는 2022년 공공 행동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 관리자의 유연성과 책임을 강화하여 새로운 신뢰의 틀에서 효율성과 지속성을 증대시킬 것을 약속함
 - 이러한 약속은 모든 공무원, 회계사 및 인가 담당자에 대한 새로운 통합 책임체제를 만들 수 있음
 - 개선사항 중 하나는 지출 담당 공무원과 통제 및 지급 담당 공무원으로 나뉘어 있는 현 재정 책임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임

참고자료

프랑스 재무부, <https://www.budget.gouv.fr/reperes/budget/articles/plf-2022-desreformes-pour-renforcer-la-gouvernance-des-finances-publiques>, 검색일자: 2021. 10. 12.

(작성자: 이은솔 연구원)



Ⅱ. 재정성과관리 연구 동향



CONTENTS

1. 국내연구 동향
2. 국외연구 동향

Ⅱ. 재정성과관리 연구 동향

1. 국내연구 동향

무상보육정책의 추가출산 제고 효과 분석

– 이지민·임병인, 『재정학연구』, 제14권 제3호, pp. 23~51 –

〈보고서 추천 배경〉

- ◆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매년 감소하여 2020년 0.83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음
- ◆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논란이 이어져 왔음
- ◆ 이 연구는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소개함

1. 연구목적

-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함
 -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용 불안정, 여성 취업 증가로 인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기피, 과도한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등이 지적되어 왔음
 - 이를 해결하려는 정책 대안 중 하나로 보육정책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여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육정책의 효과를 실증함
 - 보육정책의 효과가 무자녀 가구보다는 기존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추가출산 여부로 이어지는지를 실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분석을 진행함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 자녀 이상을 둔 유배우 기혼여성들이 무상보육정책 시행 이후 실질적으로 추가출산을 했는지 밝혀 무상보육정책의 출산 제고 효과를 실증하는 것에 목적을 둠

2. 보육정책 변화

■ 본 장에서는 한국의 보육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함

- 한국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나,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하였으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점차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왔음(〈표 1〉, 〈표 2〉, 〈표 3〉 참조)

〈표 1〉 가정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 수준 변화 과정(일반가구 기준)

구분	12개월 미만	12~24개월 미만	24~36개월 미만	36~84개월 미만
2009. 7. 2010	차상위계층 이하 월 10만원	-	-	-
2011	차상위계층 이하 월 20만원	차상위계층 이하 월 15만원	차상위계층 이하 월 10만원	-
2012 2013~2019	소득무관 월 20만원	소득무관 월 15만원	소득무관 월 10만원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보육·교육비용 추정연구(V)』, 2017, p. 49.

〈표 2〉 유아학비·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추이

(단위: 천원)

연도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3세	만4세	만5세		
2011	394	347	298	197	177	177	59	59	59		
2012			286			200	59(30)				
2013			406	357	295	220	220	220	60	60	60
2014			430	378	313						
2015			430 (344)	378 (302)	313 (250)						
2016	441 (344)	388 (302)	321 (250)	220	220	220	60	60	60		
2017	454 (354)	400 (311)	331 (258)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보육·교육비용 추정연구(V)』, 2017, p. 42.

〈표 3〉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변화 과정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2003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기준 - 법정저소득층 100% 지원 - 차상위계층은 40% 지원					저소득층 무상
2004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기준 - 차상위계층은 60% 지원 - 소득 50% 이하는 40% 지원					
2005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기준 - 법정저소득층 100% 지원 - 차상위계층은 80% 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80% 무상
2006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기준 - 법정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 소득 50% 이하는 70% 지원 - 소득 70% 이하는 40% 지원 -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 및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인정액 기준 상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90% 무상 농어촌은 100% 무상
2007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기준 - 법정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 소득 50% 이하는 80% 지원 - 소득 70% 이하는 50% 지원 - 소득 100%는 20% 지원 -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 및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인정액 기준 상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기준 100% 무상
2008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기준 - 법정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 소득 50% 이하는 80% 지원 - 소득 70% 이하는 60% 지원 - 소득 100%는 30% 지원 - 자녀 수에 따른 차등지원 및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인정액 기준 상이					
2009.7.~2010	영유아가구 소득 기준 - 소득하위 50% 이하 100% 지원 - 소득 60% 이하 60% 지원 - 소득 100% 이하는 30% 지원 -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 및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인정액 기준 상이 - 2010년은 맞벌이가구에 대한 지원 신설					영유아가구 소득 기준 70% 이하 무상
2011	영유아가구 소득 기준 - 소득 70% 이하는 100% 지원			영유아가구 소득 기준 70% 이하는 100% 지원		영유아가구 소득 기준 70% 이하 무상
2012	소득무관 100% 지원					소득무관 100% 지원
2013	소득무관 100% 지원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보육·교육비용 추정연구(V)』, 2017, p. 40.

3. 데이터 및 분석방법

- 이 연구에서는 2013년 시행된 무상보육정책의 추가출산 제고효과를 실증하기 위해 1~7차 『여성가족패널조사』를 사용함
 - 이 자료는 전국 대표성을 갖춘 9,068가구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 9,997명을 패널로 구축하여 2007년 1차 조사, 2008년 2차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2년 주기로 조사됨
 - 여성의 출산력자료가 자세히 조사된 국내 유일의 조사자료이면서 많은 표본 수를 확보하고 있는 장점이 있기에 데이터로 활용함
 - 이 연구에서는 가임기여성 15~49세이면서 한 자녀 이상을 둔 유배우 기혼여성의 출산력 자료를 사용했기에 첫째 자녀의 출산연도는 1차 조사(2007년) 시점 이후에 태어난 자녀로 한정함

-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분석방법을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여 진행함
 - 분석방법 I: 각 가구의 마지막 순위 자녀의 태어난 해가 2012년(무상보육정책 시행) 전후인지를 더미변수로 만들어 무상보육 혜택의 여부를 의미하는 정책변수로 활용
 - 2012년을 기준시점으로 사용한 이유는 보편적인 무상보육정책은 2013년에 시행되었으나, 2012년부터 0~2세, 5세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100% 지원이 시작되었기 때문
 - 1~2자녀 이상을 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정책의 시행으로 둘째 또는 셋째 자녀 출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추정
 - 분석방법 II: 각 가구의 마지막 순위 자녀의 태어난 해가 2015년 전후인지를 더미변수로 만들어 무상보육 혜택의 여부를 의미하는 정책변수로 활용
 - 2015년을 기준시점으로 삼은 이유는 무상보육의 경험으로 추가출산을 계획하여 실제 출산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기간을 3년으로 가정하였기 때문
 - 기존 자녀들이 모두 무상보육 혜택을 받는 경우, 즉 2012년 이후 태어난 자녀일 때, 3년 뒤 추가출산 제고효과가 있는지를 추정하는 것과 관련됨

4. 결론 및 한계

- 분석 결과 무상보육은 추가출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에 둘째 자녀의 추가출산에 효과를 주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첫째 자녀에 대하여 무상보육 혜택을 받으면서 양육하면 3년 후 추가출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저출산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 무상보육정책을 1자녀 가구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거나 보육료 지원 외에 출산과 양육에 따른 기회비용을 충분히 상쇄시켜줄 다른 방식의 지원
예시: 자녀돌봄 재택근무 활성화, 마을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확대
 - 출산 순위별로 출산 제고의 결정요소가 다름을 고려하여 자녀 수에 맞는 맞춤형 저출산 해소 대책 수립의 필요

- 한계
 - 무상보육정책 시행 이전의 소득계층별 차등 보육수혜자를 무상보육 비수혜자에서 제외하지 않아 과소추정의 가능성이 있음

참고자료

이지민·임병인, 「무상보육정책의 추가출산 제고 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제14권 3호, 한국재정학회, 2021. 7. 19., pp. 23~51.

(작성자: 이응준 연구원)

2. 국외연구 동향

통제 수단? 의회와 대통령 성과관리 개혁 비교

(Tools of Control? Comparing Congressional and Presidential Performance Management Reforms)

– Alexander Kroll, Donald P. Moynihan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021. 7.

Volume, Issue, pp. 599~609

〈보고서 추천 배경〉

- ◆ 미국은 1996년 「정부업무수행성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이하 GPRA)을 시작으로 2002~2008년의 사업평가측정기법(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이하 PART), 2011년 「정부업무수행성과선진화법」(GPRA Modernization Act of 2010, 이하 GPRAMA) 등의 제정을 통해 성과관리제도를 개혁함
- ◆ 이 논문은 성과관리법의 특징을 분석하고, 설문조사 데이터를 통해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점들을 파악하여 추후에 재정성과관리제도를 보완 및 수정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 미국은 성공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성과관리 개혁을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성과관리는 각 대통령 시기의 관료제 성격을 보여줌
 - 1996년 「정부업무수행성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이하 GPRA)을 시작으로 2002~2008년의 사업평가측정기법(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이하 PART), 2011년 「정부업무수행성과선진화법」(GPRA Modernization Act of 2010, 이하 GPRAMA)으로 개혁되어 왔음
- 이 연구는 「정부업무수행성과법」, 「정부업무수행성과선진화법」, 사업평가측정기법 각각의 특징을 살펴본 후, GAO가 실시한 연방정부 관리자에 대한 네 가지 설문조사(2000년, 2007년, 2012년

및 2017년)를 데이터로 사용하여 성과정보의 사용 여부를 통해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봄

- 또한, 「정부업무수행성과법」(GPRA), 「정부업무수행성과선진화법」(GPRAMA)의 경우 의회가, 사업평가측정기법(PART)는 대통령(행정부)이 주도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통해 개혁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봄

〈표 1〉 GPRA, PART, GPRAMA 성과관리법 비교

	「정부업무수행성과법」 (GPRA)	사업평가측정기법 (PART)	「정부업무수행성과 선진화법」(GPRAMA)
기간 (대통령)	1993년 (클린턴)	2002~2008년 (부시)	2010년~ (오바마)
주체	의회의 초당적 법 개혁	행정부 중심	의회의 초당적 법 개혁
필수 요소	· 전략적인 계획 수립 · 목표 설정 및 측정 · 장기 및 단기 데이터	· 프로그램 평가 기반 · 30문항의 5점 척도에 기초한 등급	· 기관 우선 순위 · 범부처 우선 순위 · 분기별 검토

■ GPRA는 기관들이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에 대해 보고한 후,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의회 중심의 법 개혁을 통해 성과 개혁에 대한 경영진 중심의 접근방식을 타파하고, 의회 중심으로 행정부가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는 연속성을 추구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의회는 이러한 협의에 대체로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부시 행정부는 GPRA는 성과 조치가 각 부처의 직원들에 대한 감시 및 보상을 하거나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하였음
- 부시 행정부는 행정부를 중심으로 각 기관의 성과를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PART를 도입함

■ PART는 프로그램 목적 및 설계, 전략적 계획, 프로그램 관리 및 결과·책임성 등을 포함하고 있는 설문지로, 각 기관이 미국 관리예산처(OMB)에 해당 프로그램 관련 설문지를 제출하면 OMB는 자체 판단에 따라 점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함

- PART는 GPRA, GPRAMA와 비교하여 의회가 아닌 행정부 중심이라는 차이점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통제를 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함
 - 초기 분석에서 진보기관과 보수기관 간의 차등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함
 - 진보적인 기관의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낮은 PART 점수를 받았으며, 그 예로 교육부는

국방부 예산의 10만분의 1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국방부에 비해 더 많은 PART 분석을 실시하였음

- 이처럼 정치적인 차등이 있었음이 밝혀지며, 민주당 의원들은 PART를 반대하였고, PART는 법령으로 제도화되지 못하였음
-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PART를 중단하고 GPRA를 이어 GPRAMA를 시행하였음

■ GPRAMA는 GPRA의 장·단점, PART의 장점을 반영하여 오바마 행정부부터 트럼프 행정부까지 시행되고 있음

- GPRA와 PART는 직원들이 데이터 생성 및 배포에 시간과 노력을 쏟도록 지시하였지만, GPRAMA는 기관 임원의 주요 목표에 대한 분기별 데이터 중심의 검토, 소수의 높은 우선순위 기관 목표 및 기관 간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였음

■ 이 연구는 데이터를 통해 각 성과관리 법안의 개혁을 확인하고자, GAO¹⁵⁾에서 실시한 GPRA(클린턴, 2000년), PART(부시, 2007년), GPRAMA(오바마, 2012년·트럼프, 2017년¹⁶⁾)에 대한 연방정부 관리자의 설문지를 데이터로 사용하였음

■ 종속변수는 성과정보(Performance Information, 이하 PI)이며 독립변수로는 성과관리 개혁, 기관이념, 고위공무원단, 권한 등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함

- 성과정보(PI): 관련 프로그램/운영/프로젝트의 경우 성과 측정에서 얻은 정보를 다음 활동에 참여할 때 어느 정도 사용합니까?
- GPRA의 성과관리 개혁¹⁷⁾(Performance Management Reforms, 2000): 지난 3년 동안 다음의 GPRA 관련 활동에 직접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PART의 성과관리 개혁(2007년): 어느 수준까지 PART 관련 활동에 참여하였습니까?
- GPRAMA의 성과관리 개혁(2012년, 2017년): 각 성과관리 개혁의 질문은 기관 간 목표 수립에 참여 여부, 기관의 최우선 목표를 수립하는 데 관여 여부,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운영·프로젝트는 (분기별 성과) 검토의 대상이 되어 왔는지 여부 등
- 기관 정치적 성향(Agency Ideology): 보수(1 = 보수, 0 = 진보 및 중도), 진보(1 = 진보, 0 = 보수 및 중도)

15) GAO 조사는 「최고재무책임자법」에 따라 적용되는 24개 기관의 관리자의 계층화된 무작위 표본을 기반으로 함. 설문조사 웨이브에 걸쳐 응답률은 67~70% 사이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는 정부 전체 관리자 수에 일반화 될 수 있음. 사용가능한 관측치의 수는 약 2,000명임

16) 2017년 조사의 경우 2016년 11월, 2017년 3월에 실시가 되었음

17) 각 성과관리 개혁의 질문은 0~4점으로 이루어져 있음

2. 연구 결과 및 함의

- 첫 번째 회귀분석¹⁸⁾의 경우, 동일한 모델로서 GPRAMA와 PART의 서로 다른 성과 개혁과 관련한 정치적 성향 효과를 보여줌
 - GPRAMA의 경우 기관이 보수·진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PART의 경우 진보적 기관이 보수·중도적 기관보다 성과정보 데이터 사용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두 번째 회귀분석의 경우, 조사연도별로 각각의 결과를 따로 보여주며 이는 첫 번째 회귀분석보다 직관적이지는 않지만, 가정이 더 적고 GPRA 결과를 보여주는 데 의의가 있음
 - GPRA는 성과정보 데이터 사용에 영향을 주지만, 해당 영향은 기관의 정치적 성향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PART는 보수적 기관의 관리자들은 더 많은 성과정보(PI)사용을 보고하는 반면, 진보적 기관의 관리자들은 비교적 적은 성과정보사용을 보고하며, 기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 GPRAMA는 성과정보 데이터 사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기관의 정치적 성향에는 영향이 없었음

- 마지막으로 각 성과관리 법안이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주는지 평균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를 통해 확인함
 - GPRA의 경우, 개혁이 보수·진보와 같은 정치적 성향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PART는 보수/중도기관에서는 개혁을 확인하였지만, 진보기관의 경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GPRA와 GPRAMA는 기관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 없이, 성과정보 데이터를 사용하여 개혁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PART는 행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개혁 부문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
 - PART와 같이 행정부가 주도하여 성과관리를 진행할 경우, 기관 이념에 따라 개혁에 당파적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 불신하는 기관들의 의혹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는 개혁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줌

18) 2007년, 2012년·2017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PART 및 GPRAMA의 결과를 보여주며, GPRA는 2000년 데이터에서 5개의 변수가 누락되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참고자료

Alexander Kroll & Donald P. Moynihan, “Tools of Control? Comparing Congressional and Presidential Performance Management Reform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021, pp. 599~609.

(작성자: 이은솔 연구원)



Ⅲ. 국가계약 동향

CONTENTS

1. 국가계약 연구 동향

Ⅲ. 국가계약 동향

1. 국가계약 연구 동향

지속가능한 채굴 계약에 대한 지침

- OECD(2020) -

〈보고서 추천 배경〉

- ◆ 역사적으로 채굴 산업은 경제성장의 주요 동인이었으며 선진국의 높은 인건비와 엄격한 환경적 기준 등으로 인해 자원 채굴 및 생산은 미국 및 유럽에서 점점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게 됨
- ◆ 많은 국가들이 광업, 석유, 가스 산업에 대한 복잡한 계약 체결을 위해 협상하고, 개발도상국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불이익에 직면하기도 함
- ◆ 따라서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채굴 계약을 위해 자원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8가지 원칙을 제공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촉진하고 협상 중 논쟁을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함

- 지속가능한 채굴 계약(durable extractive contracts)에 대한 지침은 OECD 개발 센터(OECD Development Centre)가 제안한 것으로 지역사회와 지속가능한 계약의 이익 및 손실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원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원칙을 제공함
 - 지침은 8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계약 내용을 대중에게 설명함으로써 이해 관계자 사이의 긴장 및 갈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줌
 - 또한 개발도상국과 채굴 계약을 체결하는 투자자가 지속적이고 공평하게 상호 유익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통 기준을 제공함
- 본 지침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OECD 개발 센터 및 개발 공동체 전체에 중요한 성과를 보여줌
 - 첫째, 프로젝트 주기 및 다양한 시장 상황에 걸쳐 정부, 투자자, 지역사회를 위한 공정 거래

협상 방법에 대한 원칙을 제시함

- 둘째, 제시된 원칙은 56개국의 공동 합의를 반영하는 도구로 다양한 국가가 동등하게 상호 이익의 문제를 논의하고 동시에 개발에 혁신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셋째, 원칙은 정부, 산업, 시민사회, 전문가 및 국제기구의 노력의 결과로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대화를 통해 공동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함

1. 배경

- 이 지침은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지속가능한 채굴 및 생산 계약의 내용과 협상에 대한 원칙을 제공하여 추후 당사자 한쪽의 일방적인 계약 재협상에 대한 분쟁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지침에 제시된 기본 원칙은 자원보유국 정부(host government)와 투자자가 다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투자를 유치하고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관계를 구조화함
 - 기대치를 조정하여 합의된 목표를 향해 의견을 수렴함
 - 중요한 상황 변화를 수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제공함
 - 신뢰를 구축하여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위험 요소를 줄임
 - 계약의 양측 당사자를 위해 자원 개발의 이점을 공정하게 공유하고, 공평하고 지속가능하며 상호 유익한 계약을 통해 자원 개발의 가치를 최적화함
- 천연자원 기반 개발에 관한 OECD 정책 대화(OECD Policy Dialogue on Natural Resource-based Development)의 일부로 개발된 정책 도구와 이 지침의 기본 원칙은 상호 보완적임
 - 정책 도구는 높아진 부패 위험을 확인,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도구와 전문가 지식 및 조언을 통해 계약 협상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포함함
 - 기본 원칙은 OECD 다국적 기업 지침(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및 OECD 기업책임경영에 대한 실사 지침(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에 반영된 것처럼 기업책임경영에 대한 원칙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고 있음
- 지침에 제시된 기본 원칙은 중요한 순서로 나열된 것이 아니며, 상호작용하면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 이는 모든 계약 당사자에게 이익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약 관계의 특정 측면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함임

II. 지속가능한 채굴 계약에 대한 기본 원칙

1. 기본 원칙 I

- 지속가능한 채굴 계약은 채굴 분야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원보유국 정부가 수립한 장기 비전 및 전략에 따라 조정됨
 - 자원보유국 정부는 먼저 천연 자원 부존(natural resource endowments)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과 국가 및 지역 개발 목표(이하 비전)를 정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하 전략)을 결정해야 함
 - 명확한 책임을 위해 비전의 소유권은 정부가 갖고 있어야 하지만, 전략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는 보다 포괄적이어야 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고 그들의 관심 및 요구사항을 이해해야 함
 - 비전을 수립하는 정부의 고유한 역할을 침해하지 않고 민간 이해관계자들이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달성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됨
 - 현실적으로 투자 범위 또는 투자자의 전략적 이익과 자원보유국 정부의 장기 비전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음
 - 따라서 투자자들은 정부의 장기 비전 및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자원보유국 정부의 역할임
 - 자원보유국 정부는 잠재적으로 상충되는 내부 목표를 조정하여 장기 비전 실행에 대한 일관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보장해야 함
 - 장기 비전은 정부의 목표를 알려야 하며 단기 이익보다 장기 이익이 크도록 투자자의 계약 조건에 이를 적절히 반영시켜야 함

2. 기본 원칙 II

- 지속가능한 채굴 계약은 프로젝트의 수명 주기 전체에 걸친 현실적인 예상치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보유국 정부, 투자자 및 지역사회 간의 투명하고 건설적인 상업적 관계 및 파트너십에 기반을 둠
 - 채굴 계약의 협상은 자원보유국 정부와 투자자의 장기적 관계의 시작점이며, 공동 목표를 달

- 성하기 위해 상호 참여, 투명성 및 책임, 각각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필요함
- 지역사회와 자원보유국 정부를 위한 프로젝트의 재정, 사회 및 경제 개발 혜택에 대한 너무 높거나 비현실적인 예상치는 관리 및 조정되어야 함
 - 예상치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탐색 단계에서 특히 중요함
 - 자원보유국 정부와 투자자는 프로젝트의 수명 주기 전체에 걸쳐 실현 가능한 이익, 지속가능성, 지역사회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대해 명확하게 의사소통할 책임이 있음
 - 예상치가 충족되지 않거나 논의조차 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원보유국 정부와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함
 - 첫째, 프로젝트 수명 주기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이슈를 확인함
 - 둘째, 이해관계자들의 개방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협의 및 참여를 위해 적절한 법적 또는 규제적 환경을 조성함
 - 해당 국제법 또는 국내법에 따라 계약은 지역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이를 계획과 의사결정 과정에 적절히 통합해야 함

3. 기본 원칙 III

- 지속가능한 채굴 계약은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원주민의 특별 권한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자원보유국 정부, 투자자 및 지역 사회의 이익과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함
 -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채굴은 자원 고갈을 야기함. 따라서 자원보유국 정부와 투자자 모두 유한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동 목표를 지니고 있음
 - 그러나 공정한 재정적 이익과 수입을 얻는 것 외에도 자원보유국 정부는 국가 경제를 위한 개발 우선순위 달성을 위해 다양하고 광범위한 이익 확보를 목표로 함
 - 지역사회는 고용, 용역 및 물품 제공, 인프라 시설 접근 및 기타 지역사회 개발과 같이 채굴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하는 기회로부터 혜택을 얻어야 함
 - 채굴 계약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함
 - 첫째, 다양한 개발 목표를 추구하여 자원을 개발하려는 자원보유국의 이익
 - 둘째, 지역의 혜택을 최적화하려는 지역 사회의 이익
 - 셋째, 발생한 위험과 재정 및 조직 자원 분배에 대한 투자자의 보상 필요성
 -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프레임워크는 계약 당사자들의 위험 및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 및 지역 사회가 이를 공유하여 지속가능한 장기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
 - 불확실성 및 위험 요소는 채굴 프로젝트 수명 주기의 모든 단계에 존재함. 위험 요소의 성격

및 정도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며 프로젝트에 따라 다름

- 또한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의 경제 상황, 시장 및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함
-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은 위험과 기회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의 각 단계를 거칠 때에도 마찬가지임
- 따라서 위험과 기회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이를 위해 프로젝트의 실제 위험 및 인지된 위험에 대한 중요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함

4. 기본 원칙 IV

■ 지속가능한 채굴 계약은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결과를 포함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자원 개발의 전 가치(full value)를 최적화하고자 함. 이를 위해 프로젝트의 환경, 건강, 안전 및 사회적 영향을 확인 및 관리하고 자원보유국 정부와 투자자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정의함

- 지속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전 가치의 개념은 투자의 경제적 실행 가능성(viability)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를 포함함
- 요소 간의 연계성을 확립하고 적절한 계획을 통해 인프라 설계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그러나 동시에 이에 대한 비용을 자원보유국 정부, 개발 은행 또는 기부자가 부담하지 않는 한, 증가하는 비용이 자원보유국 정부의 세입 감소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절충안을 찾아야 함
 - 프로젝트의 각 단계에서 자원보유국 정부는 우선순위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투자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 절충을 해야 할 수도 있음
- 자원보유국 정부는 규제를 통해 잠재적인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확인하여 프로젝트의 수명 주기 동안 이를 적절히 처리하고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음
 - 국내법 및 규제는 환경적, 사회적 영향 평가가 정부 또는 투자자가 포함된 전문가에 의해 구체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규정해야 함
 -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굴 계약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음
 - 실제 및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
 -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예방 및 완화 계획을 고안 및 수행
 - 예방, 완화 계획 및 시정 대응에 대한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도록 적절하고 투명한 재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5. 기본 원칙 V

- 지속가능한 채굴 계약은 재정 및 기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프로젝트의 수명 주기 전체에 걸쳐 예상 성과, 주요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구축하도록 협상하는 것을 기반으로 함
 - 자원의 가치(양, 품질, 가격 및 비용)에 대한 정보의 부재 또는 제한은 자원보유국 정부와 투자자가 공유하는 이익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침
 - 자원보유국 정부는 투자자가 투자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한 재정 및 타당성 조사에 확정된 데이터가 아니라 투입 비용, 개발할 자원의 양 및 품질에 대한 추정치를 포함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함
 - 자원이 발견, 생산, 판매될 때까지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데이터는 경제적 이익 분배 또는 기존에 예상했던 비용 등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자원보유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여 다양한 상황(물품 가격, 품질, 원가 등의 변동)에서 여러 시나리오 및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자체 재정 모델을 개발하기를 원할 수 있음
 - 석유 및 가스 분야에서는 법률이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투자자들이 입찰하는 절차를 거쳐 많은 계약이 체결됨
 - 이 기준은 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필수 정보를 규제하며 잘 설계된 경매는 경쟁 입찰을 유도할 수 있음
 - 광업 분야에서는 입찰이 덜 일반적이기 때문에 입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매커니즘의 확립이 부족함
 - 자원보유국 정부와 투자자들 사이에 자원, 개발 비용, 생산 등의 적격 추정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 분배 매커니즘 설계뿐만 아니라 계약의 경제적 균형(economic equilibrium)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6. 기본 원칙 VI

- 지속가능한 채굴 계약은 건전한 투자와 사업이 가능한 환경에서 체결되며, 공정하고 명확한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함
 - 광물, 석유 및 가스 자원 개발은 생산 전에 많은 초기 투자를 필요로 하며 긴 리드 타임(lead time), 높은 위험 및 불확실성이 특징임
 - 따라서 투자자가 부담한 위험에 상응하는 공정한 수익률을 확보하는 것은 시장 상황의 변

- 동성에 따라 오랜 기간이 걸림
- 자원보유국의 투자 잠재력을 평가할 때 투자자는 신뢰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고려함
 - 법적 프레임워크의 투명성은 외국 투자자에게 중요한 보호 수단을 제공하며 공익을 위한 자원의 효과적 사용에 도움이 됨
 - 이는 대중에게 자원 수입 및 기타 의무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체결된 채굴 계약에 대한 회계 및 보고 절차를 제공하는 법률 및 규정의 수립 등이 포함됨
 - 정부는 투명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규정을 제공함으로써 불확실성과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OECD 투자 정책 프레임워크(OECD 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잘 만들어진 규정은 효율적인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높은 기준의 법을 보장함으로써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
 - 또한 좋은 규제란 규제가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정적 부담을 간소화하고 규제의 목적을 투명하게 하여 효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것임
 - 정부는 투자자들이 그들의 투자가 불법적으로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계약 집행 및 재산권, 분쟁 해결 절차의 공정성, 예측 가능성, 공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확신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투명성, 청렴성 및 일관성은 양질의 투자를 유지하고 채굴 프로젝트의 연속성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따라서 정부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와 기관 간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행정 절차의 명확성을 보장해야 함

7. 기본 원칙 VII

- 지속가능한 채굴 계약은 해당 법률, 국제 조약 및 지역 조약과 조화를 이루며, 자원보유국 정부가 비재정적 규제 분야를 다루는 법률 및 규정에 진실 되고 비차별적인 변화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법률 또는 규정의 이러한 변화로 인해 투자자가 계약에 따른 중요 의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프로젝트의 경제적 실행 가능성을 저해하는 경우 지속가능한 채굴 계약은 당사자들이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도록 요구함

- 규제 체제가 진화하면서 공공 보건, 안전, 보안, 환경 및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채굴 프로젝트가 충족해야 하는 기대와 요구사항도 지속가능성이 높아짐
-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와 사회정치적 맥락에 대한 적절한 평가는 투자자가 건강, 안전, 사회, 노동, 인권 및 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법률과 규정의 발전을 예상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임
- 비재정적 법률의 변경을 도입할 때 정부는 변경이 프로젝트 비용을 증가시키고 수익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채굴 계약은 비재정적 법률 또는 규정의 변경으로 인해 투자자가 계약에 따른 중요한 의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절차를 제공해야 함
 -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계약 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으며 이는 상호 신뢰 유지 및 지속적 이익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8. 기본 원칙 Ⅷ

- 지속가능한 채굴 계약은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적, 재정적 목표와 일치하고 잠재적 위험, 이익 및 국가 상황을 고려하여 투자자와 자원보유국 정부 간 재정적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는 재정 시스템에 의해 뒷받침됨
- 법률에서 정의된 반응성 조건(responsive terms) 및 프로젝트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 재정적 이익 분배를 조정하기 위한 계약을 포함한 재정 체제는 채굴 계약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며 어느 한 당사자가 재협상하고자 하는 동인을 줄임
 - 채굴 분야에서 재정 체제는 일반 세법, 부문별 법률 및 프로젝트별 계약 협정의 결합을 의미하며, 이는 다음과 같음
 - (1) 양허 협정(concession agreements)
 - (2) 생산 공유 계약(production sharing contracts)
 - (3) 위험 서비스 협정(risk service agreements)
 - 여러 법률 및 계약을 사용할 때 자원보유국 정부는 일반적인 조세 법률과 함께 그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고려해야 함
 - 정부는 주어진 국가 상황에 대해 재정 수단과 조건의 최적 조합을 결정하며 이는 정부의 자금 조달 및 지출, 최적의 자원 회수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함
 - 재정 수단 및 조건의 선택은 국가가 이를 이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받음
 - 에너지 및 광업부, 환경부, 재무부, 조세 정책 및 행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기관의 긴밀

- 하고 지속적인 협력은 올바른 정책 균형 및 성공적인 수행에 중요함
- 채굴 프로젝트는 여러 경제적 주기(economic cycles)를 통해 운영되며 호황을 경험할 수 있지만 경제적 부담 및 손해도 경험할 수 있음
 - 따라서 자원보유국 정부는 정부와 투자자 모두의 위험을 줄이고, 계약 협상 시 불완전한 정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 법률 또는 계약에 정의된 반응성 재정 조건(responsive fiscal terms)은 여러 수익성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재정적 이익 분배를 공평하게 조정하여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고 계약의 지속성에 기여함
 - '반응성'의 의미는 재정적 수익성이 높으면 정부의 몫이 자동으로 증가하고 수익성이 낮으면 자동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함
 - 법률 또는 계약에 반응성 재정 수단 및 조건이 없으면 다양한 이유로 정부와 투자자로부터 재정 조건 변경에 대한 압력이 발생할 수 있음
 - 재정 불안정은 지질학적, 정치적, 기술적 위험 외에도 투자자가 고려하는 주요 위험 중 하나이며, 이는 전반적인 투자 환경에 대한 투자자의 관점과 투자 기회 평가에 영향을 미침
 - 예를 들어, 물가가 상승할 때 정부가 재정 수단과 조건을 자주 변경하는 경우 추가적인 재정 위험이 발생함
 - 이에 대응하여 투자자는 위험을 보상받기 위해 더 높은 프로젝트 수익을 요구하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투자자가 재정적 또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다고 인식한 경우,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재정 안정화 조항(fiscal stabilization clauses)을 포함시킬 수 있음
 - 그러나 자원보유국 정부는 협상을 통해 필요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기술적, 재정적 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포함하여 경쟁 입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화 조항을 꼭 포함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
 - 정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재정 안정화 조항은 특정 주요 재정 조건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세율에 안정성을 적용함으로써 일반적인 조세 정책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될 수 있음
 - 천연 자원 개발로 인한 정부의 이익은 재정적 이익보다 더 광범위하며 새로운 인프라 개발, 고용 창출, 물품 및 용역의 지역 조달, 지역사회 프로젝트 등을 포함함

참고자료

OECD, “OECD Development Policy Tools: Guiding Principles for Durable Extractive Contracts,” 2020, <https://www.oecd.org/dev/Guiding-Principles-Durable-Extractive-Contracts-2020.pdf>, 검색일자: 2021. 10. 22.

(작성자: 이아름 연구원)

◆ 편집

장우현 재정성과평가센터 소장(편집총괄)
임소영 재정성과평가센터 선임연구원(실무총괄)
강경민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변이슬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소준영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심태완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이아름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이은솔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이응준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이형석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KIPF 재정성과평가 동향과 이슈

| 2021년 겨울(Vol. 8 No. 4) |

2021년 12월 27일 인쇄

2021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표), <http://www.kipf.re.kr>

등 록 세종, 바00027

인 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ISSN 2635-7127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